

---

충남 청년지원정책 신청률 제고를 위한  
정책 개선안

---

2021년 11월



충청남도의회  
CHUNGCHONGNAM-DO COUNCIL

# 제 출 문

## 충남도의회 의장 귀하

본 보고서를 “충남 청년지원정책 신청률 제고를 위한 정책 개선안”에 관한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1년 11월

연구기관 : 한국행동경제학연구소

연구책임자 : 정태성 (한국행동경제학연구소 대표)

# 충남 청년지원정책 신청률 제고를 위한 정책 개선안

최종보고서

2021. 11.

연구책임자 : 정 태 성(한국행동경제학연구소, 대표)

참여연구자 : 조 남 운(한국행동경제학연구소)

어 수 진(한국행동경제학연구소)

임 지 은(한국행동경제학연구소)

보조연구원 : 문 규 범(한국행동경제학연구소)

이 지 원(한국행동경제학연구소)

# 요약문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충남도는 지역 내 고용률과 실업률 해소를 위한 일자리 정책을 시작으로 청년 인구를 유지하거나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청년정책 개발
- 청년지원정책의 법적 근거인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2021년 현재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 8개 추진 계획을 바탕으로 세부 정책사업 이행
  
- 지속가능한 청년정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와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가 필요
  
- 청년 인구의 정책 참여도와 활용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청년들의 신청률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개선 방향 도출 목적

### 2. 연구과제의 설정과 연구 방법

- 정책 실행에 대한 현황 파악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사업 운영 개선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진행된 본 연구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각 세부 과정에서 진행된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고, 충남지역 청년정책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

연구 방법	추진 과제
문헌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동향</li> <li>◆ 국내외 청년정책 및 관련 현황</li> <li>◆ 정책 및 청년정책의 효과와 관련된 선행 연구</li> <li>◆ 행동경제학 관련 이론과 전략</li> </ul>
심층 인터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의 실행 과정 및 성과에 대한 실무자와 청년의 인식</li> <li>· 청년 문제와 청년정책에 대한 인식</li> <li>· 실행 과정과 성과에 대한 평가</li> <li>· 개선 방향에 대한 아이디어</li> </ul>
온라인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의 실행 과정 및 성과에 대한 실무자와 청년 인식 파악</li> <li>· 청년정책에 대한 인지도</li> <li>· 청년 정책에 대한 체감도</li> <li>· 정책 도구 및 메시지프레임을 활용한 실험 연구</li> </ul>

## 제2장 문헌 연구

### 1. 청년과 청년 정책

-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고 시행된 ‘청년기본법’에서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
- 충청남도를 포함한 주요 지방자치단체 청년기본조례에서 ‘청년’의 연령 범위를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정의
- 우리나라의 청년정책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청년실업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 차원의 청년 일자리 및 고용에 대한 대책을 중심으로 추진
-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 여성, 장애인, 외국인 등으로 대상을 구분하여 일자리 정책을 제안하고 있으며, 청년 대상의 6가지 분야의 청년 정책 마련
- 2017년 5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치.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설치하고, 2017년 10월 일자리위원회와 관계 부처는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제시
- 최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하여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을 발표

- 정책수단의 다양한 속성을 설명하고 정책수단을 효율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정책수단을 분류해 볼 수 있음
- 정책도구를 분류하는데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Salamon (2002)이 제시한 정책수단의 특징은 강제성과 직접성
  - 강제성: 경제적 도구(예: 청년내일채움공제, 주거비 지원 등)와 정보 도구(예: 온택트 교육, 진로컨설팅 등)로 구분
  - 직접성: 청년정책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실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성과 실용성을 고려하여 정부기관(예: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준정부기관(예: 일자리진흥원) 혹은 민간기관(예: 사업체)에 의해 실행되고 있는지에 따라 구분

## 2. 청년정책의 사례

- UN은 각 나라들이 청년과 관련된 정책을 펼치고 이행하는 데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으로 청년 11개 지표를 개발
- 청년을 위한 입법, 청년 훈련 정책의 필요성, 비공식 교육에 대한 관심, 청년을 위한 예산, 청년을 위한 정보제공, 다층적 정책의 수립, 청년을 위한 연구, 사회에 대한 참여 보장, 정부 기관들을 관통하는 공동집행, 청년지원 기구 설립 등 포함
- 유럽연합을 포함한 해외 주요 국가의 청년 정책의 방향성과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정책 방향성	주요 전략 사업 내용
EU	청년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들의 사회 참여 활동 촉진 (주체적 측면, 능동적 측면)	창조와 문화, 청년과 세계, 사회통합, 자발적 활동, 건강과 웰빙, 참여, 고용과 창업, 교육과 훈련
스웨덴	정부와 노동계에서 노동시장 중심의 프로그램과 교육-직업간 미스매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규 프로그램 도입	국영직업알선소의 노동시장 프로그램: 청년에 대한 노동보장, 새출발 직업, 실습, 자영업운영지원 등 교육-직업 간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신규 대책: 견습일자리제도, 교육계약제도
영국	1970년대 '청년고용기회사업'의 도입 1998년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 청년뉴딜 정책: 보조금 취업, 자원봉사, 환경보호사업단활동, 전일제 교육 또는 훈련을 선택적 프로

	청년뉴딜정책시행 2012년 니트(NEET)족	그램 시행 - 니트족 대상 국가정책: 인턴십 제도, 청년계약제도, 견습직 지원금
독일	하르츠(Hartz) 개혁 경기침체의 심화와 실업률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포괄적인 방안으로 시행, 이후 수정되며 진행됨.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고용지향적 정책, 직업훈련지향적 정책, 근로시간 지향적 정책  일자리 기반 학습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과 고용간의 연계 이원화도 제제도
일본	직업지도와 직업체험, 졸업자 취업 지원, 프리터(Freeter)의 정규직화, 직업적 자립지원을 사업을 추진	JOB 카페: 상담,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스톱서비스 센터  트라이얼고용: 청년구직자에게 일정기간 트라이얼(trial) 고용을 실시 지역청년 서포터 스테이션: 전문가 상담실시 및 직장 체험, 실습 등 다양한 취업지원메뉴 제공 직업능력 형성 프로그램: 기업현장, 교육기관에서 직업 훈련 실시 후 평가결과를 기록하여 직업능력 증명서를 교부하는 제도.

□ 지역 상황에 맞는 청년정책 실행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국내 지방자치단체들은 각 지방의 현실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이행

○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계획 및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음

자치단체	기본 계획	주요 전략 사업 내용
서울	'2020 청년 정책' 사회, 경제, 주거, 청년 활동의 4가지 환경 요인을 구분 각 상황을 진단, 청년의 삶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제시	일자리: 청년 뉴딜 일자리 확대 설자리: 청년활동지원 사업 살자리: 1인 가구 맞춤형 공공주택 놀자리: 청년활력공간 조성 및 지원
경기	청년문제를 사회 구조적, 경제적 문제로 인식 청년들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삶 보장을 위한 행정력 집중	참여: 청년참여 정책추진 도약: 청년 역량 강화 자립: 입직과 안정 향유: 생활의 질 향상
부산	청년에게 혜택을 제공하여 인재들의 지역유출방지 및 지역활성화 일자리, 주거, 생활안정, 문화, 참여 분야	일자리와 문화, 금전적 지원 생활 안정에 포함이 되는 청년 건강지킴이 프로그램
대구	청년 상시 일자리 창출과 청년이 주체가 되는 청년 활동 지원, 청년 생활안정 도모	취업지원, 창업지원, 교육, 주거복지, 소통 생활 안정, 문화예술
광주	청년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 청년들의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기회와	일자리, 복지, 문화, 지역인재 구분

	규칙, 정책으로 제도적 환경조성	
전남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희망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 전남형 일자리 생태계 구축 미래 선도인력 양성: 국제 경쟁력을 갖춘 청년 인재 육성 꿈꾸는 청년 문화: 창조와 다양성 감성복지: 행복한 복지 공동체 실현
전북	‘일할 맛, 창업할 맛, 즐길 맛, 누릴 맛, 참여할 맛 나는 전라북도’ 일자리, 창업, 문화 및 복지 분야에 대한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세부 과제 도출	일자리: 일자리 창출 및 고용기회 확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통합 지원 체계 구축 창업: 교육 및 정보 교환을 통한 역량강화 등 문화: 문화 향유의 활성화 및 문화 창조 지원 복지: 생애주기별 복지 수요 맞춤 돌봄, 취업과 주거에 초점
제주	‘활기찬 제주 청년, 더 밝은 제주 미래’ 청년활동기반 마력 및 청년의 삶의 질 향상 소득, 자립, 참여 및 활동, 문화 및 여가	안정적 소득확보: 청년 창업, 취업기회 확대 및 안정적 고용환경 제공 자립: 사회진입 시기까지 다양한 방식의 포괄적 지원 참여: 청년의 지역사회 참여, 청년 네트워크 지원 문화/여가: 문화예술 향유체감 증대 및 다양한 창작 활동 지원

### 3. 청년정책에 관한 선행 연구

- 청년정책과 관련된 선행 연구는 주로 청년고용정책의 맥락에서 진행
- 청년의 정책참여가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사회 경제적 환경도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작용
- 청년 일자리를 포함한 다양한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것과 더불어 청년들이 정책을 어떤 과정을 통하여 수용하는지에 대한 이해와 이에 따른 정책의 실행 과정에 대한 파악 필요
- 청년의 정책참여는 인지, 이해, 정책신청 및 활동, 수혜 등의 순차적 단계를 거쳐 진행
- 정책대상자인 청년의 정책 리터러시(literacy)가 정책참여 의향에 중요한 역할 담당

#### 4. 공공정책의 행동경제학 적용

- 행동경제학은 경제학과 심리학의 접점에서 인간의 의사결정 행동을 다루는 융합 학문
- 정책이 실제로 시민 생활에 적용이 되었을 때 정책의 효과들이 나타나는데, 이를 사전에 실험 방식으로 검증해 봄으로 그 결과를 예측하고 그 효과성을 높이는데, 행동경제학적 접근이 도움
- 기존 경제학은 물질적 유인(incentive)을 포함한 다양한 유인을 인간 행동의 동기로 간주하였으나 행동경제학에서는 물리적 유인이 아닌 심리적 요인이 새로운 유인(incentive)으로 그 역할을 대체할 수 있음을 제시
- 공공정책 분야에 적용가능한 행동경제학 관련 이론은 다음과 같음

	편향 유형	의미
1	휴리스틱	소비자는 복잡한 선택, 정보에 직면했을 때 시장 결과나 과학적 수치를 참고하여 선택하기보다 기존 경험, 휴리스틱에 따르는 결정
2	보유/현상 유지 효과 (전망 이론)	소비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새롭거나 유용한 선택보다 기존의 선택을 유지
3	닳 내림 (Anchoring)	소비자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보에 닳을 내려(앵커링) 그것을 중심으로 결정
4	프레이밍(Framing)	소비자는 정보의 내용 못지않게 정보 제시 방식에 영향
5	프라이밍 효과 (Priming effect)	소비자는 먼저 본 정보에 의해 떠올려진 개념으로 인해 이후에 접한 정보를 해석할 때 영향 미디어에 노출된 정보에 영향
6	과신	소비자는 특정 행동 결과에서 평균적 결과보다 자신은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
7	쌍곡선 할인/근시	소비자는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 사이에 인지적 표상 차이가 있어서 가까운 것의 비용을 높게 평가하는 근시안적 판단
8	시간 불일치	최초의 결정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최적이지 않게 될 수 있으며, 소비자는 단기 총동과 장기 이익 사이의 갈등에 직면
9	공정함	소비자는 자신의 만족뿐만 아니라 다른 소비자나 공급 측면의 공정함에 관심을 가짐
10	사회적 규범	소비자는 특정 사회나 그룹의 가치, 행동, 기대에 유도됨

- 배순영(2016)에서 발췌하여 수정작성 함

### 제3장 충청남도 청년정책의 추진 현황 및 진단

#### 1. 충남의 청년 현황 및 정책 현황

- 2020년 충청남도 청년 인구(15~39세)는 62만 776명으로 충청남도 전체인구의 29.3%이며, 2018년~2020년에 걸쳐 최근 3년간 감소세 진행
- 30~34세를 제외한 청년 연령층에서 순유출이 발생하였으며, 순유출 규모가 큰 연령대는 20-24세로 3,176명이 순유출
- 2020년 충청남도 청년고용률은 전년도 대비 3.1% 낮으며, 청년 실업률은 0.3% 높게 나타남
  
- 충청남도는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인프라를 구축
- 일자리만이 아닌 청년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주거와 복지 및 문화 부분에서도 세부과제 마련

분야	추진계획	세부 내용	성과 지표
일자리	청년일자리 확대 및 역량강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 충남형 지역균형발전 청년고용사업, 충남 스타트업 기업 청년채용장려 지원, 직업계고교생 지역정착 취업, 지역 대학의 충남 인재 취업, 사회적 경제 청년활동가 및 청년 도제 육성 등	일자리 창출 (지원 대상자 인원)
	청년 창업 활성화 및 내실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도시청년 초보 농부 훈련 농장, 경영 실습 임대농장, 경쟁력 제고 사업,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등), 청년 창업가 양성(브랜드 디딤돌 지원, 지역마을 창고 활용 창업지원 등), 청년 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 등	
주거	청년 주택 공급 확대 및 전월세비용경감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건설형, 매입형) 공급 및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충남 대전·서울 학사관 및 청년 세어 하우스 운영,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지원 등	주거 비용 경감자 수 (지원 대상자 인원)
교육	교육기회 보장으로 청년의 미래역량 강화	미래인재육성지원, ICT이노베이션 충남 스퀘어 조성, 청년농업인 육성, 친환경청년농부 교육훈련 청년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등	참여인원 (지원 대상자 인원)
복지 문화	사회출발자산 형성 및 청년건강증진	청년희망계좌 개설,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주거지원 통합서비스, 퇴소종결아동 자립 정착금 지원, 청년층 건강개선(신체, 정신 등) 서비스 제공 등	수혜인원 (지원 대상자 인원)
	청년 문화 활동기반 강화	청년크리에이터 양성, 청년예술가 육성,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지원, 1인 콘텐츠 및 청년창작자 콘텐츠 지원 등	
참여 권리	청년 주도적 정책결정 및 지역청년정책 균형발전	위원회 청년위원 참여 확대, 청년 정책참여기구 청년네트워크 운영 등	정책 반영률 (반영/발굴건수)
	청년친화적 정책 전달 체계 운영 및 청년·지역 공동체 활성화	청년 온라인플랫폼 '다이나믹 충남청년'서비스 개시, 청년 활력 공간 청년LAB 조성, 충남형 청년 깎이어 프로그램 등	

## 2. 청년지원 정책에 대한 실무자 및 청년 심층 인터뷰

□ 현재 충남도에서 실행하고 있는 청년지원 정책에 대한 상황 이해와 정성적 진단을 위해 실무자와 수혜대상인 청년과 일대일 심층 인터뷰(In-depth interview)를 진행

□ 심층 인터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주제	실무자	청년
문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질의 일자리 부족</li> <li>· 구인-구직자 간 기대수준 차이</li> <li>· 청년 생활의 정서적 안정감 부족</li> <li>· 청년 인구의 부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내 일자리 선택에 대한 한계</li> <li>· 타 지역 생활의 현실적 문제 직면</li> </ul>
정책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문제를 복합적으로 고려한 지원정책 마련됨</li> <li>· 일자리 등 실질적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에 대한 인지 낮음</li> <li>· 자신과의 관련성, 필요성 부족</li> </ul>
정책 소통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기관과의 소통</li> <li>· 대중매체(지역 신문 및 방송 활용)</li> <li>· SNS 및 기관 홈페이지 활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기관 채널의 접근성 낮음</li> <li>· 참여 전 구체적 내용파악 어려움</li> </ul>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기본조례 연령 적용</li> <li>· 실제 참여 연령은 20대가 많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인(학과교수, 선배, 친구 등)을 통해 참여 신청</li> <li>· 구인구직 전문사이트를 통해 인지</li> </ul>
성과 및 만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량·정성적 평가</li> <li>· 목표 인원 달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적 혜택과 전문가를 통한 교육 등에 만족도 높음</li> <li>· 만족도 높음, 주변 지인 추천의향 있음</li> </ul>
개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성적 평가 강화</li> <li>· 지역 상황에 맞는 탄력적 운영</li> <li>· 정책 도구별 균형있는 참여 유도</li> <li>· 청년 맞춤형 홍보방안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체적이고 직관적인 내용의 홍보 필요</li> <li>· 수료증과 같은 가시적 혜택(스펙)</li> </ul>

## 제4장 온라인조사

### 1. 연구 방법

□ 청년의 정책에 대한 인지 정도와 청년정책에 대한 체감도를 파악하고 청년의 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충남 청년지원정책에 대한 참여와 관련된 반응 파악

○ 전문조사회사를 통해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진행

- 피험자는 전문조사에 등록된 패널로서, 총 407명을 대상으로 실시

- 정책수단 3유형(경제 도구와 정보 도구) X 메시지 프레임 3유형(사회적 선호, 속성-현재, 목적-미래)의 집단 간 요인설계를 사용

## 2. 결과

- 응답자들은 일반적인 정책과 청년정책에 대한 관여도는 높으나, 현재 이행 중인 청년정책에 대한 인지 정도는 낮았으며, 참여하지 않은 주요 이유는 ‘잘 몰라서’로 나타남
- 정책 도구가 경제적 도구인지, 정보 도구인지에 따라 반응의 차이가 없었으나, 메시지 프레임 3가지 유형 중 정책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속성 프레임일 때 긍정적인 반응
- 제시된 정책이 응답자 자신과 관련성이 있거나 가깝게 느끼는 ‘지각된 거리감’이 정책사업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

## 제5장 결론

### 1. 시사점

- 청년정책 분야는 일자리와 구직과 관련된 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분야의 사업에서 점차 주거와 복지 등 청년의 생활 전반의 영역으로 확대
- 고령화나 지역사회 내 청년 인구 규모의 변화 따라 청년으로 규정하는 연령의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
- 청년들이 정책사업에 참여를 위해서는 정책 리터러시를 높이는 것이 필요
- 청년들이 청년정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심적 유인(incentive)이 필요

## 2.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

- 청년정책 사업을 청년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해당 구성원들에 따라 맞춤형하여 정책지원 사업을 제시
  
- 소규모 군 단위에서 시행되는 청년정책 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영
  
- 청년들의 정책 리터러시 수준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
  - 충남도의 청년정책을 청년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채널을 활용
  - 청년의 정책 리터러시 제고 차원에서 정책사업의 내용과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을 구체적이고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전달
  
- 장기적 관점에서의 성과 관리
  - 단기적인 청년정책의 신청률과 더불어 취업과 근속, 지역 정착과 같은 장기적 관점에서의 성과 관리가 필요
  - 정성적 진단, 진행 과정에서의 모니터링 등 다각적인 성과 관리

# 목 차

<b>제1장 서론</b> .....	<b>1</b>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과제의 설정과 연구 방법 .....	2
가. 연구과제의 범위와 내용 .....	2
나. 연구 방법 .....	2
<b>제2장 문헌 연구</b> .....	<b>4</b>
1. 청년과 청년정책 .....	4
가. 청년의 정의 .....	4
나. 청년정책의 현황과 특징 .....	6
1) 청년정책 관련 법규 .....	7
2) 청년정책의 현황 .....	8
다. 정책수단의 분류 .....	16
2. 청년정책의 사례 .....	18
가. 해외 사례 .....	18
나. 국내 사례 .....	21
다. 국내 청년정책(일자리 창출) 우수 사례 .....	23
1) 부산: 2020년 종합대상(대통령상) .....	23
2) 전라북도: 부문별 대상(국무총리상, 광역) .....	24
3) 경상남도 : 최우수상 .....	24
3. 청년정책에 관한 선행 연구 .....	25
가. 청년정책 효과에 관한 연구 .....	25
나. 정책 리더러시의 의미와 역할 .....	27
4. 공공정책의 행동경제학 적용 .....	29
가. 공공정책에 행동경제학 적용의 필요성 .....	29
나. 행동경제학의 주요 이론 .....	31
다. 행동경제학을 이용한 공공정책의 대표적 사례 .....	34

<b>제3장 충청남도 청년정책의 추진 현황 및 진단</b>	<b>38</b>
1. 충남의 청년 및 정책 현황	38
가. 충남 청년 현황	38
나. 청년정책 현황	40
다. 도내 청년의 청년정책(일자리)에 대한 인식	42
2. 청년지원 정책에 대한 실무자 및 청년 심층 인터뷰	44
가. 연구 방법	44
나. 실무자 심층 인터뷰 결과	46
1) 사회적 관점에서의 청년문제와 정책 방향성에 대한 인식	46
2) 담당 정책별 계획 및 실행의 적절성	47
3) 정책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소통 활동	49
4) 성과 평가 방식	51
5) 한계점 및 개선 방안	53
다. 청년 심층 인터뷰 결과	55
1) 청년의 일자리와 주거에 대한 인식	56
2) 정책에 대한 인식	56
3) 청년 정책사업 참여 계기와 만족도	57
4) 현재 청년 정책사업의 소통 방식에 대한 평가	59
5) 개선 방향에 대한 아이디어	60
라. 심층 인터뷰 결과의 정리	61
<b>제4장 온라인 조사</b>	<b>65</b>
1. 연구 방법	65
가. 실험설계 및 피험자	65
나. 실험 절차	68
다. 온라인 조사 질문지 항목	70
라. 응답자 특성	72
2. 결과	73
가. 정책에 대한 인식	73
나. 정책에 대한 인지 정도	74

1) 전체 .....	74
2) 충남 .....	76
다. 정책 참여경험 여부 .....	77
1) 전체 .....	77
2) 충남 .....	78
라. 정책 도구, 메시지에 대한 효과 .....	79
1) 정책 도구 및 메시지 프레임과 개인특성 변수의 다변량 검증 .....	80
2) 정책 도구 및 메시지 프레임의 주 효과 .....	83
3) 정책 인지 및 참여 여부에 따른 반응 차이 .....	85
마. 반응 변수의 참여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 .....	86
1) 전체 .....	86
2) 메시지 프레임별 회귀분석 결과 .....	87
<b>제5장 결론 .....</b>	<b>90</b>
1. 요약 및 시사점 .....	90
2.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 .....	94
<b>참고 문헌 .....</b>	<b>97</b>

## 표 목차

<표 2-1> 자치단체별 청년 연령 비교 .....	5
<표 2-2> 청년 일자리 정책 현황 .....	9
<표 2-3> 일자리위원회 및 관련 부처 합동 10대 중점 과제 .....	11
<표 2-4> 청년정책 기본계획 정책 방향 및 과제 .....	12
<표 2-5> 서울시 청년정책의 발전 과정 .....	13
<표 2-6> 청년기본법 주요 시책과 청년정책 분류 .....	15
<표 2-7> 각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 정책수단의 비교 .....	16
<표 2-8> Salamon (2002)이 제시한 정책수단의 특성 .....	18
<표 2-9> 해외 주요 국가의 청년정책 방향성 및 사업 내용 .....	20
<표 2-10>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기본 계획 및 사업 내용 .....	22
<표 2-11> 시스템 1과 시스템 2의 비교 .....	32
<표 2-12> 정책 관련 대표적 행동 편향 10가지 .....	34
<표 2-13> 정책수단과 행동경제학의 접점 .....	35
<표 3-1> 청년인구 규모 .....	38
<표 3-2> 2019년 청년인구의 이동 .....	39
<표 3-3> 청년의 고용률 및 실업률 .....	39
<표 3-4> 2021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안) .....	41
<표 3-5>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한 인지도 및 만족도 .....	42
<표 3-6> 우선 지원 필요 사업 .....	43
<표 3-7> 심층 인터뷰 참여자(실무자) .....	44
<표 3-8> 심층 인터뷰 참여자(청년) .....	45
<표 3-9> 실무자 및 청년 인터뷰 결과 요약 .....	62
<표 4-1> 실험 처치물 .....	67
<표 4-2> 실험 처치물 유형 별 피험자 수 .....	68
<표 4-3> 메시지 프레임 실험 처치 조작체크 결과 .....	69
<표 4-4> 측정 항목 및 신뢰도 .....	71

<표 4-5> 충남 응답자의 거주지 .....	72
<표 4-6> 응답자의 성비 및 연령 구성 .....	73
<표 4-7> 정책 및 청년정책에 대한 태도 .....	74
<표 4-8> 지역 간 정책 및 청년정책에 대한 태도 차이 비교 .....	74
<표 4-9> 각 분야 청년정책에 대한 인지도 .....	75
<표 4-10> 충남 청년정책에 대한 인지도(n = 166) .....	76
<표 4-11> 충남 청년정책에 대한 인지 경로(중복응답, n = 140) .....	77
<표 4-12> 청년정책 사업의 참여 여부 .....	77
<표 4-13> 충남 청년정책의 참여 여부 .....	78
<표 4-14> 충남 청년정책의 참여하지 않은 이유(n = 137) .....	79
<표 4-15> 응답자 반응에 대한 기술통계 및 지역 간 점수 차이 검증 .....	79
<표 4-16> 응답자 반응 변수 간의 Pearson 상관계수 .....	80
<표 4-17> Wilks' Lambda 의 다변량 공분산 검증 .....	81
<표 4-18> 다변량 공분산 검증의 개체 간 효과 검증 .....	81
<표 4-19> 정책도구 유형에 따른 응답자 반응 차이 검증 .....	83
<표 4-20> 메시지 프레임에 따른 응답자 반응의 기술통계 및 분산분석 결과 .....	84
<표 4-21> 정책 사전 인지여부에 따른 반응 차이 (충남 N = 166) .....	85
<표 4-22> 정책 사전 참여여부에 따른 반응 차이 (충남 N = 166) .....	86
<표 4-23> 참여 의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87
<표 4-24> 지각된 거리감, 도움인식, 정책지지, 정책 태도의 상대적 영향력 .....	87
<표 4-25> 메시지 프레임별 참여 의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88
<표 4-26> 메시지 프레임별 소비자 반응변수의 상대적 영향력 .....	88

그림 목차

<그림 4-1> 연구 모형 .....65

부록 목차

<부록 1> 실무자 대상 심층 인터뷰 가이드 .....111  
<부록 2> 청년 대상 심층 인터뷰 가이드 .....103  
<부록 3> 온라인 조사 설문지 .....105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진 경기침체와 최근의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이 더하여, 청년층 고용률은 줄어들고 실업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대 고용률은 전 연령층 중 가장 낮은 편으로,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7월 기준 15세 이상 29세의 청년 취업자 수는 398.5 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고용률은 전년 대비 2.8% 증가한 45.5%, 청년 실업률은 7.2% 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고용률과 실업률은 사회적·경제적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충남은 2019년 말 기준 인당 GRDP가 5,240만 원으로 전국광역시자치단체 중 2위를 차지하여 경제지표상 양호한 상태를 보이지만, 특정 지역 인구 편중, 청년 인구의 충남지역 내 남북격차 등의 심각한 불안요인이 존재한다. 2019년 충남의 청년 인구는 70만 6,145명으로 전체의 32.3%이며 전국 단위(32.8%)와 비슷하지만, 청년 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천안시, 38.5%)과 가장 적은 지역(서천군, 19.9%)의 차이가 심하며, 인구이동의 관점에서 충남 전체에서 한 해 동안 청년 4,731명의 순유출이 발생하였다. 청년의 인구는 지역 내 생산성의 불균형이나 고령화 문제 등을 극복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충남도는 지역 내 고용률과 실업률 해소를 위한 일자리 정책을 시작으로 청년의 인구를 유지하거나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청년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고 있다. 충남은 청년지원정책의 법적 근거인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1년 현재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 8개 추진 계획을 바탕으로 세부 정책사업을 이행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청년정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와 그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 충남지역 청년 인구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년지원정책들이 지역 내 청년층의 정책 요구도에 적합하며 균형적 수혜를 제공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하며, 실행되고 있는 청년정책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은 중요하다. 또한, 정

책대상자인 청년들이 정책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청년정책에 대해 느끼는 도움 정도 등 정책 체감도를 파악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청년 인구의 정책 참여도와 활용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청년들의 신청률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청년이 직면한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실행되고 있는 주요 분야의 청년 정책사업을 파악하고, 실무자와 청년 관점에서의 청년정책 사업실행에 대해 정성적 진단을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충남지역 청년정책 운영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2. 연구과제의 설정과 연구 방법

### 가. 연구과제의 범위와 내용

정책 실행에 대한 파악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사업 운영의 개선안을 제안하기 위해 진행된 본 연구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동향과 국내외 청년정책 및 관련 현황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로는 정책 및 청년정책의 효과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적용되고 있는 행동경제학 관련 이론과 전략을 살펴보았다. 세 번째로는 충청남도 청년의 현황 및 정책의 추진 현황을 검토하고, 도내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의 인식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 정리하였다. 네 번째로는 현재 이행되고 있는 정책의 실행 과정 및 성과에 대해 실무자와 청년의 인식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전 단계를 통해 얻은 개선 아이디어와 행동경제학적 관점 적용하여 제시된 개선 방안을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온라인 조사가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각 세부 과정에서 진행된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충남지역 청년정책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 나.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세부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문헌 연구와 심층 인터뷰 그리고 온라인 조사가 진행되었다. 문헌 연구는 청년 및 충남의 사회적·경제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통계자료를 검토하고, 청년정책의 법적 근거가 되는 주요 법령, 정책

동향 관련 자료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정책의 효과와 관련된 학술 연구와 공공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용되고 있는 행동경제학 연구를 공공정책 분야의 맥락에서 검토하였다.

심층 인터뷰는 청년 정책사업 실행의 현장에 있는 실무자와 청년정책대상자 중에서 현재 이행되고 있는 정책사업에 참여한 청년을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심층 인터뷰에서 주로 다룬 내용은 청년문제와 청년정책에 대한 인식, 실행 과정 및 성과에 대한 평가, 개선 방향에 대한 아이디어 등이다.

그리고 온라인 조사는 전문조사회사를 통해 충청도와 수도권 및 광역도시를 제외한 도 단위 지역(예: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온라인 조사를 통하여 청년정책에 대한 체감도와 청년정책 참여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실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실험 처치물을 활용한 실험 연구를 포함하였다. 또한, 온라인 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청년이 청년정책에 참여할 의향을 갖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영향력의 정도를 분석하였다.

## 제2장 문헌 연구

### 1. 청년과 청년정책

#### 가. 청년의 정의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청년정책의 대상자는 청년이다. 사회의 구성원 중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여성정책’ 이나 ‘외국인정책’, ‘장애인정책’ 과 달리, 청년정책의 대상인 청년은 그 개념이 상대적으로 규정될 수 있다. 청년은 연령을 중심으로 대상 집단을 구분하는 것이나 국가나 시대에 따라 그 대상에 대한 정의가 달라서, ‘청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는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고 필요한 과정이다.

청년정책의 대상인 청년을 구분하는 나이의 범위는 보편적으로 3가지 기준에 의해 구분된다(김기현 외, 2020). 먼저는 일반인들이 인식하고 사회적으로 통용이 되는 청년의 상한·하한 나이를 파악하고, 이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간을 분석하는 것이다. 예컨대, 교육을 마치는 시기, 취업하는 시기, 결혼하거나 부모가 되는 등 생애주기에 따른 과업이 시작되고 다음 단계의 과업으로 넘어가는 시점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기준은 신체 발달에 따른 것으로, 청소년 나이 규정이 사춘기에 따라 정의되는 것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청년을 구분하는 나이의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 즉, 농경사회와 근대사회, 현대사회에서의 생애주거나 신체 발달 수준은 달라지고 있으며, 이는 일반인들이 청년 나이에 대해 갖는 보편적인 인식에도 영향을 준다. 이에 청년 나이의 범위를 정의하는 것은 생물학적 기준으로 하기보다 사회적 나이(social age)로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김기현, 2017)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청년 나이의 사회적 정의는 법으로 규정되기도 한다. 이는 청년을 비롯한 다양한 연령대의 생애 과업에 따라 필요한 법적 책임과 권리를 명문화하는데 필수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법에 규정된 청년 나이는 사회적 동의에 기반한 생애주기 접근이며, 법적으로 정당화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법으로 규정된 청년 나이의 범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나라 법령에서 ‘청년’을 명시하고 해당 나이를 규정한 초기의 법은 2009년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sup>1)</sup>이다. 해당 법에서 ‘청년’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또한,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청년의 일자리와 관련된 조례에서는, 앞서 언급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청년의 연령을 15세 이상 29세 이하라고 하며(예: 서울, 광주, 세종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15세 이상 34세 이하’ 혹은 ‘15세 이상 39세 이하’(예: 경북, 경남 등)로 정의하기도 한다. 충청남도는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시행 2021.04.30.)’에서는 ‘충청남도에 주소를 가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람’, 즉,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년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20.12.30.)’에서는 ‘15세 이상에서 39세 이하’를 청년으로 명시하고 있다

<표 2-1> 자치단체별 청년 연령 비교

자치단체	하한	상한	법규
서울	19	39	청년 기본 조례
부산	18	34	청년 기본 조례
대구	19	39	청년 기본 조례
인천	19	39	청년 기본 조례
광주	19	39	청년 기본 조례
대전	18	39	청년 기본 조례
울산	19	34	청년 기본 조례(청년기본법 바탕)
제주	19	39	청년 기본 조례
세종	19	34	청년 기본 조례(청년기본법 바탕)
경기	19	34	청년 기본 조례
강원	18	39	청년 기본 조례
충북	19	39	청년 기본 조례
<b>충남</b>	<b>19</b>	<b>39</b>	<b>청년 기본 조례</b>
전북	18	39	청년 기본 조례
전남	18	39	청년 기본 조례
경북	19	39	청년 기본 조례
경남	19	34	청년 기본 조례

- 자치법규 정보시스템(www.elis.go.kr, 2021.09.06.)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854호, 2021. 6. 29

그리고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고 시행된 ‘청년기본법’<sup>2)</sup>에서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나이를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 이에 충청남도를 포함한 주요 지방자치단체 청년기본조례에서 ‘청년’의 연령 범위를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보고 있다<표 2-1 참조>. 최근 시군 단위의 인구 현황과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위해 청년 연령의 확대(예: 18세 ~ 49세)와 관련된 논의도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청년의 나이는 15-39세로 규정하고자 한다. 이는 충청남도 ‘청년기본조례’ 및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두 가지 청년의 연령 범위를 함께 고려하고, 관련 통계자료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를 중심으로 관련 통계 지표를 살펴보았다.

#### 나. 청년정책의 현황과 특징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우리 사회의 주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로 청년 실업률이 11.4%까지 급증하였다가 2000년대 초 7.5%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후 세계 금융 위기 등으로 한국 청년 실업률은 다시 급증하게 되었다(이상아, 이승윤, 2018). 특히, 2019년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였으며, 청년들은 일자리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결혼, 출산 등을 포기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이를 일컫는 ‘N포세대’라는 용어도 등장하였다.

이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청년 실업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청년고용 상황에 대한 점검과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마련된 청년정책은 일자리를 포함한 청년들의 문제를 현실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차원의 방안을 마련해 오고 있다. 청년정책 사업은 청년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일자리, 문화, 복지, 교육, 참여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박춘섭, 2019). 특히, 일자리와 관련된 정책의 방향성은 적극적으로 실업률을 감소시키는 방안과 안정된 일자리를 확보하여 장기적인 고용 전망을 확대할 수 있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OECD, 2013). 또한,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한 기존 취업과 창

2) 청년기본법, 법률 제16956호, 2020. 2. 4., 제정

업에 대한 지원뿐만이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춘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1) 청년정책 관련 법규

청년의 고용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는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관련 법규를 마련하였다. 2004년 ‘청년실업해소특별법<sup>3)</sup>’을 시작으로, 2009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마련하였다. 특히,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긴급하게 마련한 것이나, 이를 계속 연장해왔다(김형주 외, 2020). 이에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법 마련이 필수적이었다. 이에 ‘청년기본법’은 2020년 2월 제정되었으며,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발표되었으며(2020년 12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의 중점과제들이 추진될 예정이다(정세정, 류진아, 2021).

청년기본법의 제1장 제1조에서 청년기본법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제시된 청년기본법의 목적은 “이 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다. 즉, 청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갖는 권리와 책임과 함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게 갖는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청년지원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청년의 개인적 삶과 사회에서의 평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서 당면한 청년 문제 해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정세정, 류진아, 2021). 청년기본법의 제17조부터 제24조에는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고용촉진과 일자리 질 향상, 청년창업 지원, 주거 및 복지, 금융, 문화 및 국제협력 지원 등의 다양한 차원에서 청년이 직면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청년과 관련된 법체계 마련이 진행됨에 따라, 자치단체 최초로 서울시는 2015년 1월 ‘청년기본조례<sup>4)</sup>’를 제정하였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심각한

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약칭: 청년고용법> 법률 제17866호 일부개정 2021.01.05. (한시법 2023.12.31.까지 유효)

취업난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청년 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서울시의 책무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례에서는 청년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고용을 확대하는 것과 더불어 주거 및 생활의 안정, 문화 활성화 등 관련된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 시설 확충 및 운영에 대한 근거들을 세부 조항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후 다른 광역 및 지역자치단체에서도 해당 지역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자치단체의 지원을 위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에서 ‘청년’을 구체적으로 그 나이를 규정하여 명시한 것은 오늘날 청년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약자(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전통적 사회정책의 변화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청년은 사회의 경제 활동을 담당하던 경제적 시민으로 주로 인식되었으나, 오늘날 청년은 정부와 사회에서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사회적 시민으로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변금선, 김승연, 박민진, 이혜림, 2020). 이러한 맥락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취업을 지원하는 정책에서 생활과 교육, 문화 등 다차원적 삶의 영역을 포함하게 되었다.

## 2) 청년정책의 현황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청년정책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청년실업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 차원의 청년 일자리 및 고용에 대한 대책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1997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기업은 신규 채용보다 경력직 중심의 채용을 진행하거나 저임금의 비정규직을 확대하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감소하였으며, 이에 청년취업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었다(박춘섭, 2019).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여러 차례 일자리와 고용중심의 대책을 발표하였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로써 관련 법을 제정하였으며, 이후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 청년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 등 여러 차례 청년고용 대책을 발표하였다(임형섭, 2016). 일자리 정책의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 여성, 장

4)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시행 2015. 1. 2.] [조례 제5812호, 2015. 1. 2., 제정]

애인, 외국인 등으로 대상을 구분하여 일자리 정책을 제안하고 있으며, 청년 대상의 6가지 분야의 청년 정책을 펴고 있다<표 2-2 참조>.

<표 2-2> 청년 일자리 정책 현황

분야	시책	사업 목적	대상
장기근속 및 자산형성 지원	청년채용 특별 장려금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만15세~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이라도 지원가능)
	청년내일 채용공제	청년들의 중소기업 신규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	신규 취업 청년 및 5인 이상 중소기업·중견기업
정보제공	온라인 청년센터	중앙·지자체 청년정책·공간 정보 및 정책안내·상담을 제공하는 홈페이지(www.youthcenter.go.kr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한 고용서비스 제공	
	오프라인 청년센터	지역별 청년친화 공간을 활용해 정책 연계를 강화하고,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정책 체감도 및 역량 강화	청년센터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광역시, 기초 불문)
진로탐색	대학 일자리 플러스센터 운영	대학 내 진로지도 및 취·창업 지원 기능의 공간적 일원화, 기능적 연계 등 원스톱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지원으로, 대학의 취·창업 지원역량 강화 및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 지원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및 산업대학,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취업 지원 역량을 갖추고 있는 대학
직무능력 키우기	일학습병행	독일·스위스식 도제제도를 한국의 실정에 맞게 설계한 “도제식 교육훈련제도” 기업이 청년 등을 선채용 후 NCS기반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학교·공동훈련센터의 보완적 이론교육을 통해 숙련형성 및 자격취득까지 연계하는 새로운 현장중심 교육훈련제도	해당 분야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청년층(청년 구직자, 재직자 등)을 주요 대상으로 산업계·기업 수요를 반영한 훈련을 제공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	만18-34세 청년 구직자 및 재직자

일경험 기회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청년들에게 다양한 직업세계 및 산업현장에 대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한 중소기업·강소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 및 노동시장으로의 조기입직 유도	(참여자) 만15세-34세 미취업 청년 1만명 (운영기관) 유·무료직업소개자,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청년고용촉진 비영리 법인 등
해외 취업	해외취업 지원	해외취업 희망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연수과정(K-Move 스쿨), 해외취업정보제공, 취업알선 등을 통해 해외취업으로 연계 지원	
기타	평등한 기회/공정한 과정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 확산	공공·민간의 채용과정에서 출신지·가족관계·신체적 조건(키, 체중, 외모)·학벌 등 편견이 개입되어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인적사항은 요구하지 않고, 실력(직무능력)을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을 확산 채용에서 평등하게 기회가 보장되고, 공정한 과정을 통해 누구나 당당하게 실력으로 경쟁할 기회 보장	

- 자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young/list.do>)를 참고

현 정부에서는 2017년 5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음을 명시하고, 2017년 10월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는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통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 구현이라는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향 아래 일자리 인프라 구축, 공공 및 민간 일자리의 양적 확대, 질 개선 및 맞춤형 지원 등을 주요 분야로 한 10대 중점과제 및 100개 세부 추진과제가 제시되었다<표 2-3 참조>.

<표 2-3> 일자리위원회 및 관련 부처 합동 10대 중점 과제

분야		중점과제	세부 추진과제 (총 100개)
일자리 인프라 구축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	12개
		일자리 안전망 강화 및 혁신형 인적자원 개발	10개
일자리 창출	공공	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	7개
		혁신형 창업 촉진	6개
	민간	산업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서비스업 육성	19개
		사회적경제 활성화	6개
		지역일자리 창출	10개
일자리 질 개선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없는 일터 조성	5개
		근로여건 개선	9개
맞춤형 일자리 지원		청년·여성·신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16개

제3차 일자리위원회(2017.10.18.)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자료 참고(www.jobs.go.kr)

또한, 최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하여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을 발표하였다. 이는 청년기본법에 명시된 청년의 권리와 책무를 구현하기 위해 청년5)정책 기본계획을 수립(2020년 12월)하였다. 해당 청년정책의 내용에서는 기존 일자리 중심의 청년정책에서 청년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생활에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사회적 정책으로 확장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생애주기 관점에서 청년은 당면한 현실의 과업을 이행해야 하면서도 미래를 대비해야 하며, 청년에 포함되는 하위 연령에 따라 정책에 대한 수요에 차이6)가 있을 수 있다는 것과 포스트 코로나19(Post COVID-19)와 4차산업혁명, 기후 변화 등에 대응한다는 큰 방향성 아래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 청년이 만들어가는 미래’라는 비전 아래 5대 정책 방향 및 중점과제를 제시하고 있다<표 2-4 참조>.

5) 적용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의 대한민국 국민 및 국가·자치단체이며, 연령은 타 법령·조례에 청년기본법과 다르게 규정할 경우 예외적 적용이 가능함

6) 일자리위원회의 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에서는 19-24세: 교육(학자금), 25-29세: 취업(양질의 일자리), 30-34세: 결혼 및 독립(주거·자산) 등으로 연령 구간별 정책의 수요 차이 설명함

<표 2-4> 청년정책 기본계획 정책 방향 및 과제

정책 방향	중점과제
일자리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 청년 창업 활성화 및 내실화 청년의 일터 안전망 강화 공정채용 기반 구축·직장 문화 개선
주거	청년 주택 공급 확대 청년의 전월세 비용 경감 고시원·반지하 거주 취약청년 집중 지원 청년 친화형 주거모델 보급
교육	고른 교육기회 보장 청년의 미래역량 강화 교육-일자리연계 강화 온택트 교육기반 구축
복지·문화	사회출발자산 형성 및 재기 지원 청년건강 증진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참여·권리	정책결정 과정에 청년 주도성 확대 청년정책 추진기반 마련 및 내실화 청년친화적 정책 전달체계 확립 청년 권익보호 및 청년교류 활성화

- 일자리위원회(2020.12)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자료 참고(www.jobs.go.kr)

앞서 살펴본 청년정책과 관련 법을 통해 청년문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997년 경제 이후 직면한 청년실업과 고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자리 중심의 정책이 마련되고 시행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표면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일자리만이 아니라 청년이 일상적인 삶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안전망으로서 청년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청년기본법과 청년정책이 펼쳐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청년의 실업 문제를 포함한 청년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체는 개인과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 역시 포함될 수 있다.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들도 각 지역의 청년과 관련된 사회적 어려움을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정책으로 해결하고자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한다(부기철, 2020).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은 지역별로 고용 및 실업의 양상, 고용시장 상황들이 다르고 독립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허만형, 2021).

전술한 바와 같이, 청년의 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역 차원에

서의 고용정책의 필요와 제도 마련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정책 마련과 실행의 법적 근거를 위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근거하여 청년고용촉진에 관련된 청년기본조례를 각 자치단체에서 제정하였다(조진우, 김기현, 2016). 이를 바탕으로 한 청년 고용정책은 지역별 급여수준, 산업의 구조 등의 노동시장을 고려하여 지역을 중심으로 마련되었다.

지역고용정책은 지역 단위에서 해당 지역의 노동시장 상황과 필요에 기반하여 시행하는 정책이다(Bartik, 1991 - 이상아, 이승윤, 2018에서 재인용). 고용의 유지와 안정 및 확대, 실업자에 대한 생계보조 및 재취업 등과 관련된 노동시장 및 노동복지 정책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한다(전명숙, 2010). 구체적으로, 지역 단위의 고용정책은 지역의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한 일자리 창출(Job creation)과 교육 및 훈련 투자(Investment in education and training) 그리고 일자리를 희망하는 청년과 기업 간의 일자리 매칭 서비스(Better matching service) 등으로 지역 노동시장의 역량과 지역 개발을 위한 정책들이 진행될 수 있다(OECD, 2011). 정책을 추진하고 실행하는 주체가 자치단체일 때 정책의 예산과 정책의 내용을 해당 지역에 맞게 조정할 수 있으므로, 지역 단위의 정책은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다(전명숙, 2010).

<표 2-5> 서울시 청년정책의 발전 과정

구분	법과 제도 변화	주요 청년정책	전달체계
청년정책 형성기 (2011.10 - 2014.06)	청년 일자리 기본조례 제정	미래 혁신 일자리 발굴 청년고용 교육, 훈련 정책 추진	청년일자리팀 신설 청년허브 신설 청정넷 활동 시작
청년정책 제도화기 (2014.07 - 2018.06)	서울시 청년기본조례 제정	2020 서울형 청년보장 발표 청년 활동 지원 사업(청년수당)실 시	청년정책담당관 신설 청년의회(청정넷) 청년활동지원, 무중력지대, 교류센터 설치
청년정책 발전기 (2018.07 - 현재)	청년기본법 제정 및 시행 청년 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청년자치정부 출범 청년자율예산제 도입	청년청 신설 청년의회를 청년시민회의로 확대 자치구 청년센터 개관

- 출처: 정세정, 류진아(2021)에서 발췌하여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또한 사회가 변함에 따라, 고용문제 해결을 주요 목적으로 한 정책에서 청년들의 권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지역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과 더불어, 청년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자립을 위한 기반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은 포괄적인 내용을 반영하게 되었다(부기철, 2020). 이러한 변화는 서울시 청년정책의 발전 과정에 나타나고 있다<표 2-5 참조>. 2011년 마련된 서울시의 청년정책은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속해서 발전되어 가며 운영되고 있다. 초기의 서울시 청년정책은 일자리 정책 위주였으나 전국 최초로 ‘청년기본조례’를 제공하며 청년에 대한 종합지원계획을 발표하였고, 최근에는 청년의 사회적 참여 강화하고 청년의 공공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청년 관계망을 확대하였다(정세정, 류진아, 2021).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오늘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인 청년정책의 법적 근거가 되는 ‘청년기본법’에는 제4장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 내용에서 청년정책의 분야를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7조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제18조 창업 지원, 제19조 능력개발 지원, 제20조 주거, 제21조 복지증진, 제22조 금융생활 지원, 제23조 문화활동, 제24조 국제협력 등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사업을 분류해 볼 수 있다. 청년정책의 체계성에 대한 연구(변금선 외 2019)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행되고 있는 청년정책 사업을 일자리, 교육, 주거, 참여와 권리, 생활 총 5가지의 대분류로 구분하여 그 하위의 11가지의 중분류를 두고 청년정책의 사업을 분류하고 있다. 이를 청년기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야를 함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2-6 참조>.

<표 2-6> 청년기본법 주요 시책과 청년정책 분류

청년기본법 시책	청년정책 분류		
	대분류	중분류	비고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질 향상	일자리	취업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창업지원		창업 지원	청년전용창업자금
능력개발지원	교육	교육, 연수, 실습	국가장학금 확대 (기숙사제외)
		교육비	
주거지원	주택 공급	주택공급	청년 전·월세 지원확대 (기숙사 포함)
	주거비	주거비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참여·권리	참여·활동	청년참여플랫폼운영
문화활동 지원			청년고용정책 참여단 운영
국제협력 지원		권리	
권익증진			
복지 증진	생활	건강	건강삼당지원 서비스
금융생활지원		소득자산	청년희망키움통장
		금융	신용평가 완화

- 변금선 외(2019) 연구에서 발췌하여 수정

중앙정부의 청년기본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청년기본조례를 바탕으로 실행되고 있는 청년 취·창업 지원사업, 교육 프로그램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사업들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Policy tools) 또는 정책도구(Policy instruments) 이다(최하예, 황성수, 2018). 청년정책과 관련된 정책수단은 일자리 중심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수단에서 점차 청년의 전반적인 생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정책수단이 활용되고 있다.

지방자치 단체에서 이행되고 있는 청년정책의 유형을 살펴본 연구(최하예, 황성수, 2018)에 따르면, 청년정책 사업은 고용, 복지, 문화/예술, 거버넌스, 교육 등 5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복지는 청년들의 주거, 소득 및 금융, 그리고 건강사업을 중심으로 한 정책수단이며, 교육은 단기적인 취업이나 창업을 위한 교육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평생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포함되기도 한다. 그리고 문화 분야의 정책수단은 청년들의 공동체 활동과 이에 필요한 공간을 지원하며, 더불어 청년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활동

과 정책 활동 등 사회적 참여를 지원하고자 하는 참여 분야로 구분된다.

지방자치단체는 대체로 고용과 복지 분야에 비중을 두고 있다. 그러나 각 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최하예, 황성수, 2018).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은 복지 분야의 정책수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청년과 청년 일자리가 집중된 서울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고용문제와 더불어 청년의 생활 보장을 위한 청년지원사업인 ‘청년수당’ 등 복지 분야의 정책사업 또한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전라북도과 전라남도는 청년정책 중 고용 분야의 정책 과제가 39.1%, 43.6%로 해당 자치단체의 정책과제 내, 그리고 전체 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전라북도는 20대 인구는 큰 폭으로 감소하는 반면, 40대 이상의 인구는 증가하고,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 특색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 분야의 정책과제 비중이 높은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최하예, 황성수, 2018).

<표 2-7> 각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 정책수단의 비교

(단위: %, 정책과제 수 비중<sup>7)</sup>)

자치단체	고용	복지	문화/예술	거버넌스	교육	합계
서울특별시	35.0	40.0	15.0	10.0	-	100.0
부산광역시	35.7	32.2	7.1	17.9	7.1	100.0
대구광역시	40.0	14.3	20.0	20.0	5.7	100.0
광주광역시	22.2	25.0	22.2	27.8	2.8	100.0
대전광역시	33.3	33.3	16.7	16.7	-	100.0
경기도	35.4	27.1	18.8	8.3	10.4	100.0
충청북도	23.4	32.4	15.6	19.5	9.1	100.0
전라북도	39.1	20.0	17.1	15.2	8.6	100.0
전라남도	43.6	19.2	21.8	7.7	7.7	100.0
전체	35.0	24.8	17.7	15.2	7.3	100.0

- 최하예, 황성수(2018) 연구의 <표 14>(p.90)를 발췌하여 작성

#### 다. 정책수단의 분류

정책수단은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 특성에 따라 구분해 볼 수 있다. 사회가 변함에 따라 정부도 다양한 방식으로 정책을 이행하게 되었으며, 정책의

7) 해당 비중은 정책수단의 예산 비중이 아닌 과제 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도구의 형태는 광범위하게 발전하였다. 이에 따라 정책수단의 다양한 속성을 설명하고 정책수단을 효율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정책수단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자 하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연구자들은 정책수단이 갖는 특성들을 설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수단을 분류하고 유형화하였는데,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그 특성과 기준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면, Howlett (1991)과 Vedung (1998)은 정책도구의 자원(resource approach)이 갖는 특성에 따라 재정, 조직, 법적 권위 등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Bardach (1980)는 강제성의 정도에 따라 강제집행 (enforcement), 유도 (inducement), 혜택 제공 (benefaction)으로 분류하였다. 특히, Salamon (2002)는 정책수단이 갖는 다양한 속성을 광범위하게 설명하면서 정책수단을 4가지 차원 (예: 직접성, 강제성, 자동성, 가시성 등)을 제시하고<표 2-8 참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도구를 13가지(예: 직접 정부, 공기업, 정부보험, 정보제공, 세금, 부과금, 세금지출, 바우처 등)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Vedung(1998)는 정부가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제한하는 것부터 목표 행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강제력을 행사하는 규제 도구(stick-몽둥이), 경제적 대가를 제공하는 경제적 도구(carrot-당근), 도덕적 설득을 시도하는 정보 도구 (sermons-설교)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분류법보다 단순화되었으면서도 포괄성을 갖춘 분류법이라 할 수 있다(전영한, 2007).

정책도구를 분류하는데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Salamon (2002)이 제시한 정책수단의 특징 중 강제성과 직접성이다(전영한, 2007). 강제성은 정부가 목표한 공중들의 행동을 끌어내기 위해 강제력을 가하는 정도의 연속선 상에서 정책수단을 구분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Vedung(1998)의 정책수단 분류모형에서 제시한 규제 도구(몽둥이-stick), 경제적 도구(당근-carrot), 정보 도구(설교-sermons)는 연속성의 의미를 내포한 강제성을 범주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직접성은 정책과 관련된 사업의 실행 주체와 관련된 속성으로, 정책도구의 성격에 따라 정부조직, 준정부조직, 민간조직 등 정책사업의 권한, 재정 및 집행이 어떤 조직에 의해 실행되는지에 따라 정책도구를 구분하는데 적용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책수단의 강제성과 직접성은 정책도구의 선택과 그 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에서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표 2-8> Salamon (2002)이 제시한 정책수단의 특성

차원	의미	예
강제성 (Coerciveness)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정도	고:무상 보조금 저:투자
직접성 (Directness)	사업의 권한, 재정, 집행 등이 하나의 정부 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도	고:보조금, 직접용자 저:대리대출, 보증
자동성 (Automaticity)	새로운 기구를 창설하지 않고 기존의 시장 기제 등을 활용하는 정도	고:투자 저:보증
가시성 (Visibility)	수단에 사용되는 자원들이 정부 예산 과정이나 평가 과정에서 드러나는 정도	고:보조금 저:투자

- 출처: 양혜원 (2010)의 내용에서 발췌하여 정리함

전술한 정책수단의 강제성과 직접성은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수단에 적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세부 사업을 유형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강제성의 차원에서는 경제적 도구와 정보 도구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청년의 삶 전반에 대한 사회적, 제도적 지원을 위한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 등의 청년 정책은 청년 행동을 규제하는 강제적인 정책수단 없이,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인하기 위한 경제적 도구(예: 청년내일채움공제, 주거비 지원 등)와 정보 도구(예: 온택트 교육, 진로컨설팅 등)를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직접성 차원에서는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청년정책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실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성과 실용성을 고려하여 정부기관(예: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준정부기관(예: 일자리진흥원)과 민간기관(예: 사업체)에 의해 실행되고 있는지에 따라 구분해 볼 수 있다.

## 2. 청년정책의 사례

### 가. 해외 사례

청년이 직면한 문제들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에 UN은 각 나라들이 청년과 관련된 정책을 펼치고 이행하는 데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으로 청년 11개 지표를 개발하였다. 여기에는 청년을 위한 입법, 청년 훈련 정책의 필요성, 비공식 교육에 대한 관심, 청년을 위한 예산, 청년을 위한 정보제공, 다층적

정책의 수립, 청년을 위한 연구, 사회에 대한 참여 보장, 정부 기관들을 관통하는 공동집행, 청년지원 기구 설립 등이 포함되어 있다(Atkinson, 2018). 이러한 지표는 기존 청년 정책이 단기적 관점에서 설계되었다는 한계를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자원의 관점으로 청년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을 명문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부기철, 2020).

또한, 유럽연합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직면한 부채위기와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같은 경제위기로 인한 청년 문제 대응을 위해 단기적 대책 및 중장기적 관점에서 청년정책을 마련하였다. 단기적 대책으로는 지역교육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 대출사업과 청년의 고용을 위해 중소기업에서 지출하는 임금 비용을 보전하는 재정지원 등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중장기적 대책으로 직업교육생 교환프로그램(ERASMUS+)을 마련하였는데, 이는 EU 28개 회원국 등에 소속한 청년들이 유럽에서 교육, 연수, 스포츠 등 청년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직업교육 프로그램에 활발한 참여를 촉진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청년 노동력의 수준을 향상하고, 고용기회를 확대하고자 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직업상담소를 증설하고 전반적인 활동을 담당하는 노동행정관을 신설하여 청년 구직자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김시백, 김수은, 이중섭, 장세길, 박가희, 2016). 이러한 EU형 청년정책은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청년과 세계, 창조와 문화, 자발적 활동, 건강과 웰빙, 참여, 고용과 창업, 교육과 훈련 등으로 추진하였다고 할 수 있다(부기철, 2020).

그 외 해외 주요 국가의 청년정책의 방향성과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로 청년정책을 마련한 초기에는 일자리 중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정책을 추진하였다. 스웨덴의 경우, 국영직업알선소의 노동시장 프로그램을 통하여 20세 이상 26세 미만의 구직자를 사업자가 채용할 경우, 정부가 최고 1년간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실업 청년에게 직장실습기회를 부여하여 청년에 대한 노동력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청년 실업률을 해결하기 위한 중점과제로 교육-직업 간 미스매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신규 대책을 포함하였다. 영국은 1970년대 ‘청소년고용기회사업’ 과 1998년 청년뉴딜 정책으로 청년실업문제를 대응하였다. 그리고 2012년에는 일을 하지 않으며, 교육에도 참여하지 않는 16-18세

청년에 대한 대책으로 인턴십 제도, 청년계약제도, 견습직 지원금 등을 시행하였다. 또한, 독일도 실업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3년 하르츠 개혁을 시작하여 고용 지향적 정책과 일자리를 기반한 교육 및 훈련을 고용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오고 있다. 유럽 국가 뿐만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청년고용대책에 취업과 연계된 직업지도와 직업 체험, 졸업자 취업지원, 직업적 자립지원 등을 통하여 청년의 고용과 실업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표 2-9> 해외 주요 국가의 청년정책 방향성 및 사업 내용

	정책 방향성	주요 전략 사업 내용
EU	청년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들의 사회 참여 활동을 촉진 (주체적 측면, 능동적 측면)	창조와 문화, 청년과 세계, 사회통합, 자발적 활동, 건강과 웰빙, 참여, 고용과 창업, 교육과 훈련
스웨덴	정부와 노동계에서 노동시장 중심의 프로그램과 교육-직업간 미스매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규 프로그램 도입	국영직업알선소의 노동시장 프로그램: 청년에 대한 노동보장, 새출발 직업, 실습, 자영업운영지원 등 교육-직업 간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신규 대책: 견습일자리제도, 교육계약제도
영국	1970년대 '청년고용기회사업'의 도입 1998년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청년뉴딜정책시행 2012년 니트족 <sup>8)</sup>	청년뉴딜 정책: 보조금 취업, 자원봉사, 환경보호사업단활동, 전일제 교육 또는 훈련을 선택적 프로그램 시행 니트족 대상 국가정책: 인턴십 제도, 청년계약제도, 견습직 지원금
독일	하르츠(Hartz) 개혁 경기침체의 심화와 실업률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포괄적인 방안으로 시행, 이후 수정되며 진행됨.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고용지향적 정책, 직업훈련지향적 정책, 근로시간 지향적 정책 일자리 기반 학습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과 고용간의 연계 이원화 도제제도
일본	직업지도와 직업체험, 졸업자 취업지원, 프리터(Freeter)의 정규직화, 직업적 자립지원을 사업을 추진	JOB 카페: 상담,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스톱서비스 센터 트라이얼고용: 청년구직자에게 일정기간 트라리얼(trial) 고용을 실시 지역청년 서포터 스테이션: 전문가 상담실시 및 직장 체험, 실습 등 다양한 취업지원 메뉴얼 제공 직업능력 형성 프로그램: 기업현장, 교육기관에서 직업 훈련 실시 후 평가결과를 기록하여 직업능력 증명서를 교부하는 제도.

8) 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교육을 받거나, 일할 의지가 없는 유휴 청년층

## 나. 국내 사례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로 인한 대량실업을 겪으면서 고용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고 관리하기 위해 청년고용 및 실업과 관련된 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지역 상황에 맞는 청년정책 실행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국내 지방자치단체들은 각 지방의 현실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서울은 2012년 서울특별시 청년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작으로 2015년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2020 서울형 청년보장’ 정책을 마련하였다. 서울은 타 지역과 비교하여 일자리와 교육의 기회가 집중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가 청년 인구를 넘어서는 인구 구조변화에도 불구하고 청년 인구가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은 일자리(예: 청년 뉴딜 일자리 확대)를 비롯한 경제(예: 청년활동지원 사업), 주거(예: 청년 1인가구 맞춤형 공공 주택), 청년 활동(예: 청년 활력 공간 조성 및 지원) 등 청년의 삶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경기도 또한 청년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 경제적 문제로 인식하고 청년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참여, 도약, 자립, 향유 등의 전략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수도권 외 부산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자리와 청년의 생활 안정을 위한 청년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각 사업을 이행하고 있다. 다만, 해당 지역의 청년정책은 장기적으로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함으로써 청년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유입을 독려하기 위한 방향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년의 정착은 일자리와 주거, 지역 커뮤니티 형성 및 활동 참여와 관련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전라북도는 ‘일할 맛, 창업할 맛, 즐길 맛, 누릴 맛, 참여할 맛 나는 전라북도’ 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일자리 창출 및 고용기회 확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통합 지원 체계 구축, 교육 및 정보 교환을 통한 역량 강화, 문화 향유의 활성화 및 문화 창조 지원, 생애주기별 복지 수요 맞춤형 돌봄 등 취업과 주거에 중점을 둔 청년정책 사업들을 실행하고 있다. 그 외 국내 자치단체의 청년정책 기본 계획 및 사업 내용을 <표 2-10>으로 정리하였으며, 국내 청년 우수사례를 다음에서 살펴보려고 한다.

<표 2-10>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기본 계획 및 사업 내용

자치단체	기본 계획	주요 전략 사업 내용
서울	‘2020 청년 정책’ 사회, 경제, 주거, 청년 활동의 4가지 환경 요인을 구분 각 상황을 진단, 청년의 삶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제시	일자리: 청년 뉴딜 일자리 확대 설자리: 청년활동지원 사업 살자리: 1인 가구 맞춤형 공공주택 놀자리: 청년활력공간 조성 및 지원
경기	청년문제를 사회 구조적, 경제적 문제로 인식 청년들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안정적 삶 보장을 위한 행정력 집중	참여: 청년참여 정책추진 도약: 청년 역량 강화 자립: 입직과 안정 향유: 생활의 질 향상
부산	청년에게 혜택을 제공하여 인재들의 지역유출방지 및 지역활성화 일자리, 주거, 생활안정, 문화, 참여 분야	일자리와 문화, 금전적 지원 생활 안정에 포함이 되는 청년 건강 지키미 프로그램
대구	청년 상시 일자리 창출과 청년이 주체가 되는 청년 활동 지원, 청년 생활안정 도모	취업지원, 창업지원, 교육 주거복지, 소통 생활 안정, 문화예술
광주	청년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 청년들의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기회와 규칙, 정책으로 제도적 환경조성	일자리, 복지, 문화, 지역인재 구분
전남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희망 일자리 창출: 지속 가능한 전남형일자리 생태계 구축 미래 선도인력 양성: 국제 경쟁력을 갖춘 청년 인재 육성 꿈꾸는 청년 문화: 창조와 다양성 감성복지: 행복한 복지 공동체 실현
전북	‘일할 맛, 창업할 맛, 즐길 맛, 누릴 맛, 참여할 맛 나는 전라북도’ 일자리, 창업, 문화 및 복지 분야에 대한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세부 과제 도출	일자리: 일자리 창출 및 고용기회 확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통합 지원 체계 구축 창업: 교육 및 정보 교환을 통한 역량강화 등 문화: 문화 향유의 활성화 및 문화 창조 지원 복지: 생애주기별 복지 수요 맞춤형 돌봄, 취업과 주거에 초점
제주	‘활기찬 제주 청년, 더 밝은 제주 미래’ 청년활동기반 마력 및 청년의 삶의 질 향상 소득, 자립, 참여 및 활동, 문화 및 여가	안정적 소득확보: 청년 창업, 취업기회 확대 및 안정적 고용환경 제공 자립: 사회진입 시기까지 다양한 방식의 포괄적 지원 참여: 청년의 지역사회 참여, 청년 네트워크 지원 문화/여가: 문화예술 향유 체감 증대 및 다양한 창작 활동 지원

#### 다. 국내 청년정책(일자리 창출) 우수 사례<sup>9)</sup>

2012년부터 고용노동부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신청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심사 후 선정하여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청년정책은 일자리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그중 핵심은 일자리 분야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일자리와 관련된 주요 우수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020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는 대통령상인 종합대상은 부산광역시, 국무총리상인 부문별 대상은 광역자치단체 전라북도와 기초자치단체 광양시가 수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와 전라북도의 사례를 살펴보고, 이와 더불어 청년층 일자리를 창출한 경상남도의 내용을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부산: 2020년 종합대상(대통령상)

부산광역시는 ‘부산형 일자리 사업’과 ‘부산형 창업혁신도시’ 추진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산업 정책을 추진하였다. ‘부산형 일자리 사업’에서는 전기차 산업 활성화와 연계하여 인재육성과 공급 등 상생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민정의 합의를 도출하였고, ‘부산형 창업혁신도시’ 정책사업으로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여 창업공간을 만들고, 멘토링 및 육성 지원 등의 창업 인프라 마련을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정책은 시민의 일자리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대상별 맞춤 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청년정책 로드맵(2019.07)을 토대로 구직부터 채용 및 근속으로 설명될 수 있는 청년의 생애주기에 맞춘 지원을 추진하였다. 이와 더불어 일자리의 질적 개선을 위해 일과 생활 균형을 장려하기 위해 ‘워라벨’ 우수기업을 시상하고 인권노동정책과를 신설하여 고용차별 개선을 위한 전담 조직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부산광역시는 정성적·정량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광역자치단체와 시민이 협력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

9)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2012년부터 지역 및 산업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치단체의 다양한 사업들의 신청을 받아 고용부에서 심사하여 선정함. 본 연구에 포함된 사례는 ‘2020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2020.09.29.)의 수상 관련 보도자료 중에서 선택하여 내용을 정리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했다는 점과 일과 생활의 균형과 고용차별을 개선하는 것 같은 일자리의 질적 개선을 노력한 점이 정성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할 수 있다. 그리고 2019년 청년(15~26세) 고용률이 전년 대비 2.5%p 증가(광역시자치단체 중 2위)하고 여성고용률은 전년 대비 1.9%p 증가(광역시자치단체 중 1위)하는 등 우수한 정량실적을 달성했다.

## 2) 전라북도: 부문별 대상(국무총리상, 광역)

전라북도는 지역의 노동시장을 고려하여 4대 분야를 선정하고 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일자리 정책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먼저는 지역의 미래산업을 위해 전기차 산업을 전북 균산형 일자리로 추진하며, 관련 기업과 투자를 유치하고 연구소를 포함한 기업 등 실제적인 고용을 창출하였다. 두 번째 집중 분야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지원과 지역인재와의 매칭으로, 이를 통해 구인기업을 발굴하고 이를 연계한 채용을 이루어냈으며, 지역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 그 외 소상공인 소득향상 시원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종합지원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대상-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를 추진하면서 특히, 청년의 단계적 지역정착을 위한 Young Stay 4.0 사업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청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직무인턴 확대와 정착 지원 등으로 청년 950명을 지원하는 성과를 내었다.

## 3) 경상남도 : 최우수상

경상남도는 청년 맞춤형 취업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기업-고교 간 취업 연계를 통해 청년층 일자리를 창출한 점에서 ‘청년친화형 스마트산단 잡벨트(Job-belt) 구축 및 기고만장 지원사업’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청년친화형 스마트 산단 잡벨트(Job-belt)는 19세 이하 34세 이하 취업준비생 및 특성화 고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취업준비 공간과 취업 준비교재를 지원하며, 그 외 개인 취업 컨설팅, 모의면접, 기업 멘토링 등의 취업 관련 교육지원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특성화 고고생을 대상으로 한 기고만장 지원사업은 기업의 인사 담당자의 특장을 포함하여 기업 투어와 구인/구직을 매칭시켜주는 프로그램이다.

### 3. 청년정책에 관한 선행 연구

#### 가. 청년정책 효과에 관한 연구

지속적인 청년정책의 성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와 이에 따른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청년정책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는 것은 청년정책의 효과 지표, 그리고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년정책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통하여 청년정책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의 타당성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청년정책과 관련된 선행 연구는 주로 청년고용정책의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청년정책이 청년의 실업 및 고용 등 일자리와 관련된 문제를 바탕으로 먼저 마련되었고, 다른 청년정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이행된 기간이 길었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고용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청년의 취업을 목표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한 연구(성유지, 최재성, 2020)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의 2016년 대졸자 직업이동경로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청년고용정책의 참여유형이 청년대졸자의 취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해당 연구의 결과, 다양한 청년고용정책의 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참여한 청년의 경우, 정책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취업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년이 직업 훈련, 직접 일자리 창출, 공공고용서비스와 관련된 행정 정책 등 다른 유형의 청년정책에 세 가지 이상 참여하였을 때, 비참여자와 비교하여 임시 일용직보다 상용직으로의 취업하는 것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특히, 해당 연구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분석대상 청년 중 35.6%는 청년고용정책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으며, 청년고용정책에 참여한 청년 중 약 80%는 두 개 이상의 청년고용정책에 동시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고용정보원의 2015년 대졸자 직업이동경로 조사를 활용한 연구(서준교, 김용현, 이성근, 2017)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결과와 다소 차이를 보였다. 서준교와 그 동료(2017)의 연구에서는 2015년 대졸자 직업이동경로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청년 일자리 정책이 청년의 취업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해당 정책의 참여 경험과 참여 횟수, 기간, 어떤 유형이든 참여하는 것이 취

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참여 횟수가 많다고 하여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닐 수 있다고 나타났지만, 임금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청년의 일자리와 관련된 청년정책 참여 형태가 청년정책 성과지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취업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사회 및 경제 환경에 따라 청년정책의 실효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허만형, 2021). 광역자치단체의 청년지원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분석한 연구(허만형, 2021)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다양한 청년지원제도는 해당 지역의 청년실업 문제를 개선하는 수준 정도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역의 재정자립도와 경제성장이 청년의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의미한 영향요인이었음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청년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위해서는 청년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대상과 내용, 운용방식에 대한 분석들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즉, 청년 일자리를 포함한 다양한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것과 더불어 청년들이 정책을 어떤 과정을 통하여 수용하는지에 대한 이해와 이에 따른 정책의 실행 과정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ublic Participation(IAP2)은 정책대상의 정책에 대한 참여 수준을 인지(inform), 상담(consult), 관여(involve), 협력(collaborate), 권한(empower)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 참여 수준별로 정책의 효과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정호용, 2020). 이에 따르면, 정책의 이해, 참여·활용, 혜택과 같은 정책 수용의 순차적 단계에 따라 청년정책의 효과는 달라질 수 있음을 추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정호용(2020)은 정책 수용의 순차적 단계(예: 이해, 참여, 활용, 혜택 등)에 따라 청년층의 사회정의 및 계층의식에 관한 인식 형성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책 인지도가 높은 청년일수록 청년 문제 해결과 같은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와 사회의 노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에 대한 조사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청년들의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한 인지도나 인식이 부족하다는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예: 김종욱 외, 2018; 부기철, 2020; 서준교 외, 2017 등). 정부 관계자와의 간담회 등에서 청년들은 청년 정책이 마련되어 있는지조차 모르거나 지원 방법을

몰라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정호용, 2020). 실제로 부산시의 청년정책에 대한 인지도 조사에서 청년 응답자의 73.2%가 활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잘 몰라서’ 라는 응답이 61.6%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활용하지 않은 이유는 ‘자격 조건에 맞지 않아서’ (18.8%), ‘신청 방법이 어려워서’ (9.9%)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또한, 광주광역시 거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청년정책에 대한 인식 조사(부기철, 2020)에서도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진행하더라도 청년들이 해당 정책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청년들이 청년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정책을 타당하게 수립하는 것과 더불어 마련된 청년정책을 청년에게 홍보함으로써 청년의 정책 인지도를 높이고 그 활용도를 이끌어 내는 것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중요한 책무라고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청년들의 정책 수용은 정책인지, 정책참여 및 활동, 그리고 정책 혜택의 수혜와 같은 순차적 단계를 거치게 된다. 실제로 이와 관련한 연구(Roberts et al., 1994; Eriksen & Fallan, 1996)에서는 정책 대상자들의 정책에 대한 지식이 정책 수용을 결정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정책 수용 단계를 고려하면 청년들이 정책사업에 참여하고,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정책을 이해하는 것, 즉, 정보 접근성에의 제약을 해소하여 청년들의 정책 리터러시(literacy)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정호용, 2020).

#### 나. 정책 리터러시의 의미와 역할

정책 리터러시(literacy)는 정책을 독해하는 능력으로, 정책과 관련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역량이라 할 수 있다(윤영석, 윤지웅, 2018). 리터러시(literacy)는 지식 혹은 이해 수준과 관련된 것으로 정책 리터러시는 정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 지(지식 수준)와 이해하고 있는 정도로 볼 수 있다. 이에 관련 연구들에서는 정책 리터러시를 정책 이해도, 정책 인지도 등과 유사한 개념으로 간주하여 관련 용어들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협의의 개념으로써 정책 리터러시는 정책의 내용과 과정을 이해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으며, 광의의 개념으로서는 정책의 내용과 과정을 개인적·사회적 차원에

서 그 영향력을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통찰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이수범, 김남이, 2013).

정책 리터러시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윤영석, 윤지웅, 2018; 정광호, 2008). 우선, 정책 수요자가 높은 수준의 정책 리터러시를 갖추고 있을 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정책 정보를 일상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즉,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전달하는 다양한 정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해하는 능력을 갖춘 정책소비자들은 일상에서 공공서비스를 보다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높은 수준의 정책 리터러시를 갖춘 시민들은 정책의 추진 과정과 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정책의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정책 리터러시를 바탕으로 한 개인의 정책 활용성 제고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정책의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은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볼 수 있다(윤영석, 윤지웅, 2018). 또한, 정책참여 관점에서는 정책 이해도가 낮을 때 제시된 정책의 성과를 낮게 인식하고, 정책에 대한 이해 수준이 높을수록 정책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정책참여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이수범, 김남이, 2013).

정책소비자인 청년을 포함한 시민의 정책참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책 리터러시는 인구통계학적 요인, 정부·시민 활동 요인, 개인의 미디어 활용 및 커뮤니케이션 요인 등에 의해 영향받을 수 있다(윤영석, 윤지웅, 2018; 이수범, 김남이, 2013). 예를 들면, 보편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보다 남성의 정치나 정책 리터러시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윤영석, 윤지웅, 2018). 또한, 시민 활동 경험은 정치나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접할 기회를 확대하고, 이 과정에서 정보를 분석하는 능력이 향상되어 정책 리터러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정광호, 2008). 그리고 시민들은 대중매체를 통해 정책 현황에 대해 접하게 되는데, 사회적으로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해당 사건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미디어 노출이 증가하게 되고 시민들은 관련 사항에 대해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 관련 정치나 정책에 대한 리터러시가 높아지게 된다(정광호, 2008). 이러한 관점에서 정책홍보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부 부처로부터 전달되는 정책홍보 메시지는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불분명하여 정책을 효율적으로 알리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나타나고 있다(이수범, 김남이, 2013).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정책인지 단계에서 정부가 청년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청년들이 정책을 이해하고 접근이 쉽도록 노력해야 한다(서준교 외, 2017; 정호용, 2020). 즉, 우리나라 청년정책이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정책수단 선택을 비롯한 정책 수립의 전반 과정에 충분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정책이 청년에게 전달되는 과정과 같은 전체 진행 체계와 그 효과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정책 활동을 전개할 필요도 있다. 예를 들면, 청년에게 파편화되고 나열식으로 정책과 정책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보다는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을 결합하여 단계적, 혹은 통합적으로 제공하거나 지원할 때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에 명확하게 표기하는 것과 같은 실행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청년정책의 활성화의 관점에서 신청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청년정책 프로그램의 내용, 대상, 운용 방식 등에 대한 진단과 청년들의 인식을 심층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 4. 공공정책의 행동경제학 적용

##### 가. 공공정책에 행동경제학 적용의 필요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목표한 사회정의실현을 위하여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도구들을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도구를 통한 사회정의실현은 정책대상자이자 정책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 시민들의 참여가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서 강제적인 규제나 경제 혹은 정보 도구 등을 적용하고 이행하고 있다.

점차 사회가 발전하고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정책 마련과 실행에 있어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정책 마련 과정에서는 주관적 경험이나 직관보다는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증거기반 정책 수립(Evidence-based policy-making)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박영욱, 박상희, 2020; 배순영, 2016). 그리고 실행과 시민의 정책참여 관점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는 시민들의 반대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도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부나 공공기관의 개입 방식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었다(권남호, 2018).

이러한 맥락에서 행동경제학은 현실적인 정책 마련과 실행에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공공정책의 입안과 시행 및 평가 과정에서 언제나 경제학적 요소가 있으

며, 정책대상자이자 정책소비자의 반응과 행동 또한 중요한 요소이므로 인간의 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행동경제학은 공공정책에 있어서 적용 가능한 학문이라 할 수 있다(권남호, 2018; 박상곤, 2016).

행동경제학은 경제학과 심리학의 접점에서 인간의 의사결정 행동을 다루는 융합 학문이라 하겠다. 전통적인 경제학이 인간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로 인식하며 이를 전제로 인간의 경제 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하고자 한다면, 행동경제학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행동의 이유와 결과를 다루는 심리학을 접목한 학문이다(마정미, 2016). 행동경제학에서 인간은 가능한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닌 제한된 정보처리나 제한된 의지력으로 주어진 한계 내에서 의사결정을 하며, 합리성을 극대화하기보다는 만족을 추구하는 인간임을 전제하고 있다(Simon, 1955). 이 과정에서 행동경제학 연구자들은 인지 심리학의 이론과 개념을 적용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심리 실험 방식을 도입하였다(김진영, 신용덕, 2011; OECD, 2013).

이러한 행동경제학을 공공정책에 적용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의의가 있다. 먼저는, 전술한 바와 같이, 오늘날 정책 의사결정자들이 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정부나 공공기관의 주관적 경험이나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실증에 기반한 정책 타당성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정책이 실제로 시민 생활에 적용이 되었을 때 정책의 효과들이 나타나는데, 이를 사전에 실험 방식으로 검증해 봄으로 그 결과를 예측하고 그 효과성을 높이는데, 행동경제학이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박상곤, 2016; 박영옥, 박상희, 2020; Chetty, 2015).

두 번째는 인간의 행동 의사결정과정 에 대한 인지심리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시민의 정책참여를 위한 행동 변화 전략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박상곤, 2016; Chetty, 2015). 예를 들면, ‘넛지(Nudge)’ 는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을 의미하며, 인간은 항상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므로 강제적이지 않고 사소한 방식으로 목표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음을 설명한다. 즉, 기존 경제학은 물질적 유인(incentive)을 포함한 다양한 유인을 인간 행동의 동기로 간주하였으나 행동경제학에서는 물리적 유인이 아닌 심리적 요인이 새로운 유인(incentive)으로 그 역할을 대체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 심리와 행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행동경제학은 정책설계자들이 의도한 대로 정책대상자들이 행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있어, 정책의 내용이나 물질적 인센티

브를 크게 바꾸기보다 시간이나 장소와 같은 맥락을 고려하거나 정책 정보를 제시할 때의 메시지 프레임을 바꾸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정책대상자들의 행동을 바꾸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박상곤, 2016).

이러한 배경에서 일부 국가들에서는 행동경제학을 바탕으로 정책 개발을 하기 위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면, 영국은 정책 개발에 행동경제학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 조직인 ‘Behavioural Insights Team(BIT)’을 설치하여 경제, 교육, 환경, 세금, 정부 정책과 서비스 등 사회문제나 공공정책에 대한 다양한 영역의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의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Team(SBST)’은 정책과 정책 프로그램에 행동과학적 관점을 적용하여 정부기관에 정책 관련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 나. 행동경제학의 주요 이론

행동경제학은 행동론적 의사결정 이론과 인지 심리학의 주요 개념들을 적용하고 있다. 즉, 합리적 소비자 의사결정과정인 아닌 인간의 비합리적이고 편향된 사고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다음에서 주요 이론과 개념을 하나씩 살펴보고자 한다.

행동론적 의사결정 이론은 인간의 사고 과정을 시스템1(system 1)과 시스템2(system 2)로 구분하고 있다. 시스템1은 직관적이고 본능적인 자동 시스템이라 할 수 있으며, 시스템2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깊은 사고의 숙고 시스템이다. 기존 경제학에서는 그동안 시스템2에 해당하는 숙고 시스템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해왔다. 전통적 관점에서 소비자 의사결정과정은 문제의 인식, 정보탐색, 대안의 평가, 선택, 사후 평가 등과 같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정보처리 과정을 거친다고 설명하며, ‘합리적’이라는 의미는 ‘경제적’이라는 의미와 동일하게 사용된다(Simon, 1955). 한편 행동경제학에서는 인간의 인지행동과 선택에 두 가지 시스템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으며, 자동 시스템으로 기존 경제학에서 설명되지 못한 행동 예측의 오류와 같은 비합리성을 설명하고자 한다(강상목, 박은하, 2019). 즉, 행동론적 의사결정에서는 완전한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이 아니라 제한된 합리성을 바탕으로 적당히 만족스러운 대안을 추구하는 결정(만족화: Satisficing)을 내리게 된다는 것(Simon, 1955)을 인정하고, 설명하고 있다.

<표 2-11> 시스템 1과 시스템 2의 비교

시스템1(자동 시스템)	시스템2(숙고 시스템)
통제할 수 없다.	통제할 수 있다.
노력이 필요없다.	노력이 요구된다.
결합적이다.	연역적이다.
신속하다.	느리다.
무의식적이다.	의식적이다.
능란하다.	규칙을 따른다.

- 출처: 강상목, 박은하, 인간심리의 경제학, 2019, p. 127

행동경제학의 기반이 되는 대표적인 이론 중 하나는 휴리스틱(heuristic)이다. 휴리스틱은 행동론적 의사결정 이론에서 설명하고 있는 시스템1인 자동 시스템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휴리스틱은 인지적 지름길이라고도 표현될 수 있는데, 이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판단을 내릴 때 정보 수집이나 분석과 같은 정교한 인지적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 즉시 이용 가능한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이나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휴리스틱은 큰 노력 없이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빠르게 얻고자 하는 만족화(satisficing)의 방식이라 할 수 있다(마정미, 2016). 즉, 인간은 인지적 구두쇠(cognitive miser)로서 중요한 정보가 없거나 반대로 정보가 너무 많거나 복잡할 때 정보를 제한적으로 활용하여 손쉬운 판단을 내린다는 것이다. 이때 판단에 활용되는 편향(bias)은 기존에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나 판단에 따르는 ‘닻 내림(anchoring)’, 기억이 잘 떠오르는 대상이나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하는 ‘가용성 휴리스틱(availability heuristic)’, 그리고 고정관념에 기초한 ‘대표성 휴리스틱(representative heuristic)’ 등이 있다.

다음으로 행동경제학에서 널리 적용되는 이론은 카너만과 트버스키(Kahneman & Tversky, 1979)의 전망 이론(Prospect Theory)이다. 전망 이론은 이득보다 손실을 더 크게 인지하여 손실을 회피하고자 하는 경향을 설명하는 것이다(김진영, 신용덕, 2011). 예를 들면, 이익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실제 불확실한 이익의 가치가 더 크더라도 확실한 이익의 가치를 더 높이 평가하고, 손실이 예상된 경우는 실제 불확실한 가치가 더 크더라도 확실한 손실의 가치를 더 큰 손실로 평가하여 불확실한 손실을 회피하는 경향으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손실 회피(loss aversion)’라는 개념으로 심리학에서 설명하고 있으며,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손실을 더 두려워하여 이를 피하는 선택을 하는 것을 설명

한다(마정미, 2016). 그리고 사람들은 현재의 상태(예: 지위, 권리, 재산 등)를 유지하고, 소유하고 있는 것을 더 높이 평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프레이밍 효과(framing effect)는 문제 해결이나 판단의 대상을 어떻게 표현하고 제시하는지에 따라 선택과 의사결정이 달라지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즉, 동일한 대상이더라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지 혹은 부정적으로 표현하는지에 따라 사람들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 내용의 구성을 달리하여 그 효과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을 ‘메시지 프레이밍 효과’라고 한다(마정미, 2016). 긍정/부정 프레이밍 외 대표적인 프레이밍의 종류는 크게 속성 프레임(attribute framing), 목적 프레임(goal framing)이다(윤태웅, 2012). 속성 프레이밍은 대상의 구체적인 세부 내용이나 물리적 속성을 강조하는 것이며, 목적 프레이밍은 행위나 제시된 내용을 선택 혹은 선택하지 않았을 때 목표 성취에 초래할 수 있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다.

속성-목적 프레이밍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인식하는 심리적 거리(Psychological distance)에 따라 서로 다른 사고방식이 활성화된다는 해석 수준 이론(construal level theory)과 연결된다. 해석 수준 이론은 대체로 심리적 거리가 멀수록 추상적이며, 본질적인 속성에 주목하며, 심리적 거리가 가깝게 느껴질 때는 구체적이고 부수적인 속성을 중요하게 살펴보고 판단하는 것을 설명한다(Wakslak, Nussbaum, Liberman, & Trope, 2008). 이를 속성-목적 프레이밍과 연결하면 속성 프레임은 현재, 목적 프레임은 미래와 연결될 수 있다(Kees, Burton, & Tangari, 2010; Mogilner, Aaker, & Pennington, 2008; Pennington & Roese, 2003).

이를 포함하여 행동경제학을 적용하여 정책과 관련된 연구와 프로그램에 적용되고 있는 편향은 다음과 같다<표 2-12 참조>. 구체적으로는 휴리스틱이나 전망 이론, 프레이밍 외에, 미디어에서 제시된 방향으로 해석하는 프레이밍 효과, 과신, 근시안적 판단, 시간 불일치, 공정함, 사회적 규범 등이 있다. 사회적 규범은 자신이 속한 사회나 준거 집단의 가치와 기대에 따라 행동하고자 하는 편향으로 다른 사회 구성원들이 행동하는 대로 따르고자 하는 편향으로 사회적 선호로 언급되기도 한다.

<표 2-12> 정책 관련 대표적 행동 편향 10가지

	편향 유형	의미
1	휴리스틱	소비자는 복잡한 선택, 정보에 직면했을 때 시장 결과나 과학적 수치를 참고하여 선택하기보다 기존 경험, 휴리스틱에 따르는 결정을 함
2	보유/현상 유지 효과 (전망 이론)	소비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새롭거나 유용한 선택보다 기존의 선택을 유지하려고 함
3	닳 내림 (Anchoring)	소비자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보에 닳을 내려(앵커링) 그것을 중심으로 결정
4	프레이밍(Framing)	소비자는 정보의 내용 못지않게 정보 제시 방식에 영향을 받음
5	프라이밍 효과 (Priming effect)	소비자는 먼저 본 정보에 의해 떠올려진 개념으로 인해 이후에 접한 정보를 해석할 때 영향을 받음. 미디어에 노출된 정보에 영향을 받음
6	과신	소비자는 특정 행동 결과에서 평균적 결과보다 자신은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함
7	쌍곡선 할인/근시	소비자는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 사이에 인지적 표상 차이가 있어서 가까운 것의 비용을 높게 평가하는 근시안적 판단을 함
8	시간 불일치	최초의 결정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최적이지 않게 될 수 있음. 소비자는 단기 충동과 장기이익 사이의 갈등에 직면함
9	공정함	소비자는 자신의 만족뿐 아니라 다른 소비자나 공급 측면의 공정함에 관심을 가짐
10	사회적 규범	소비자는 특정 사회나 그룹의 가치, 행동, 기대에 유도됨

- 배순영(2016)에서 발췌하여 수정작성 함

#### 다. 행동경제학을 이용한 공공정책의 대표적 사례

전술한 바와 같이, 행동경제학은 정책설계자가 정책 효과를 예측해볼 수 있다는 점과 정책의 물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정책의 핵심 내용을 바꾸지 않더라도 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정책도구를 설계하는데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으로 정책 분야에서 적용되어 오고 있다. 다음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행동경제학의 주요 이론과 개념이 정책 도구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정책 도구는 강제성의 정도와 어떠한 혜택을 제공하는지에 따라 규제 도구, 경제적 도구, 정보 도구로 구분할 수 있다(Vedung, 1998). 규제 도구는 정책의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책대상자들이 선택가능한 옵션을 제거하거나 행동을 제약하는 것이며, 유인적(incentive) 도구는 경제적 도구와 같이 직접적인 물질적 혜택을 제공하거나 교육이나 정보 등을 제공하는 정보 도구로 구분될 수 있다. 여기에 행동경제학을 적용한 정책도구는 정책 내용에 정책대상자들의 선택을 제약하거나 어떤 유인책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실행 절차에 관여하는 프레이밍을 이용한 정보 단순화와 물리적 환경의 변화, 초기 설정의 정책 변화, 그리고 사회적 규범의 활용과 같은 촉매 도구라 할 수 있다(김이수, 2019; 권남호, 2018; 박상곤, 2016)<표 2-13 참조>.

<표 2-13> 정책수단과 행동경제학의 접점

규제 도구	유인 도구			촉매 도구			
선택 제거 및 제약	인센티브 및 정보			행동경제학(넛지: Nudge) 적용			
법과 규제	재정	비재정	정보 제공	정보 단순화 및 프레이밍	물리적 환경 변화	초기설정 정책의 변화	사회적 규범의 활용

- 김이수(2019)에서 발췌함

단순화(Simplification)는 정책의 문서나 정보 형태를 단순화하는 것이다. 개인은 완전한 정보에 기반하여 합리적이며 심사숙고한 의사결정을 하기보다 인지적 구두쇠로서 외부 정보를 처리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정보의 단순화는 정책 정보를 제공할 때, 정책의 대상자가 쉽게 이해하고 필요한 문서를 작성하게 도와줄 수 있다. 예를 들면, 미국 교육부는 정부의 장학금 보조 프로그램의 지원 양식과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신청자격과 관련된 질문의 문항의 수를 줄였으며, 기존의 세금신고서 작성 절차를 장학금 보조 프로그램 지원 절차와 통합하여 간소화하였다.

그리고 프레이밍 효과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정책대상자들은 정보의 양뿐 아니라 형태에 따라 평가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시하는 것 또한 고려해 볼 수 있다. 프레이밍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스웨덴에서는 유통기한이 다가오는 제품에 붙이는 가격 인하를 붉은색에서 초록색으로 제시하고 문구(“가격 인하: 빨리 드세요. 이 제품은 유통기한이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 신선합니다. 이 제품을 사는 것은 환경을 보존하고 당신의 돈을 절약하는 행동입니다(lower price: eat soon. This product is approaching expiration data but is still fresh. Buy it and you will save the environment and money” )로 바꾸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제품의 품질을 낮게 평가하거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환경과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선택이라는 평가를 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해당 제품의 판매를 늘릴 수 있었다(권남호, 2018).

물리적 환경 변화는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제하에 정책대상자가 마주하게 되는 물리적 환경을 바꿈으로써 행동을 유도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식당 접시의 크기를 줄인 다든지, 화장실 소변기에 파리 스티커를 붙임으로써 공중화장실의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초기설정 정책을 바꾸는 디폴트 옵션 정책(default policy)이 있다. 사람들은 보통 정해진 옵션에 따르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정책설계자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옵션을 초기 값(default)으로 설정해 둠으로써 바람직한 행동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사무실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인쇄 용지를 절약하기 위해 단면 인쇄가 아닌 양면 인쇄를 초기 값으로 설정해 두기도 한다. 또한, 미국은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가입을 선택할 수 있는 것(opt-in)에서 추가적인 선택(연금 탈퇴)이 없으면 유지되는 방식(opt-out)으로 초기설정 값을 변경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규범(social norm)을 활용하는 것은 정책대상자들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규범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정책대상자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사회적 규범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갖기 때문이다(권남호, 2018). 강제성의 정도에 따라 명령적 규범(injunctive norms)과 기술적 규범(descriptive norms)으로 구분된다. 명령적 규범은 개인이 지켜야 할 행동에 대한 사회적 규정이며, 기술적 규범은 직접적인 강요나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사회 구성원들의 행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호텔에서 환경보호 노력의 하나로 수건 재사용 캠페인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건을 재사용 하고 있다” 라는 문구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진행된 문헌 연구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 및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청년연령의 범위만이 아니라 청년정책의 범위 또한 확장되고 있다. 초기 일자리 중심으로 청년정책이 마련되고 실행이 되었다면, 점차 청년의 전반적인 삶을 지원하고 권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그리고 일자리와 관련된 정책의 성과는 사회 경제적 조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정책대상자인 개인 수준에서의 성과는 정책사업의 참여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내용과 더불어, 실행 과정 전반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특히, 정책대상자의 정책에 대한 인지와 이해도와 같은 정책 리터러시가 정책참여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진입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행동경제학은 물리적 혹은 물질적인 유인책을 추가하지 않고, 정책대상자들의 정책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 효과를 미리 검증할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공공정책에 적용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 제3장 충청남도 청년정책의 추진 현황 및 진단

## 1. 충남의 청년 및 정책 현황

### 가. 충남 청년 현황

2020년 충청남도 청년 인구(15~39세)는 62만 776명으로 충청남도 전체인구의 29.3%이며, 2018년~2020년에 걸쳐 최근 3년간 감소세를 보인다. 2020년 12월에 발표된 ‘행정자료를 활용한 2020 충청남도 청년통계보고서’에 따르면, 충청남도 내 천안시의 청년 인구가 26만 1,658명으로 가장 많고, 청양군은 6,614명으로 가장 적었다. 각 시군별 인구 대비 청년 인구비율을 살펴보았을 때도 천안시는 그 비율이 38.5%로 충청남도 내 청년 인구 비율(29.3%) 보다 높았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서천군(19.9%)으로 나타났다.

<표 3-1> 청년인구 규모

(단위, 명, %)

구분	연령	2018	2019	2020
충청남도	전체	2,126,282	2,123,709	2,121,029
청년 인구 (15-39세)	15-39세	652,716	639,711	620,776
	비율*	30.7	30.1	29.3
청년 기본 조례	19-39세	561,232	553,453	539,818
	비율*	26.4	26.1	25.5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15-34세	491,073	480,553	468,954
	비율*	23.1	22.6	22.1

\* 충청남도 전체 인구 대비 해당 연령인구 비율

- 통계청, [인구 동향 조사]DB의 인구 총 조사, 주민등록인구 현황을 참조하여 작성.

충청남도 청년인구의 감소세는 인구이동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2019년 전입한 청년인구는 12만 3,765명이며, 전출인구는 12만 8,496명으로 전출자가 전입자 보다 많아 순유출(4,731명)이 발생하였다. 30~34세를 제외한 청년 연령층에서 순유출이 발생하였으며, 순유출 규모가 큰 연령대는 20-24세로 3,176명이 순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2 참조>. 청년의 전출입은 직업이 주 사유로 나타났다.

<표 3-2> 2019년 청년인구의 이동

(단위: 명, %)

구분	충청남도 내 지역	타 시도 지역	합계
전입	65,264 (52.7)	58,501 (47.3)	123,765 (100.0)
전출	65,264 (50.8)	63,232 (49.2)	128,496 (100.0)

- 2020 충청남도 청년통계 보고서를 기반으로 작성

2020년 충청남도 청년고용률은 전년도 대비 3.1% p 낮으며, 청년 실업률은 0.3% p 높게 나타났다. 청년고용률은 충청남도 전체 고용률 대비 3분의 2 수준으로 낮은 편이며, 청년 실업률은 충청남도 전체 실업률과 비교하였을 때 약 2.5-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청년의 고용률 및 실업률

(단위,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고용률(충남도 전체)	63.5	63.7	62.4
실업률(충남도 전체)	3.1	2.9	3.5
청년 고용률	43.7	45.1	42.0
청년 실업률	9.0	8.2	8.5

- 통계청, [지역통계]DB를 바탕으로 작성

청년 인구 감소는 지역사회의 경제 활동 및 생산성 불균형, 고령화 문제 등과 연결되는 문제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충남도 청년의 인구는 충남 외 지역으로의 순유출 발생하며 감소세를 보인다. 청년이 지역을 이동하는 주요 이유가 직업인 것은 충남도 전체 실업률 대비 청년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충남도는 지역 내 고용률과 실업률 해소를 위한 일자리 정책을 시작으로 청년의 인구를 유지하거나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청년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고 있다.

## 나. 청년정책 현황

충청남도는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인프라를 구축하여 꾸준히 청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청년 정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년정책위원회와 더불어 청년정책 전담팀, 청년정책추진본부, 일자리노동청년과 등의 조직을 구성하여 지속가능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청년의 생애주기와 지역 상황을 고려한 청년정책을 시행하고자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의 분야에서 세부과제들을 진행하고 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2020년 12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관 협동으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21- ‘25)’ 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충청남도는 ‘청년이 살고 싶은 충남’ 과 기회, 참여, 연대를 목표로 한 2021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추진전략은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분야로 구분하여 세부과제를 설정하였다. 일자리 분야는 청년 일자리 확대와 역량 강화를 목표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확보와 충남 일자리 소통공간, 희망이음 프로젝트, 청년무역전문가 양성 등 청년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취업역량을 키울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취업 외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청년창업가 양성, 청년 소상공인 창업 자금 지원 등 분야별 창업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과제를 수립하였다.

일자리만이 아닌 청년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주거와 복지 및 문화 부분에서도 세부과제를 통해 청년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자 하였다. 먼저는, 충남형 ‘더 행복한 청년 주택’ 을 공급하고 청년 농촌보금자리를 조성하는 등 청년 주택 공급을 늘리고,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지원으로 청년의 전월세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저소득 청년의 자립자금,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 수당 등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이 사회출발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하는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물질적 안정만이 아니라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을 운영하여 청년 수요에 맞는 청년층 건강 서비스와 청년의 문화 활동기반이 될 수 있는 지원책도 마련하였다. 이외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교육분야의 지원책, 청년 중심의 정책결정과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청년위원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다음의 표는 분야별 추진계획과 성과지표를 정리한 것이다<표 3-4 참조>.

<표 3-4> 2021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안)

분야	추진 계획	세부 내용	성과 지표
일자리	청년일자리 확대 및 역량강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 충남형 지역균형발전 청년고용사업, 충남 스타트업 기업 청년채용장려 지원, 직업계고교생 지역정착 취업, 지역 대학의 충남 인재 취업, 사회적경제 청년활동가 및 청년 도제 육성 등	일자리 창출 (지원 대상자 인원)
	청년 창업 활성화 및 내실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도시청년 초보 농부 훈련 농장, 경영 실습 임대농장, 경쟁력 제고 사업,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등), 청년 창업가 양성(브랜드 디딤돌 지원, 지역마을 창고 활용 창업지원 등), 청년 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 등	
주거	청년 주택 공급 확대 및 전월세비용경감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건설형, 매입형) 공급 및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충남 대전·서울 학사관 및 청년 세어 하우스 운영,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지원 등	주거 비용 경감자 수 (지원 대상자 인원)
교육	교육기회 보장으로 청년의 미래역량 강화	미래인재육성지원, ICT이노베이션 충남 스퀘어 조성, 청년농업인 육성, 친환경청년농부 교육훈련 청년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등	참여인원 (지원 대상자 인원)
복지 문화	사회출발자산 형성 및 청년건강증진	청년희망계좌 개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주거지원 통합서비스, 퇴소종결아동 자립 정착금 지원, 청년층 건강개선(신체, 정신 등) 서비스 제공 등	수혜인원 (지원 대상자 인원)
	청년 문화 활동기반 강화	청년크리에이터 양성, 청년예술가 육성,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지원, 1인 콘텐츠 및 청년창작자 콘텐츠 지원 등	
참여 권리	청년 주도적 정책결정 및 지역청년정책 균형발전	위원회 청년위원 참여 확대, 청년 정책참여 기구 청년네트워크 운영 등	정책 반영률 (반영/발굴건수)
	청년친화적 정책 전달 체계 운영 및 청년·지역 공동체 활성화	청년 온라인플랫폼 '다이나믹 충남청년'서비스 개시, 청년 활력 공간 청년LAB 조성, 충남형 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등	

다. 도내 청년의 청년정책(일자리)에 대한 인식

충남연구원은 2020년 4월 충청남도 내 주요 대학의 대학생(재학 및 취업준비생)과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일자리와 관련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해당 조사는 2020년 4월 충청남도 내 주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청년 일자리 노동시장 현황과 청년취업 일자리 미스매치에 대한 인식,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및 정책희망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였다. 그중에서 충청남도의 일자리 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인식결과를 살펴보았다.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 정도와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사에 참여한 청년(200명)은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 아는지’에 대한 질문에 ‘잘 모른다’ 4명(2.0%), ‘모른다’ 53명(26.5%), ‘보통이다’ 61명(30.5%), ‘조금 알고 있다’ 80명(40.0%), ‘잘 알고 있다’ 2명(1.0%)이 응답하였다. 즉, 조사에 참여한 청년 중 약 30%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지원 사업에 대해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불만족하다’ 3명(1.5%), ‘불만족하다’ 40명(20.0%), ‘보통이다’ 124명(62.0%), ‘약간 만족한다’ 33명(16.5%)이 응답하였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점수로 환산하였을 때 2.94점으로 보통(3점)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3-5>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한 인지도 및 만족도

인지도	잘 모른다	모른다	보통이다	조금 알고있다	잘 알고있다	전체
인원(명)	4	53	61	80	2	200
비율(%)	2.0	26.5	30.5	40	1.0	100
만족도	매우 불만족하다 (1점)	불만족하다 (2점)	보통이다 (3점)	약간 만족한다 (4점)	매우 만족한다 (5점)	전체
인원(명)	3	40	124	33	0	200
비율(%)	1.5	20.0	62.0	16.5	0	100

또한,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직업교육, 훈련지원, 창업, 창작지원 사업 확대(44명, 22.0%)’, ‘기업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43명, 21.5%)’, ‘청년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취업성공장려금 확대(40명, 20.0%)’, ‘기업체 인식개선을 위한 기업정보 제공 확대(29명, 14.5%)’, ‘청년고용을 창출한 기업 지원(22명, 11.0%)’, ‘청년들의 구직활동비 지원(22명, 11.0%)’ 등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충남 내 구직자 관련 취업지원금 확대’, ‘충남 및 주변 지역의 구직정보 제공’ 등이 있었다.

<표 3-6> 우선 지원 필요 사업

지원 사업	인원(명)	비율(%)
청년들의 직업교육, 훈련지원, 창업, 창작지원 사업 확대	44	22.0
기업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43	21.5
청년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취업성공장려금 확대	40	20.00
기업체 인식개선을 위한 기업정보 제공 확대	29	14.5
청년고용을 창출한 기업 지원	22	11.00
청년들의 구직활동비 지원	22	11.00
전체	200	100

결과를 종합해 보면, 청년 일자리 정책을 포함한 청년정책 사업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년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들이 필요로 하고,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사업들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현재 충남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이 추구하는 지원정책과 지방정부에서 마련한 정책의 방향과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큰 간격이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정책 인지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적절하고 타당한 정책이 마련되어 있어도 청년이 알지 못한다면 청년들이 정책사업의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청년 일자리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책사업에 대한 홍보 활동 또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2. 청년지원 정책에 대한 실무자 및 청년 심층 인터뷰

### 가.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충남 청년지원정책 신청률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충청남도에서 실행하고 있는 청년지원 정책에 대한 상황 이해와 정성적 진단을 위해 실무자와 수혜대상인 청년과 일대일 심층 인터뷰(In-depth interview)를 진행하였다. 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심층 인터뷰에서는 현재 실행되고 있는 청년정책 사업의 내용과 실행 과정, 성과 평가 방식, 현장에서 체감한 청년들의 반응 등 청년정책 사업 실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실무자의 인식과 평가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수혜대상자 및 잠재적 수혜대상자인 청년이 참여한 심층 인터뷰는 청년지원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관련 정책에 대한 체감도, 그리고 참여한 청년정책 사업에 대한 경험과 평가를 탐색하고 이해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일대일 심층 인터뷰의 참여자는 목적적 표집(Purposive sampling)에 의해 선정되었다. 심층 인터뷰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청년 정책의 실행 내용과 과정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실무자)과 주요 청년정책 사업에 참여하여 충분한 경험이 있는지(청년) 등을 주요하게 고려하였다. 이를 위해 실무자는 본 연구과제에 포함된 청년정책 사업 추진부서의 실무 담당자를 먼저 4명을 섭외하였다. 그리고 추가적인 심층 인터뷰는 개별적으로 진행된 초기 4명과의 심층 인터뷰 과정에서 해당 주제에 대해 풍부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실무자와 청년을 소개받는 스노우볼링(Snowballing) 방식으로 심층 인터뷰 참여자를 확보하였다. 최종적으로 심층 인터뷰는 실무자 6명과 청년지원사업에 참여한 4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표 3-7> 심층 인터뷰 참여자(실무자)

참여자	소속	담당 정책사업	분야
실무자A	충남도청 청년정책과	지역 착근형 프로그램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지원	교육 주거
실무자B	충남도청 청년정책과	지역균형발전 청년고용사업	일자리
실무자C	충남일자리진흥원	지역주도 청년일자리 사업	일자리
실무자D	충남일자리진흥원	일자리 소통 공간 잡 카페	일자리
실무자E	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	지역착근형 프로그램	교육
실무자F	천안YMCA	지역착근형 프로그램	교육

<표 3-8> 심층 인터뷰 참여자(청년)

참여자	직업/거주지	참여 정책사업	분야
청년A	대학생/홍성	충남 취창업카페	일자리
청년B	직장인/아산	충남형 지역균형발전 청년고용사업	일자리
청년C	직장인/청양	지역착근형 프로그램	교육
청년D	직장인/천안	지역착근형 프로그램	교육

일대일 심층 인터뷰는 McCracken(1988)의 심층인터뷰 진행 가이드 라인을 바탕으로, 폭넓은 주제를 탐색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그랜드 투어(Grand-touring)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심층 인터뷰 참여자의 관점에서 최대한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을 청취하기 위하여 실무자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가이드 라인을 별도로 준비하였으며, 반구조화된(Semi-structured) 인터뷰 가이드 라인을 기반한 개방된 질문을 하였다<부록1과 2 참조>. 본 심층 인터뷰에 다루고자 한 연구 문제(Grand Question)는 ‘현재 청년정책의 신청률을 높이기 위한 개선점 및 방안은 무엇인가?’ 이었다. 구체적으로,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 가이드는 현재의 청년과 관련된 문제의식이나 청년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같은 일반적인 내용부터 정책별 현재 진행 상황(예: 진행 내용, 정책 실행 관련 대외 커뮤니케이션 활동 현황, 반응 등), 실무자 관점에서 추진 정책의 장·단점 파악, 그리고 아이디어 관련 질문 등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청년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 가이드는 일자리를 포함한 청년정책에 대한 인식과 청년정책 사업의 참여 경험, 그리고 현재 충남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한 평가, 청년 관점에서 추진 정책의 장·단점 파악, 그리고 아이디어 관련 질문 등이 포함되었다.

일대일 심층 인터뷰는 개인별로 약 50분 내외로 진행되었다. 모든 심층 인터뷰는 참여자의 동의를 받아 녹음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참여자별 녹취록은 A4 규격의 15장 내외로 작성되었다. 생성된 녹취록은 Strauss와 Corbin(1998)의 근거이론에서 제시된 개방코딩(open-coding) 방법을 기반으로 주요 질문별로 정리하였다.

## 나. 실무자 심층 인터뷰 결과

실무자 심층 인터뷰는 현재 이행되고 있는 충청남도 청년정책의 실행 내용과 과정 그리고 현장에서 인식되는 청년정책에 대한 반응 등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청년정책 이행에 대한 정성적 진단을 위해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각 실무자가 담당하고 있는 청년정책의 실행 내용 및 반응 인식, 실무자 관점에서 정책의 내용과 시행 및 성과 평가의 적절성 인식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 심층 인터뷰 결과, 실무자들은 전반적으로 현재의 청년정책이 오늘날의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청년정책 사업의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었으나, 청년정책에 대한 수혜대상자의 관심과 신청률은 대체로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 1) 사회적 관점에서의 청년문제와 정책 방향성에 대한 인식

청년정책 사업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은 일자리를 포함한 청년과 관련된 어려움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청년의 삶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문제로 인식되는 것은 일자리와 관련된 문제를 언급하였다. 청년 시기의 중요한 생애 과업이라 할 수 있는 취직에 있어서 청년들은 경력직 위주의 구인 상황, 그리고 청년이 갖는 일자리에 대한 기대와 현실과의 미스매치에 따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현실은 청년의 정서적 안정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실무자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청년 인구의 부족은 지역 기업이 구인을 하는 데도 문제점으로 언급되고 있다.

주제	Quotes(참여자)
일자리	<p>“<b>청년실업 문제가 가장 높게 나오고</b> 있고, ... 이렇게 얘기 들리는 거 보면 확실히 이 문제가 심각하긴 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실무자B)</p> <p>“<b>경력직만 주로 있고</b>, 앱 개발이나 프로그램 개발. 이쪽은 신입을 뽑는데 제가 했던 업종에서는 뽑지도 않고”(실무자D)</p> <p>“<b>청년들 눈높이나 만족도</b> 그리고 기업에 대한 만족도나 이렇게 맞지 않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실무자C)</p> <p>“자기가 생각하는 <b>양질의 일자리가 없다</b>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실무자F)</p>
정서적 안정감 부족	<p>“졸업하고 나서의 안정적인 취업이나 이런 게 보장이 되지 않으니 <b>굉장히 몰린 내몰린 느낌</b>”(실무자F)</p>
청년의 절대적인 부족	<p>“<b>워낙 청년이 없다</b> 보니까요. 친구들을 모집하는 게 가장 1순위로 힘듭니다.”(실무자E)</p>

실무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을 지원하는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었다. 그리고 실행된 정책을 통하여, 청년이 취직할 수 있는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과 더불어 교육이라든지 주거문제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되고 있었다. 더불어 실질적으로 현재의 정책들이 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년들에게 적용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주제	Quotes(참여자)
청년 문제에 대한 복합적 고려	<p>“어떤 단순히 지원을 해준다고만 해서 청년층의 어떤 삶의 질이 단번에 좋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b>주거난, 일자리 그 부분을 복합적으로</b> 생각을 해서 청년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실무자A)</p>
실질적 지원	<p>“청년층 채용을 좀 움츠렸던 기업에서는 이번 기회에 청년 채용도 하고 좀 하자라는 의도로 의지를 갖는 기업이 많은 거는 사실 그만큼 <b>청년 일자리가 늘어날 수도 있는</b> 거기 때문에.”(실무자C)</p> <p>“<b>지원금으로. 취업에 관련된</b> 자격증을 따던가 아니면 뭐 강의를 듣는다던가”(실무자D)</p>

## 2) 담당 정책별 계획 및 실행의 적절성

다음으로, 사회적 관점에서의 청년문제에 대한 인식과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바탕으로 실무자들이 담당하고 있는 청년정책 사업들을 세부적으로 살펴

보았다. 먼저, 청년정책 사업에서 적용되고 있는 청년의 연령 범위는 대체적으로 충청남도 청년기본조례를 바탕으로 만19세에서 39세를 적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역의 규모에 따라 그 폭이 확대되기도 하였으며, 사업에 따라 실제 참여한 청년의 연령층은 일부 연령대로 한정되기도 하였다.

주제	Quotes(참여자)
적용된 청년 연령	<p>“저희는 모든 프로그램에 <b>그 인원(만19-39세)</b>을 그대로 적용했어요”(실무자F)</p> <p>“<b>만 15세고 하나까 18세부터 45세까지</b> 일단 실질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넓은 폭이죠.”(실무자E)</p>
실제 참여 청년연령	<p>“저희가 청년 고용 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연령대가 청년이라고 해서 만19세부터는 39세라고 하긴 하는데 <b>20대 초반 분들이 대부분...고등학생, 대학생 다 다르게 구분이 돼 있거든요.</b> 구분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안 하면 잘 안 들어오니까”(실무자B)</p> <p>“엄밀히 말하자면 지금 나이 30대 이상의 나이대는 별로 없어요. 동아리 한 팀.한 팀이 있고. 이제 주로 90%가 <b>대학생 20살에서 29살 20대 들이고.</b> 지금 고등학생이 한 거의 한 10% 정도”(실무자D)</p> <p>“그래서 대학교 저학년에서 2학년 3학년에서 39살 만 39살까지 38 이신가 하는 분이 그러니까 최고 나이 많은 분이었어요”(실무자F)</p>

현재 실행 중인 청년정책의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계획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의 특성과 규모에 맞춰 구체적인 지원 대상을 정하거나, 지역의 특색 있는 사업체와의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특히, 지역의 규모는 청년 정책사업을 실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한 가지로 이해되었다. 즉, 지역의 규모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과 확보 가능한 일자리의 규모와도 연결되어 있으며, 한편으로는 사업에 참여 가능한 청년의 수와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제	Quotes(참여자)
확보가능한 사업체 규모	<p>“대도시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보조 사업자들이 신청을 해서 그중 역량 있는 사업자를 선별을 해서 올리는 반면에 좀. 이걸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어떤 군 단위 같은 경우는 한 개의 어떤 보조 사업자만 그거를 선정을 해서 올리는...” (실무자A)</p> <p>”그 지역별로 청년 수가 몇 명이 있고 기업의 수가 몇 명이 있는지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따라서 지원 예정 인원 해가지고” (실무자B)</p>
청년 규모	<p>“실제로 이제 군 단위들은 이제 신청자가 이제 적어서. 약간 좀 모집자를 모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실무자 A)</p> <p>“실제로 취창업에 조금 현실적으로 연계가 되게끔 하는 목적인데, 청년의 수가 없고, 이미 대다수의 청년은 착근되었기 때문에” (실무자E)</p>

### 3) 정책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소통 활동

청년 정책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청년 정책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원활한 소통은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현재 실무자들은 청년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사업체를 포함한 관련 기관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소통을 진행하고 있었다. 관련 기관으로는 일자리 혹은 취·창업 관련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사업체와 교육기관이 있으며, 청년과 더욱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지역 대학의 취업 관련 부서가 있다. 그리고 청년정책의 궁극적인 수혜대상자인 청년과의 소통을 위해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	Quotes(참여자)
기관과의 소통	<p>“기업체는 아마 진흥원 쪽에서 따로 메일을 드린다고 하더라고요”(실무자B)</p> <p>“대상이 특성화 고등학교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선 제가 <b>교육청</b> 하고 <b>연계해서</b> 홍보하고, ... 저희 산업단지 공단이나 중소기업, 협회, 단체 그다음에 시군에서도 가지고 있는 <b>협회 단체가 또 있거든요. 그쪽으로 홍보 요청을</b> 별도로”(실무자C)</p> <p>“먼저 <b>대학교 취업지원센터</b> 그런 쪽에 먼저 다 홍보물 드렸어요.”(실무자D)</p>
청년과의 소통	<p>“<b>문화원 자체에서 어떤 포스터를</b> 붙이거나 홍보하는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으로 <b>가장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이기</b> 때문에”(실무자A)</p> <p>“청년들이 많이 접하는 곳에 <b>버스 내 방송 송출을</b> 통해서 홍보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실무자C)</p> <p>“<b>신문 광고라든가 저 라디오 인터뷰도</b> 한 세 번 했거든요.”(실무자B)</p> <p>“의사소통을 좀 활발하게하기 위해서 <b>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b> 만들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도 편하게 카톡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실무자D)</p>

한편으로 실무자들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소통 방법에 대한 효과와 효율성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었다. 이는 소통의 대상인 청년이 주로 이용하는 매체와 현재 활용하고 있는 홍보 채널과의 연결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 인식과 홍보를 위해 활용하는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부담이었다. 특히, 홍보 채널 활용에 대한 고민은 실제로 청년정책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이 해당 사업을 인지하고 참여하게 된 경로와 차이를 보였다.

주제	Quotes(참여자)
홍보 채널	“지역 라디오 인터뷰를 활용하는데, 이 인터뷰를 청년들이 들을까 라는 생각”(실무자B)
적절한 콘텐츠 형태	“홍보를 이제 영상으로 만들면 또 학생들이 관심을 많이 갖기는 하는데 그 영상 제작 비용이 솔직히 좀 만만치 않거든요. 일반 그냥 포스터만 제작하는 거랑은 또 가격이 큰 차이다 보니까”(실무자D)
실제 인지경로 -친구/지인	<p>“실제로 신청하는 분들한테 제가 자주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이 경로를 알게 됐냐고 하면은 이미 이 수혜를 받았던 지인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실무자A)</p> <p>“기업체분들은 사장님들끼리 다들 아시는 어떤 업체에서 한다고 해서 들어서... 이 사업 참여했던 참여 청년이 (개인)블로그 해서 올리기도 하더라고요”(실무자B)</p> <p>“친구 소개로 그 친구가 참여하고 있어서 연락을 들어서 참여를 했다라고” (실무자C)</p> <p>“작년에 했던 학생들은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당연히 진행되니까, 그래서 또 주변 친구들 안 했던 친구들도 모아서 했던 학생들도 많고요.”(실무자D)</p> <p>“기존의 저희 다른 자립학교를 했던 사람들 지인의 소개로 오신 경우...”(실무자F)</p>

#### 4) 성과 평가 방식

청년정책 사업은 정량적 및 정성적 방법으로 그 성과를 평가하고 있었다. 인터뷰의 참여한 실무자 대부분이 신청률과 참여율과 같은 지표로 성과를 평가하고 있었으며, 이와 더불어, 각 분야의 실무자는 청년 정책사업에 참여한 청년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였다. 그리고 취·창업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한 사업에서는 정책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이 실제적인 역량이 강화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폼평회’와 같은 정성적인 차원에서도 성과를 파악하고 있었다. 청년 정책 사업 프로그램이 종료되었을 시점만이 아니라 진행 과정에서의 이탈률을 관리하고 있었으며, 참여 청년들이 중도에 이탈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었다.

주제	Quotes(참여자)
정량적 평가	<p>“<b>참여 현황</b>이라든가 계속해서 <b>수요도 많이</b> 들어오고 하는 거...”(실무자B)</p> <p>“<b>200명을 모집 완료</b>”(실무자C)</p> <p>“잡 카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달성을 했고요. 달성률이 100프로 넘어갔고. <b>참여율</b>이랑 <b>이제 특강 횟수</b>예요”(실무자D)</p> <p>“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b>인기가 많은 수업</b>이 어떤 건지 <b>청년들의 만족도</b>가 높은 수업이 어떤 건지를 조사를 해서요.”(실무자A)</p>
정성적 평가	<p>“동아리의 방향이 장애 청년들은 기본적으로 베이킹이랑 수제청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b>심화 교육</b>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b>음식물 품평회</b>가 되고”(실무자E)</p> <p>“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가.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인터뷰를 하러 다니는데”(실무자F)</p> <p>“참여 청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데, 온라인 <b>특강에 대해서 특강 멘토나 각 분야에 있는 멘토 선생님들은 어땠는지나 특강 내용 같은 것도</b>”(실무자D)</p>
진행 과정 모니터링	<p>“중도 탈락률이 그렇게까지 높지 않은” (실무자B)</p> <p>“10명이 5회차를 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한 분이 한 번인가 두 번 빠졌다. 그리고 <b>완전히 다 온전히 참석</b>을 하셨어요.”(실무자F)</p> <p>“10개 팀 중에서 지금 1개 팀이 이탈을 했거든요. <b>최대한 할 수 있게 좀</b> 이렇게 뒤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실무자D)</p> <p>“예산 사용. 얼마나. 지원이 되었는지, 지원을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현재 <b>참여율 비율과 이탈율 그 다음에 대체 비율</b>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어요.”(실무자C)</p>

각 분야의 실무자는 진행된 청년 정책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다만, 시도 간의 인구 규모와 지원 방식에 따른 수혜자의 참여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진행 중인 정책사업은 지원 성격에 따라 현금을 지원하는 경제적 도구와 온라인 강의, 직무능력 컨설팅, 진로 지도 등과 같은 정보 도구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대체로, 경제적 도구를 활용한 청년 정책에 대한 수혜자들의 반응이 빠르고, 참여 신청 수가 많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정보 도구인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도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을 때 자격증 취득과 같이 구체적인 성과가 예상되거나 실제적인 도움이 예상되는 프로그램의 참여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	Quotes(참여자)
경제적 도구	<p>“이 사업 자체가 청년 <b>인건비 지원</b> 그런 사업이잖아요. 확실히 수혜자에 대한 반응은 제일 빨라요. 현실성 있는 <b>바로 딱 보이는, 눈에 보이는</b> 사업인지라 어떤 <b>체감도 같은 건 제일 높지 않나</b> 싶어요.” (실무자B)</p> <p>“일단은 학생들이 지원금을 받고 취업 준비를 한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실무자D)</p>
정보 도구	<p>“바리스타 자격증도 있고, 심리상담사 이런 자격증도 있고요. 어떤 어떤 자격증. 그런 부분하고 목공 체험이나 아니면 어떤 3d 디자인. 인기 있는 프로그램 인데, 왜냐하면 청년 입장에서는 <b>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내 취업에 좀 더 도움이 된다고</b> 생각을 하기 때문에”(실무자A)</p>

#### 5) 한계점 및 개선 방안

심층 인터뷰에 참여한 실무자들은 대체로 실행 중인 청년 정책사업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일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지속적인 성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언급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년 정책사업의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지역의 규모와 청년의 연령 범위를 고려한 탄력적 운영과 정책사업에 적용되는 정책수단에 대한 고민의 필요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홍보 방안에 대한 한계와 개선의 필요성을 인지하였다. 그리고 청년정책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과 장기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성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주제	Quotes(참여자)
맞춤화된 탄력적 운영	<p>“지역 착근형 교육 프로그램이 이제 <b>청년 수요에 맞게</b> 저희가 좀 더 <b>탄력적으로 조정</b>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고요. 실제로 이 청년 학교가 운영되는 게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 운영되고 있어요. 또, 태안 같은 경우에는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서핑 교육이 있거든요. 그래서 <b>어떤 지역별로 주변 환경에 따라서</b> 개설하는 강의도 좀 다르지요”(실무자A)</p> <p>“청년의 연령의 폭이 되게 넓다 보니까. <b>서로 관심사가 상이</b>하거든요. … 청년의 범위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좀 그런 연령의 폭이 넓은 게 오히려 더 좀 한계점인 것 같습니다”(실무자A)</p>
정책수단 유형의 선택	<p>“바리스타 자격증도 있고, 심리상담사 이런 자격증도 있고요. 어떤 어떤 자격증. 그런 부분하고 목공 체험이나 아니면 어떤 3d 디자인. 인기 있는 프로그램 인데, 왜냐하면 청년 입장에서는 <b>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내 취업에 좀 더 도움이 된다고</b> 생각을 하기 때문에”(실무자A)</p> <p>“<b>지원금을 꼭 줘야만</b> 이제 학생들이 좀 많이 참가하는 게 눈에 보이는 게”(실무자D)</p> <p>“뭔가 이게 <b>수료증 확인증 같이, 스펙이 될 수 있게</b> 이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실무자F)</p>
내용의 차별화	<p>“이런 온라인 특강 온라인 컨설팅 이런 게 되게 다른 데서도 많이 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b>이거 뭐 다른 데서도 하는데</b> 여기서도 하는 거네. 약간 이런 느낌을 학생들이 받는 것 같아요”(실무자D)</p>
홍보 방안	<p>“조금 조금씩 한 명 이탈했으니까 다시 한 명 뽑아요. 이런건데 이분들을 어떻게 홍보를 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문제는 있어요.” (실무자B)</p> <p>“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것 같아요”(실무자D)</p>
성과 평가	<p>“기본적으로는 어떤 강좌 수를 몇 개를 개설하고 커뮤니티를 몇 개를 운영하고. 이런 쪽은 수치는 나오는데 실제 이 수업 교육을 받은 청년들이 <b>장기적으로 봤을 때 쉽게 지역에 얼마나 정착했는지, 장기적으로 실제. 어떻게 정착하는지나.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는 미흡한 실정</b>”(실무자A)</p> <p>“예산에 좀 초점이 좀 많이 맞춰져 있고 예산과 그 목표 그렇기 때문에 그 예상과 목표만 따라가다 보면은 좀 <b>사업에 내의 적절성</b>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도 필요”(실무자C)</p> <p>“온라인 특강에 대해서 특강 멘토나 각 분야에 있는 멘토 선생님들은 어땠는지나 특강 내용 같은 거. 그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가자, 특강 참여, 상담 횟수 등으로 평가하는데, <b>장기적 관점에서 는 확인은 부족한</b>”(실무자D)</p>

실무자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청년 정책사업의 신청률 제고를 위한 실무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먼저, 청년 정책사업에 대해 청년과 소통할 때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지원 내용을 청년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체로 청년 정책사업에 대한 청년의 참여률은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수준이지만, 정책사업에 적용되고 있는 정책수단의 유형에 따라 청년의 참여율의 차이가 있는데, 수혜 청년의 관점에서 현금성 지원을 받을 수 있거나 가시적이고 실제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정책사업에 참여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청년 정책사업의 소통 방안에 대해 홍보 매체나 채널을 넘어서 홍보 내용을 포함하여 다양한 관점에서의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정책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이 해당 사업을 인지하고 참여한 경로가 대부분 기존에 참여한 지인 혹은 친구들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청년들이 매체를 통해 간접적이거나 추상적으로 혜택을 인식하기보다 직접 지원을 받고 그 혜택을 경험한 가까운 지인과 친구들에게 해당 정책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듣게 되어 참여에 관심을 두게 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는 현재 청년 정책사업에 대한 홍보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해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을 제기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또한, 청년이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청년 정책사업의 내용에 대해 청년이 본인과의 관련성이나 적절성을 낮게 인식한다면 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기 어려울 수 있다. 즉, 청년의 연령이나 환경에 따라 필요한 지원의 내용이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청년의 연령에 속하는 20대 초반과 30대 후반이 주로 관심을 두거나 필요한 정책사업이 다를 수 있으므로, 청년 내에서도 세분화하여 적절한 정책을 안내하는 등 탄력적 운영이 필요할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공공정책의 실행에 있어서 고려해야 하는 보편적 수혜 즉, 수혜의 기회를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 또한 유념해야 할 것이다.

#### 다. 청년 심층 인터뷰 결과

청년과의 심층 인터뷰는 청년정책에 대한 인식과 청년 정책사업의 참여 경험, 그리고 현재 충남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한 평가, 청년 관점에서 추진 정책의 장·단점 파악을 위해 진행되었다.

## 1) 청년의 일자리와 주거에 대한 인식

심층 인터뷰에 참여한 청년들은 일자리와 주거에 대한 문제를 분리하지 않고 함께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청년이 일자리를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 요인 중 하나는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본인이 희망하는 분야의 직업과 관련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청년들은 이와 함께 일자리와 함께 거주지도 고민하는데, 본인이 희망하는 직업과 관련된 일자리를 위해 본래 거주 지역을 떠나고자 하지만, 현실적인 주거와 관련된 문제로 현재의 거주 지역을 선택한 것으로 언급하였다.

주제	Quotes(참여자)
일자리 선택	<p>“이 지역을 좀 벗어나서 <b>조금 더 큰 곳에서</b> 생활하고 또 일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청년A)</p> <p>“이벤트나 축제 부분이 조금 더 <b>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b> 이런 데서 조금 더 배우고 싶다는 생각 생각까지는 있어요.”(청년B)</p> <p>“만약에 유통에 관련 애로사항이 있다면은 <b>웁길</b> 생각입니다” (청년D)</p>
주거에 대한 고민	<p>“청년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타 지역으로 나가게 되면 그 지역 안에서 ... 개인적인 <b>주거나 아니면 식생활</b> 이런 것들. 그런 부분이 사실 <b>만만치 않은 비용</b>들이기 때문에”(청년A)</p> <p>“서울 생활에 조금 해봤는데. 조금 했는데도 <b>어떤 주거비라든가 생활비에 대한 압박</b>이 굉장히 심했어요. ... 타지에서 생활하는 거, <b>조금 불안함</b>이라든지 <b>걱정되고 겁나는 것도</b> 있고”(청년B)</p>

## 2) 정책에 대한 인식

청년 심층 인터뷰는 청년 정책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심층 인터뷰에 응한 청년들은 정책사업에 참여하기 전에 일반적인 정책을 포함한 청년정책에 관해 관심이 없었다고 언급하였다. 정책이나 청년정책에 관심이 없었던 이유로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과 같이, 정책대상자이지만 자신과의 관련성을 높지 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청년들은 참여를 지원한 후 실제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청년 정책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게 되었으며, 지원을 받은 혜택으로 인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	Quotes(참여자)
참여 전 인식	<p>“제가 충남 지역은 무조건 벗어나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다가 관심을 그렇게 크게 두지 않았었어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b>관심이 많이 없었는데</b>”(청년A)</p> <p>“충남도에서도 어떤 취창업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딱 여기까지만 하고 근데 거기에 선뜻 제가 가 지원을 해보야겠다 아니면 탐색을 해보야겠다까지의 느낌은 사실 없었어요. 그냥 <b>저랑은 딱히 상관없는 일</b>이라고 생각했어요”(청년B)</p> <p>“솔직히 말씀드리면 <b>관심이 있지는 않았어요</b>. 우리 학교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거는 따로 없었습니다.”(청년D)</p>
참여 후 인식	<p>“<b>다른 친구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어요</b>. 내가 이런 동아리 사업에 참여를 해봤는데 충남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지원해 준 것해주는 것들이 정말 많더라 그래서 너도 일자리를 준비하고 있어, 한번 참여해 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청년A)</p> <p>“저는 <b>자랑해요</b>.”(청년B)</p> <p>“<b>정말 추천하고 싶어요</b>. 특히 뭔가 일상에 지친 청년들이 꼭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청년C)</p> <p>“바리스타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b>진짜 꼭</b>”(청년D)</p>

### 3) 청년 정책사업 참여 계기와 만족도

심층 인터뷰에 참여한 청년들이 언급한 정책사업 참여 계기는 지인(학과 교수)에 의해 참여하거나 본인이 취업을 위해 일반 취업 관련 사이트를 검색하는 과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정책 사업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거나 관련이 없다고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에 참여한 것은 학과 교수님이나 주변 선배와 같이, 가까운 사이에서 전달된 정보나 추천에 의한 것이었다. 그리고 참가자 자신이 취업을 직접 준비하는 시기와 상황에서 마주한 정보에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년들의 정책참여 계기 중 지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전에 진행된 실무자 인터뷰에서도 언급되었다.

그리고 청년들은 현실적인 지원만이 아니라 정책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전문가를 통한 정보와 정서적 도움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청년들을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물질적인 필요들이 생겨나는데, 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취업 컨설팅, 청년학교 강의 프로그램과 같은 교육사업의 참여 역시 혜택으로서의 가치가 있었다. 전문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개인이 접근하기 어렵거나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참여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이 관심을 두고 있거나 정보가 필요한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고, 이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에 만족하였다. 그리고 전문 강사가 아니더라도, 해당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하는 다른 청년들과의 유대나 교류를 통해 정서적 도움을 받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	Quotes(참여자)
참여 계기	<p>“이제 <b>교수님 추천</b>으로 저희 학과에 몇 명의 친구들이 모였고 또 그 친구들을 대상으로 동아리 가입을 해보는 게 어떨겠느냐라고 제안을 먼저 하셔서”(청년A)</p> <p>“같이 활동하던 <b>언니 오빠들이</b> 그 프로그램이 있다. 소개를 시켜주셔서 ”(청년C)</p> <p>“(인터넷) <b>구인</b> 공고 앞에 지역 균형 발전 이렇게 나와져 있었고, 도에서 어떤 지원이 있고 또 도에서도 이제 기업에다가 지원해 주는구나 정도까지만 알았지 상세한 사실 내용을 모르는 상태였어요.”(청년B)</p> <p>“로스팅 관련해서 <b>인터넷을 찾아보다가</b> 광고가 충청일보에서. 이게 뉴스로 이렇게 뜨더라고요.”(청년D)</p>
혜택에 대한 만족	<p>- 물질적 혜택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데 사실 <b>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다 지원을 해주시고</b>, 저희가 이제 취업을 준비하다 보면 아무래도 자기소개서나 아니면 면접 같은 것들을 봐야 하는데 그거에서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청년A)</p> <p>“<b>청년 인센티브 1천만 원</b>. 분기별로 이제 3년 차에 지금이 되는 부분. 이것도 천만 원 나오는 거, 인센티브로 나오는 것도 마음에 들고 자기 개발비도 <b>연 60만 원 정도 지원</b>이 된다는 게 그래도 이제 지역에서 어떤 자리 잡는 데 대단할 건 아니지만 도움이 분명히 되는 건 맞다.”(청년B)</p> <p>- 정서적 혜택 “ 정말 많이 배우고 와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되게 유익했던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되게 (진로의) 다양한 방향이 있구나. 그래서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b>좀 위로를 받았던 것</b> 같아요.”(청년C)</p> <p>- 정보 및 전문가 “<b>강사님들을 실제로 이렇게 대면해서</b>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자문을 구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또 (제가 직접) 그런 <b>전문가들을 만나서</b> 하기에는 비용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청년A)</p> <p>“필요했던 것들 중에서도 좀 더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좀 물어준다 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b>궁금했던 걸음을 좀 해소시켜주는</b> 시간이 돼서 저한테 매우 유익했어요.”(청년D)</p>

#### 4) 현재 청년 정책사업의 소통 방식에 대한 평가

심층 인터뷰에 참여한 청년들은 현재의 청년 정책사업과 관련된 소통방식에 대해 다소 불편한 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먼저는 소통 채널의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인식하였다. 청년들은 본인의 취업과 관련하여 문제를 인식하였을 때 포털사이트나 취업과 관련된 전문 웹 페이지(예: 사람인, 잡코리아 등)를 이용하지만, 일자리나 취창업과 관련된 청년 정책사업과 관련된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언급하였다.

그리고 참여 청년들은 참여를 위해 신청 전에는 정책사업과 지원에 대한 세부 내용을 알지 못하였으나, 참여하는 과정과 실제 지원을 받으면서 구체적인 혜택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또, 청년들이 접할 수 있는 채널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가 세부적이지 않거나 재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실제 청년 정책사업을 참여하는 과정에서 실무자와의 직접적인 소통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말하였다.

주제	Quotes(참여자)
채널의 접근성	<p>“교수님도 이제 이 동아리 사업에 대해서 들은 게 처음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b>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게. 많이 없으셨는데</b> 그냥 이런 게 있다더라 하고서.”  (정책 관련 홈페이지) 동아리지원 이거 <b>사업을 참여하기 전에는 안 했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b>”(청년A)  “청년 정책과 일을 하고 이랬어 가지고. 페이지는 일단 다 알고 있어요. 일 때문에 알게 된 거고. <b>일이 아니었으면. 알았을 것 같지는 않아요.</b>”  “공고 앞에 지역 균형 발전 이렇게 나와져 있었고. 충남도에서 <b>어떤 지원을 해주고 있다까지만 파악했지.</b>”(청년B)  “(도청,군청 등 관공서 홈페이지) <b>많이 안 들어가 보게 되는 것 같아요</b>”(청년D)</p>
내용의 파악의 어려움	<p>“<b>좀 헷갈리는 부분은 있었어요. 이 사업이 이 사업인 건지</b> 그 어떤 정보를 얻고 싶어서 인터넷을 이 찾고 있는데 이게 이제 본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하는 건 아니면 여기서 따로 운영하고 카페나 이런 곳에 들어가야 하는 건지 그런 게 조금 헷갈렸어요.”(청년A)  “만약에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지원을 받고 싶다 하면은 안내 전화번호에 <b>전화를 해봤을 것 같아요.</b>”(청년B)  “내용을 깊게 아는 경우가 그 분야를 엄청 찾아보지 않는 이상. <b>사실 탁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아요.</b> 왜냐하면 여기도 이름. 보면 그냥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그냥 어디에나 다 있을 법한 그런 이름이잖아요.”(청년C)</p>

### 5) 개선 방향에 대한 아이디어

청년의 참여률을 높이기 위한 아이디어 중 홍보 방식과 관련하여, 청년들은 세부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친근하게 전달하는 방안과 정보 도구를 활용한 정책사업에 참여한 경우 그와 관련된 증명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언급하였다. 그리고 청년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은 지역은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언급하였다. 청년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은 군 단위 지역에서는 청년이 교육 프로그램을 신청하였지만, 신청 규모가 적어 취소되는 때도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면서, 상황이 비슷하고 거리가 가까운 지역과 연계하여 청년정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지역 간의 협동과 해당 프로그램의 참여 및 수혜 청년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설명하였다.

주제	Quotes(참여자)
홍보 방안	<p>“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야. 이거 좀 너무 나랑 거리감이 느껴지는 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조금 더 쉽고 재미있는 말들로 홍보를 할 때 좀 사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경험 해 본 사람들이 장점이나 이게 왜 좋은지 그런 것들을 주변에서 많이 알려줄 수 있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청년A)</p> <p>“홍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홍보가 안 돼서 그렇지. 알면은 더 많이 신청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스타그램 같은 데는 특성상 그냥 딱 이렇게 넘기면은 그 화면 딱 보이는 그런 건데 저는 약간 노출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업이 좀 뭐라 해야지. 너무 딱딱하게 느껴지지 않고, 핵심적인 단어 같은 거를 배치해서 좀 눈에 띄게 잘 내용을 담으면 ”(청년C)</p>
가시적 혜택	<p>“충남 지역에서 관련해서 조언을 받고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지역에서 만약에 취업을 했을 때 이런 수료증이나 어떤 증거 물품들을 보여드리면서 저희 지역에서 이런 활동 그러니까 이런 교육도 받았어요. 그게 인정이 된다면은 서로서로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청년B)</p> <p>“주변에서는 거의 수료증 안 나오는 활동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고 왜냐하면 시간 낭비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취업을 하기 전에는, 스펙이 된다면 더 훨씬 경쟁률이 치열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청년C)</p> <p>“스펙란을 좀 적는 게 있어요. 첨부할 수 있고 이게 증거 자료가 되는 제가 관련 과를 나오지 않았을 때 이리이러한 걸 들었고 이렇게 필요한데 지면에 적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증서를 주는 건. 정말 필요한”(청년D)</p>

#### 라. 심층 인터뷰 결과의 정리

본 연구는 현재 청년정책 사업에 대한 이해와 정성적 진단을 위해 실무자와 청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의 내용은 실무자와 청년의 관점에서 청년 문제와 현재 이행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인식, 정책의 소통과 참여 및 성과, 그리고 개선 방향에 대한 아이디어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주제별 실무자와 청년의 의견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표 3-9 참조>.

먼저, 실무자와 청년은 일자리와 관련된 문제를 공통으로 언급하였다. 실무자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도 하며, 구인기업이 바라는 개인의 역량과 구직청년이 기대하는 임금 수준 등 일자리에 대해 기대하는 수준이 다른 것으로 언급하였다. 청년은 본인의 전공이나 관심 분야와 관련된 일자리가 도내에 부족하다고 인

식하고 있었는데, 이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을 고려하기도 하지만 주거비나 생활비와 같은 현실적 문제 또한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3-9> 실무자 및 청년 인터뷰 결과 요약

주제	실무자	청년
문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질의 일자리 부족</li> <li>구인-구직자 간 기대수준 차이</li> <li>청년 생활의 정서적 안정감 부족</li> <li>청년 인구의 부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내 일자리 선택에 대한 한계</li> <li>타 지역 생활의 현실적 문제 직면</li> </ul>
정책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년 문제를 복합적으로 고려한 지원정책 마련됨</li> <li>일자리 등 실질적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책에 대한 인지 낮음</li> <li>자신과의 관련성, 필요성 부족</li> </ul>
정책 소통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련 기관과의 소통</li> <li>대중매체(지역 신문 및 방송 활용)</li> <li>SNS 및 기관 홈페이지 활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기관 채널의 접근성 낮음</li> <li>참여 전 구체적 내용파악 어려움</li> </ul>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년기본조례 연령 적용</li> <li>실제 참여 연령은 20대가 많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인(학과교수, 선배, 친구 등)을 통해 참여 신청</li> <li>구인구직 전문사이트를 통해 인지</li> </ul>
성과 및 만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량·정성적 평가</li> <li>목표 인원 달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제적 혜택과 전문가를 통한 교육 등에 만족도 높음</li> <li>만족도 높음, 주변 지인 추천의향 있음</li> </ul>
개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성적 평가 강화</li> <li>지역 상황에 맞는 탄력적 운영</li> <li>정책 도구별 균형있는 참여 유도</li> <li>청년 맞춤형 홍보방안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체적이고 직관적인 내용의 홍보 필요</li> <li>수료증과 같은 가시적 혜택(스펙)</li> </ul>

정책에 대한 인식은 실무자와 청년 간 다르게 인식하였다. 실무자는 청년정책 사업이 일자리 등 복합적 문제를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청년은 청년정책에 대해 알지 못했거나 본인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관련성이 낮거나 필요성이 없다고 인식하였다. 이는 현재 진행되는 정책소통 방식과 이에 대한 청년의 평가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청년정책에 대해 실무자들의 소통은 일자리진흥원, 대학 내 진로취업센터 등의 관련 기관과 소통하거나 지역 신문 및 라디오 같은 대중매체, 그리고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와 SNS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청년은 해당 매체나 채널을 잘 이용하지 않아 청년정책을 접할 기회가 부족하여 정책을 인지하는 정도가 낮을 수 있다. 또한, 심층 인터뷰에 참여한 청년들은 지인이나 일자리와 관련된 전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청년정책의 존재를

인식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참가 신청을 한 후 참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음을 언급하였다.

정책의 성과와 관련하여서 실무자는 실행과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는 하지만 향후 발전을 위해서는 정성적 평가도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청년의 관점에서는 실제 도움을 받게 되면 혜택에 대한 만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추천을 할 만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청년정책은 정량·정성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량적인 측면에서, 실무자는 청년 정책 사업 중에서 지원비와 같이 물질적인 혜택이 제공되는 정책사업에 대해서 청년들의 빠른 반응과 높은 신청률을 보이지만 강의나 컨설팅과 같은 교육 중심의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수혜대상자인 청년의 반응률이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실제 컨설팅이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은 전문가를 직접 만나고, 기대보다 높은 수준의 내용에 대해 만족함을 표현하였다.

실무자와 청년이 공통으로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으로 꼽은 것은 정책 홍보에 대한 부분이 있었다. 실무자는 현재의 홍보 방식이 청년에게 전달되거나 관심을 끄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주로 접하는 채널이나 콘텐츠 형식을 고려한 현실적이면서 효과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청년들 또한 평소 주로 이용하는 SNS를 통해 청년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들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를 요구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실무자와 청년은 교육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을 때, 이에 대한 명문화된 수료증, 확인증 등이 제공되는 것을 하나의 아이디어로 제시하였다.

실무자와 정책대상자인 청년과의 심층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현재의 청년정책 사업 진행 과정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진단해 볼 수 있었다. 먼저는, 청년정책에 대한 홍보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도내 청년들이 직면한 일자리나 교육, 주거 등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청년정책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청년이 취업을 포함하여 자신과 관련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자원(source)으로써 청년정책과 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채널을 떠올리지 못하는 것은 청년정책의 장기적 활성화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또한, 청년정책을 접하고 인식하게 되었을 때 청년이 해당 사업이 자신과 관련이 높거나 필요한 혜택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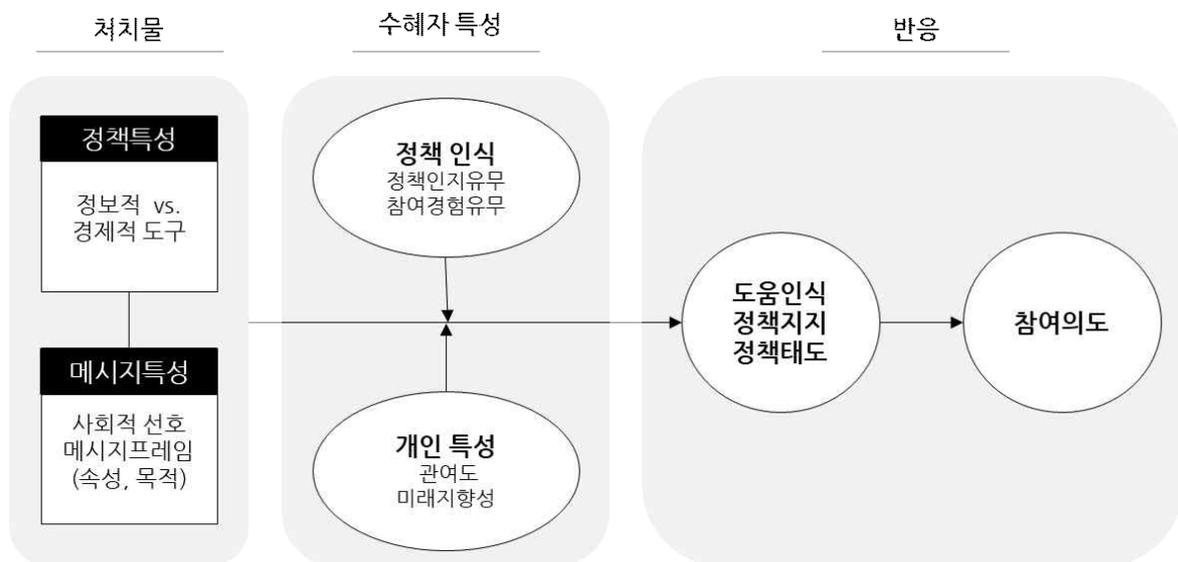
그리고 청년정책 사업 중 경제적 혜택 이외의 사업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교육 프로그램과 같이 경제적 혜택이 제공되지 않는 청년정책 사업에 실제 참여한 청년들의 만족 수준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즉, 청년들이 교육 프로그램과 같은 정보적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에 관심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행되는 청년정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적 상황을 바탕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그 방안이 마련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바탕으로 그 규모가 정해지는 측면이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정책사업의 내용을 개편하거나 적용되는 혜택(유인: incentive)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확대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혜대상자인 청년들의 신청률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 방식에 메시지 프레임의 변화를 두는 등의 행동경제학 관점의 전략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에 따르는 온라인 실험 조사를 시행하였다.

# 제4장 온라인 조사

## 1. 연구 방법

본 온라인 조사는 충남지역 청년의 정책 참여도와 활용도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제안된 방안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청년들의 정책에 대한 인지 정도와 청년정책에 대한 체감도를 파악하고 청년들의 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충남 청년지원정책에 대한 참여와 관련된 반응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림 4-1> 연구 모형

### 가. 실험설계 및 피험자

본 실험은 국내 전국 단위의 패널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조사회사를 통해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피험자는 전문조사에 등록된 패널로서, 총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실험에 참여한 피험자들은 총 6개의 메시지 중 한 가지에 무작위 할당(random assignment)되었다. 그리고 정책에 대한 인식과 심리특성, 그리고 정책에 대한 태도와 참여의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실험설계는 정책수단 2유형(경제 도구와 정보 도구) X 메시지 프레

입 3유형(사회적 선호, 속성-현재, 목적-미래)의 집단 간 요인설계를 사용하였다. 본 온라인 조사에서 제시된 정책수단은 경제적 도구와 정보적 도구로 선정하였다. 이는 앞서 문헌 연구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정책수단은 그 특성에 따라 여러 기준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Salamon (2002)과 Vedung(1998)이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강제성을 바탕으로 청년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금전적 지원을 포함한 경제적 도구와 교육 중심의 정보적 도구를 선정하였다. 또한, 실무자 및 수혜 청년이 참여한 심층 인터뷰 과정에서 두 도구에 따른 정책에 대한 태도나 참여 반응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금전적 지원을 명시한 경제적 도구와 교육 프로그램 중심의 정보적 도구를 정책 관련 실험 자극물에 포함하였다.

그리고 메시지 프레임은 행동경제학 연구와 정책 및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효과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프레임링(framing effect) 이론을 기반하였다. 프레임링 이론은 같은 대상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수용자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선호 프레임, 속성-목적 프레임, 시간 프레임(현재-미래) 프레임을 고려하였다. 사회적 선호 프레임은 기술적 규범(descriptive norms)에 기반한 것으로 다른 사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정보(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건을 재사용하고 있다’)를 제공하여 행동을 유도하는 것이다. 속성/목적 프레임은 제품/서비스의 물리적 속성의 부정적인 측면 혹은 긍정적인 측면 제시하는 것이며(예: 요구르트 100% 무지방 or 지방 0%, 햄버거 패티: 소고기 75% 살코기 vs. 소고기의 25% 지방 등), 목적 프레임은 행위 또는 채택 혹은 비채택이 목표 성취에 초래할 수 있는 긍정·부정적 결과를 제시하는 것(예: 건강검진을 했을 때의 긍정적 결과, 건강검진을 하지 않았을 때의 부정적 결과)이다. 시간 프레임(Temporal orientation)은 현재(present)의 단기적 이익을 제시하거나 미래(future)의 장기적 이익(long-term benefits/well-being)을 강조하는 것이다. 해석수준 이론(Construal Level Theory)에서는 속성 프레임은 현재 프레임과, 목적 프레임은 미래와 연결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Kees, Burton, & Tangari, 2010; Mogilner, Aaker, & Pennington, 2008; Pennington & Roese,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는 선호 프레임, 속성-현재 프레임, 목적-미래 프레임을 선정하여 실험 처치물에 적용하였다<표 4-1 참조>.

<표 4-1> 실험 처치물

메시지A: 경제&프레임1	취·창업카페 운영 프로그램을 통해 <b>2020년 370명이 활동비</b> 를 지원받았습니다. 청년 커뮤니티를 통하여 <b>2020년 650명이 소규모 청년 동아리 활동비</b> 를 지원받았습니다.
메시지B: 정보&프레임1	찾아가는 일자리 버스를 통하여 <b>2020년 370명이 진로 및 취업 관련 상담</b> 을 지원받았습니다. 청년학교를 통하여 <b>2020년 650명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b> 하였습니다.
메시지C: 경제&프레임2	취·창업카페를 통하여 <b>취/창업 동아리 지원비75만원과 1:1전담 컨설팅, 취/창업 특강</b> 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커뮤니티를 통하여 <b>창업, 스터디, 봉사, 독서 등 다양한 동아리의 활동비100만원과 활동 컨설팅</b>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메시지D: 정보&프레임2	찾아가는 일자리 버스에서 <b>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컨설팅, 이미지 메이킹, AI를 활용한 취업진단, 1:1 구직 상담</b> 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학교에서 <b>바리스타, 심리상담사 자격증 관련 교육, 드론, 목공 등 다양한 자기개발 프로그램 교육</b> 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메시지E: 경제&프레임3	취·창업 카페 <b>활동비 지원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창업 및 취업과 관련된 역량</b> 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소규모 동아리 <b>활동비</b> 를 지원해주는 <b>청년커뮤니티 참여로 지역을 알게 되고 자립을 위한 기반</b> 을 다질 수 있습니다.
메시지F: 정보&프레임3	찾아가는 일자리 버스 <b>상담을 통하여 창업 및 취업과 관련된 역량</b> 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청년학교의 <b>교육프로그램 참여로 지역을 알게 되고 자립을 위한 기반</b> 을 다질 수 있습니다.

본 온라인 조사는 총 400명을 대상으로 하되, 크게 두 개의 표본으로 구성하였다. 표본1은 충남에 거주하고 있는 만19-29세의 청년으로 구성되었으며(160명), 표본2는 수도권 및 광역시도를 제외한 도 단위(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지역에 거주하는 만19-29세의 청년(240명)을 포함하였다. 표본2를 구성한 이유는 청년과 관련된 정책과 규모가 비슷한 충남 외 지역에 거주 청년의 정책 체감도를 파악하고 이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조사의 응답자는 만19-29세의 청년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가 충남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정책 중 청년의 실업과 고용 등 이와 관련된 일자리, 이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교육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다룬다는 점을 반영하였다. 그리고 전술한 바와 같이,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을 만19-34세로 규정하고 있으

나, 충남도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19세에서 39세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범위는 다소 차이가 있다. 다양한 연령층의 청년 인식을 파악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으나, 본 연구는 프레이밍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설계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험의 내적 타당성 확보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이에 따라 취업을 준비하거나 사회초년생의 연령대인 만 19-29세 청년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 4-2> 실험 처치물 유형 별 피험자 수

구분	정책수단 유형	메시지 프레임			합계
		사회적 선호	속성-현재	목적-미래	
표본1 (충남)	경제	27	27	28	82
	정보	28	29	27	84
	합	55	56	55	166
표본2 (충남 외)	경제	40	41	40	121
	정보	40	40	40	120
	합	80	81	80	241
총합		135	137	135	407

#### 나. 실험 절차

온라인 실험은 전술한 바와 같이 전국 단위의 패널을 보유한 전문조사회사를 통해 진행되었다. 온라인 조사의 피험자는 질문지와 실험처치물이 포함된 URL을 이메일로 전달받았다. 질문지는 피험자가 본 연구의 응답 대상으로 적절한지를 파악하기 위한 스크리닝 질문(screening questions)과 정책에 대한 인지와 정책 체감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예: 정책에 대한 관여도, 청년정책에 대한 인지 정도와 인지 경로, 참여 여부 등)을 포함하였다. 정책에 대한 인지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보조 단서가 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 참여 분야의 주요 사업 중 조사 표본에 포함된 충남 및 충남 외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과 유사성이 높은 사업명이 보조 단서로써 간략하게 제시되었다.

이어서 정책 실행과 관련된 실험 처치물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선호 프레임(프레임1), 속성 프레임(프레임2), 목적 프레임(프레임3)을 사용하였다.

속성 프레임의 경우, 다른 두 가지의 프레임 보다 정책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시된 메시지가 적절하게 처리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메시지 평가가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해석수준이론에서 적용되는 메시지의 구체성과 추상성을 평가하는 ‘구체적이다,’ ‘직접적이다,’ 총 2가지 문항을 활용하였다 (Aggarwal & Law, 2005). 메시지 프레임 실험 처치 조작체크 결과, 속성 프레임이 사회적 선호 및 목적 프레임 보다 더 구체적이고( $F(2,404) = 8.660, p < .001$ ) 직접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F(2,404) = 10.302, p < .001$ ) <표 4-3 참조>. 따라서 메시지 프레임의 처치가 타당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3> 메시지 프레임 실험 처치 조작체크 결과

항목	프레임	기술통계			평균 차이		F
		N	평균	표준편차	속성	목적	
제시된 메시지는 구체적이다	사회적 선호	135	3.96	1.437	-.511**	.119	8.660***
	속성	137	<b>4.47</b>	1.237		.630***	
	목적	135	3.84	1.304			
	합계	407	4.10	1.353			
제시된 메시지는 직접적이다	사회적 선호	135	4.39	1.288	-.425*	.267	10.302***
	속성	137	<b>4.82</b>	1.158		.692***	
	목적	135	4.13	1.352			
	합계	407	4.45	1.297			

\*  $p < .05$ , \*\*  $p < .01$ , \*\*\*  $p < .001$

피험자들은 6개의 실험 처치물 중 하나에 무작위적으로 노출되었으며, 해당 자극물을 충분히 본 후(대략 15초) 이어진 질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험 자극물에 대한 반응은 해당 정책에 대한 도움 인식 정도, 정책에 대한 태도와 참여의도 등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리적 특성으로 피험자들의 장기지향적 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 인구통계학적 질문들로 구성되었다.

응답의 불성실함과 편향성을 예방하기 위해, 피험자에게 전달된 온라인 질문에 역코딩 항목(reverse scored item)이 포함되었다. 또한, 피험자가 한꺼번에 다수의 응답 항목에 노출된 경우, 집중력이 저하되거나 피곤을 느끼게 되어 응답의 성실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질문지에 포함된 질문은 개념별로 구분되었으

며, 하나의 질문에 응답한 뒤에 다음 질문이 제시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제시되었다. 정책인지 및 참여 유무를 제외한 질문에 대한 응답은 응답자의 의견이나 신념, 태도를 측정하는 데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7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7점 ‘매우 그렇다’)가 대체로 사용되었다(Devellis, 2017). 그리고 모든 문항에 대한 응답이 완료되었을 때, 조사에 포함된 실험 처치물은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 다. 온라인 조사 질문지 항목

정책에 대한 인지와 정책 체감도는 정책을 알고 있는 정도와 참여 경험, 정책에 대한 관여 정도, 일반적인 정책에 대한 지지와 도움 인식 정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정책에 대한 인지 정도는 최정윤, 유두호, 장용성(2021) 연구에서 각 분야 정책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된 척도를 참고하여, 제시된 청년정책 프로그램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모른다,’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로 4점 척도 구성하였다. 일반적인 정책에 대한 관여도는 정책 결정 과정과 커뮤니케이션 요소의 관계에 관한 연구(정원준, 2017)에서 사용된 항목 중 ‘나와 연관성이 깊다고 생각한다,’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등 3개 항목을 사용하였다. 청년 정책에 대한 관여도는 Maheswaran & Heyers-Levy (1990)와 Grau & Folse (2007) 연구에서 사용된 ‘나에게 중요하다,’ ‘나에게 의미가 있다,’ ‘개인적으로 관련이 있다’ 등 3개 항목으로 질문하였다. 그리고 평상시 피험자가 갖는 정책에 대한 지지 정도는 강귀영과 윤영민(2021)의 연구에서 사용된 항목 중 다른 항목과 중복되지 않는 3개 항목(‘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책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책을 전반적으로 지지한다’)으로 측정하였다. 정책에 대한 도움인식은 기존 지각된 유용성 개념을 활용하여 ‘나에게 도움이 된다,’ ‘나에게 유용하다,’ (염동섭, 2016; Davis, 1989 등)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정책 실행과 관련된 실험처치물에 대한 피험자의 반응은 정책에 대한 태도, 정책 도움 인식 정도, 참여 의도, 정책의 지각된 거리감 변수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정책에 대한 태도는 ‘좋다/중요하다/긍정적이다/만족스럽다,’ (전승우, 이영화,

최영균, 2011) 총 4가지 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참여 의도는 Baek와 Reid(2013)의 연구에서 사용된 ‘나는 참여할 의사가 있다,’ ‘나는 주위 사람들에게 참여하라고 권유할 것이다’ 로 측정되었다. 정책에 대해 느껴지는 사회적·심리적 거리감은 ‘나에게 중요하게 느껴진다,’ ‘내가 참여하는 것은 나와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제시된 정책에 대해 친숙하게 느낀다,’ ‘제시된 정책을 가깝게 느낀다’ 를 사용하였다(김재휘, 김희연, 부수현, 2012; Trope & Liberman, 2010).

<표 4-4> 측정 항목 및 신뢰도

개념	측정항목	출처	내적일관성 (Cronbach'a)
정책 관여도	나와 연관성이 깊다고 생각한다.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정원준(2017)	.881
청년 정책 관여도	나에게 중요하다. 나에게 의미가 있다. 개인적으로 관련이 있다.	Maheswaran & Heyers-Levy, (1990), Grau & Folse(2007)	.931
정책 지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전반적으로 지지한다.	강귀영과 윤영민(2021)	.885
도움 인식	나에게 도움이 된다. 나에게 유용하다.	엄동섭 (2016) Davis (1989)	.944
정책 태도	좋다/중요하다/긍정적이다/만족스럽다	전승우, 이영화, 최영균 (2011)	.923
참여 의도	나는 참여할 의사가 있다. 나는 주위 사람들에게 참여하라고 권유할 것이다.	Baek & Reid(2013)	.864
거리감 인식	나에게 중요하게 느껴진다. 내가 참여하는 것은 나와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제시된 정책에 대해 친숙하게 느낀다. 제시된 정책을 가깝게 느낀다.	김재휘, 김희연, 부수현 (2012) Trope & Liberman (2010)	.915
장기 지향 성향	나는 장기적인 기간을 두고 계획을 세운다. 나는 끈기나 인내는 나에게 중요하다.	Bearden, Money & Nevins (2006)	.644

마지막으로 응답자의 심리적 특성 중 한 가지인 장기지향성향은 Bearden와 그 동료들의 연구(Bearden, Money & Nevins, 2006)에서 사용된 항목을 사용하였으며, ‘나는 장기적인 기간을 두고 계획을 세운다,’ ‘나는 미래의 성공을 위해 오늘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은 괜찮지 않다(역코딩 항목),’ ‘나는 끈기나 인내를 나에게 중요하다’ 등이 포함되었다. 신뢰도 분석 과정에서 ‘나는 미래의 성공을 위해 오늘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은 괜찮지 않다(역코딩 항목),’ 의 항목 신뢰도가 낮아 최종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 라. 응답자 특성

온라인 조사를 통하여 충남지역에 거주하는 만19-29세 청년 166명(표본1)과 충남 외 지역 거주 청년 241명(표본2), 총 407명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충남지역 응답자의 거주지 분포를 살펴보면, 천안시가 45.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뒤로 아산시를 포함한 시 단위 지역과 군 단위 지역 순으로 나타났다. 충남 외 지역(도 단위) 거주 청년 응답자 분포는 경남 29.5%, 전북 17.8%, 경북 16.6%, 충북 15.8%, 강원도 10.4%, 전남 10.0% 순으로 나타났다.

<표 4-5> 충남 응답자의 거주지

거주지(시)	인원(명)	비율(%)	거주지(군)	인원(명)	비율(%)
천안	75	45.2	홍성	6	3.6
아산	32	19.3	예산	5	3.0
당진	12	7.2	서천	3	1.8
서산	9	5.4	부여	2	1.2
논산	9	5.4	금산	1	.6
보령	7	4.2	태안	1	.6
공주	4	2.4	청양	0	0.0
계룡	0	0.0	-	-	-

그리고 전체 407명 응답자 중 남성은 202명(충남 81명, 충남 외 지역 121명), 여성은 205명(충남 85명, 충남 외 지역 120명) 이었다. 충남과 충남 외 지역 응답자의 성비 구성 차이는 없었다( $\chi^2 (N = 407, df = 1) = .078, p = .779$ ).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24.4세로, 지역으로 구분된 표본에 따라 연령 분포의 차이 또한 없었다( $\chi^2 (N = 407, df = 10) = 7.171, p = .709$ ). 충남과 충남 외 지역에서 온라인 조

사에 참여한 응답자 성별과 연령의 구성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응답자의 직업은 학생(전체 40.8%), 사무직(전체 20.9%)으로 주로 구성되었으며, 현재 취업 준비 중으로 응답한 대상은 19.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학력은 현재 4년제 대학을 재학(휴학) 중(전체 32.2%)이거나 졸업(전체 32.2%) 한 비율이 전체 64.4%를 차지하였으며, 고등학교 졸업자는 14.3%를 차지하였다.

<표 4-6> 응답자의 성비 및 연령 구성

구분		충남 (명, 전체 %)	충남 외 지역 (명, 전체 %)	합계
성별	남성	81 (19.9)	121 (29.7)	202 (49.6)
	여성	85 (20.9)	120 (29.5)	205 (50.4)
	합계	166 (40.8)	241 (59.2)	407 (100.0)
연령	19	10 (2.5)	17 (4.2)	27 (6.6)
	20	12 (2.9)	15 (3.7)	27 (6.6)
	21	12 (2.9)	14 (3.4)	26 (6.4)
	22	19 (4.7)	30 (7.4)	49 (12.0)
	23	16 (3.9)	19 (4.7)	35 (8.6)
	24	10 (2.5)	22 (5.4)	32 (7.9)
	25	16 (3.9)	27 (6.6)	43 (10.6)
	26	16 (3.9)	29 (7.1)	45 (11.1)
	27	16 (3.9)	27 (6.6)	43 (10.6)
	28	22 (5.4)	17 (4.2)	39 (9.6)
	29	17 (4.2)	24 (5.9)	41 (10.1)
	합계	166 (40.8)	241 (59.2)	407 (100.0)

## 2. 결과

### 가. 정책에 대한 인식

응답자들이 일반적인 정책과 청년정책에 대해 갖는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정책에 대한 관여도, 청년정책에 대한 관여도, 정책지지 정도와 정책의 도움 인식 정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매우 그렇다’)로 평가하였다. 대체로 응답자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적인 정책에 대한 관여도는 평균 4.75점(표준 편차 1.11)으로 다소 높은 편이었으며, 특

히 청년정책에 대한 관여도는 응답자 평균 5.26점(표준 편차 1.26)으로 다른 변인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그리고 응답자들은 제시된 정책을 대체로 지지하며(평균 4.99, 표준 편차 1.09), 도움이 되거나 유용한 것으로 평가하였다(평균 4.36, 표준 편차 1.49). 그리고 이러한 4가지 변인(정책 관여도, 청년정책 관여도, 정책지지, 도움 인식)에 대해 충남 및 충남 외 지역 응답자 간 차이가 없이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8 참조>.

<표 4-7> 정책 및 청년정책에 대한 태도

변인	N	평균	표준편차	검정 값 = 4	
				평균차	t (df = 406)
정책 관여도	407	4.75	1.11	0.75	13.57***
청년정책 관여도	407	5.26	1.26	1.26	20.28***
정책지지	407	4.99	1.09	0.99	18.38***
도움인식	407	4.36	1.49	0.36	4.82***

\*\*\*  $p < .001$

<표 4-8> 지역 간 정책 및 청년정책에 대한 태도 차이 비교

변인	지역	N	평균	표준편차	t (df = 405)
정책 관여도	충남	166	4.79	1.11	0.61 ( $p = .54$ )
	그 외 지역	241	4.72	1.11	
청년정책 관여도	충남	166	5.23	1.26	-0.39 ( $p = .69$ )
	그 외 지역	241	5.28	1.26	
정책지지	충남	166	4.88	1.01	-1.72 ( $p = .09$ )
	그 외 지역	241	5.07	1.13	
도움인식	충남	166	4.20	1.38	-1.77 ( $p = .08$ )
	그 외 지역	241	4.46	1.56	

#### 나. 정책에 대한 인지 정도

##### 1) 전체

다음으로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 참여 분야의 대표적인 사업이면서 충남 및

그 외의 도 단위 자치단체에서 실행하고 있는 청년정책 사업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인지도를 파악하였다. 제시된 5가지 청년정책 사업 각각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모른다’는 응답 빈도가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충남과 그 외 지역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4-9> 각 분야 청년정책에 대한 인지도

분야	지역	들어본 적 없다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모른다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전체	$\chi^2$ (df = 3)
일자리 :청년 일자리 확대	충남 (%)	6 (1.5)	68 (16.7)	79 (19.4)	13 (3.2)	166 (40.8)	0.698 $p = .874$
	타 지역 (%)	6 (1.5)	106 (26.0)	111 (27.3)	18 (4.4)	241 (59.2)	
	전체 (%)	12 (2.9)	174 (42.8)	190 (46.7)	31 (7.6)	407 (100)	
주거 :청년 주거 비용 경감	충남 (%)	17 (4.2)	62 (15.2)	74 (18.2)	13 (3.2)	166 (40.8)	4.886 $p = .180$
	타 지역 (%)	14 (3.4)	112 (27.5)	98 (24.1)	17 (4.2)	241 (59.2)	
	전체 (%)	31 (7.6)	174 (42.8)	172 (42.3)	30 (7.4)	407 (100)	
교육 :교육 -일자리 연계 강화	충남 (%)	20 (4.9)	82 (20.1)	54 (13.3)	10 (2.5)	166 (40.8)	0.388 $p = .943$
	타 지역 (%)	29 (7.1)	116 (28.5)	84 (20.6)	12 (2.9)	241 (59.2)	
	전체 (%)	49 (12.0)	198 (48.6)	138 (33.9)	22 (5.4)	407 (100)	
문화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충남 (%)	43 (10.6)	78 (19.2)	37 (9.1)	8 (2.0)	166 (40.8)	3.272 $p = .352$
	타 지역 (%)	81 (19.9)	99 (24.3)	53 (13.0)	8 (2.0)	241 (59.2)	
	전체 (%)	124 (30.5)	177 (43.5)	90 (22.1)	16 (3.9)	407 (100)	
참여 :청년 정책 추진기 반 마련 및 내실화	충남 (%)	49 (12.0)	67 (16.5)	39 (9.6)	11 (2.7)	166 (40.8)	6.111 $p = .106$
	타 지역 (%)	85 (20.9)	104 (25.6)	46 (11.3)	6 (1.5)	241 (59.2)	
	전체 (%)	134 (32.9)	171 (42.0)	85 (20.9)	17 (4.2)	407 (100)	

## 2) 충남

이와 더불어, 충남 거주 응답자에게는 충남도에서 이행 중인 일자리 및 교육 분야의 청년정책 사업 일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인지 정도를 파악하였다. 일자리 분야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과 충남형 지역균형발전 청년고용사업 및 충남 일자리 종합센터와 같이 다소 보편적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 청년활동가 육성 사업과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 없다’의 응답 비중이 50.0%와 58.4%로 높게 나타났다.

<표 4-10> 충남 청년정책에 대한 인지도(n = 166)

청년정책 사업	인원	들어본 적 없다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모른다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합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빈도	37	66	57	6	166
	%	22.3	<b>39.8</b>	34.3	3.6	100.0
충남형 지역균형발전 청년고용사업	빈도	47	74	39	6	166
	%	28.3	<b>44.6</b>	23.5	3.6	100.0
충남 희망이음 프로젝트	빈도	91	51	18	6	166
	%	<b>54.8</b>	30.7	10.8	3.6	100.0
충남 일자리 종합센터	빈도	38	65	51	12	166
	%	22.9	<b>39.2</b>	30.7	7.2	100.0
사회적경제 청년활동가 육성	빈도	83	59	18	6	166
	%	<b>50.0</b>	35.5	10.8	3.6	100.0
지역 착근형 청년프로그램	빈도	97	44	22	3	166
	%	<b>58.4</b>	26.5	13.3	1.8	100.0

제시된 6개 청년정책 사업 중 한 가지라도 인지한 응답자는 166명 중 140명 (88.0%)이었다. 충남도 청년정책 사업에 대한 인지 경로는 ‘대중매체’가 가장 높은 응답 빈도(45.0%)를 보였으며, 그 뒤로 온라인 채널(예: 블로그 및 카페, SNS 등)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 인지 경로는 지역 잡지를 언급하였다.

<표 4-11> 충남 청년정책에 대한 인지 경로(중복응답, n = 140)

인지 경로	빈도(명)	%
대중매체(신문, 라디오, TV)	63	45.0%
온라인상의 개인 블로그 및 카페, SNS	55	39.3%
도청 및 시/군청, 관련기관 홈페이지	47	33.6%
주변 지인(친구, 동료 등)	28	20.0%
홍보포스터(관공서, 대학 등)	27	19.3%
청년정책 관련 홈페이지	22	15.7%
옥외교통매체(버스, 지하철 등)	11	7.9%

다. 정책 참여경험 여부

1) 전체

청년정책의 주요 5가지 분야에 대한 응답자의 참여율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와 교육 분야의 청년정책 사업 참여율이 10.8%와 9.8%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충남 및 충남 외 지역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4-12> 청년정책 사업의 참여 여부

분야	지역	참여 경험 없음 (%)	참여 경험 있음 (%)	전체(%)	$\chi^2$ (df = 1)
일자리: 청년 일자리 확대	충남	153(37.6)	13(3.2)	166(40.8)	2.581 ( $p = .108$ )
	그 외 지역	210(51.6)	31(7.6)	241(59.2)	
	전체	363(89.2)	<b>44(10.8)</b>	407(100.0)	
주거: 청년주거 비용경감	충남	155(38.1)	11(2.7)	166(40.8)	0.269 ( $p = .604$ )
	그 외 지역	228(56.0)	13(3.2)	241(59.2)	
	전체	383(94.1)	24(5.9)	407(100.0)	
교육: 교육-일자리 연계강화	충남	150(36.9)	16(3.9)	166(40.8)	0.011 ( $p = .915$ )
	그 외 지역	217(53.3)	24(5.9)	241(59.2)	
	전체	367(90.2)	<b>40(9.8)</b>	407(100.0)	
문화: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충남	156(38.3)	10(2.5)	166(40.8)	0.008 ( $p = .928$ )
	그 외 지역	227(55.8)	14(3.4)	241(59.2)	
	전체	383(94.1)	24(5.9)	407(100.0)	
참여: 청년정책 추진 기반 마련 및 내실화	충남	161(39.6)	5(1.2)	166(40.8)	0.831 ( $p = .362$ )
	그 외 지역	237(58.2)	4(1.0)	241(59.2)	
	전체	398(97.8)	9(2.2)	407(100.0)	

## 2) 충남

충남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에게는 충청남도에서 이행되고 있는 청년정책 6가지를 제시하고 각 사업별로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것은 ‘충남 일자리 종합센터’ 이었으며, 응답자 166명 중 21명(12.7%)이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 외 사업에 대해서 이용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0명 이하(5% 내외)였다.

<표 4-13> 충남 청년정책의 참여 여부

정책	인원	없다	있다	합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빈도	157	9	166
	%	94.6	5.4	100.0
충남형 지역균형발전 청년고용사업	빈도	159	7	166
	%	95.8	4.2	100.0
충남 희망 이음 프로젝트	빈도	164	2	166
	%	98.8	1.2	100.0
충남 일자리 종합센터	빈도	145	<b>21</b>	166
	%	87.3	<b>12.7</b>	100.0
사회적경제 청년활동가육성	빈도	162	4	166
	%	97.6	2.4	100.0
지역 착근형 청년프로그램	빈도	159	7	166
	%	95.8	4.2	100.0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충청남도에서 이행 중인 청년정책 사업에 하나라도 참여한 응답자는 29명(17.5%)이며, 참여하지 않은 응답자는 137명(82.5%)이었다. 참여하지 않은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청년을 위한 정책프로그램을 몰라서’ (37.2%), ‘자격 조건에 맞지 않아서’ (29.9%),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24.8%) 라는 이유의 순서로 나타났다. ‘잘 몰라서’ 참여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높은 빈도를 보이니, 이는 본 조사의 응답자가 20대임을 고려하면 일자리나 주거에 대한 관심이나 필요성이 낮아 관련 정보를 찾거나 주의 깊게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표 4-14> 충남 청년정책의 참여하지 않은 이유(n = 137)

비참여 이유	빈도	퍼센트
청년을 위한 정책프로그램을 몰라서	51	37.2
자격 조건에 맞지 않아서	41	29.9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34	24.8
주변에 도움이 된 사례를 못 봐서	6	4.4
신청 방법이 어려워서	5	3.6
합계	137	100.0

라. 정책 도구, 메시지에 대한 효과

정책 도구 유형(경제 도구, 정보 도구)과 메시지 프레임에 따른 응답자들의 반응 차이를 살펴보았다. 응답자의 반응은 ‘지각된 거리감,’ ‘정책지지,’ ‘도움인식,’ ‘정책에 대한 태도,’ 그리고 ‘참여 의도’ 등으로 파악하였다. 각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값은 다음과 같으며, 충남 거주 응답자와 충남 외 거주 응답자 간의 점수 차이는 없었다<표 4-15 참조>.

<표 4-15> 응답자 반응에 대한 기술통계 및 지역 간 점수 차이 검증

변인	지역	N	평균	표준 편차	t
지각된 거리감	충남	166	3.70	1.23	-0.729 (p = .466)
	그 외 지역	241	3.79	1.36	
	전체	407	3.75	1.31	
도움인식	충남	166	4.39	1.07	-0.645 (p = .519)
	그 외 지역	241	4.46	1.31	
	전체	407	4.43	1.22	
정책지지	충남	166	3.71	1.27	-0.217 (p = .828)
	그 외 지역	241	3.74	1.49	
	전체	407	3.73	1.40	
정책태도	충남	166	4.30	1.09	0.112 (p = .911)
	그 외 지역	241	4.29	1.25	
	전체	407	4.29	1.18	
참여의도	충남	166	4.14	1.34	0.519 (p = .604)
	그 외 지역	241	4.06	1.47	
	전체	407	4.09	1.42	

1) 정책 도구 및 메시지 프레임과 개인특성 변수의 다변량 검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응답자의 반응 변수 간 상관관계가 높고<표 4-16 참조>,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인 정책에 대한 관여도, 청년정책에 대한 관여도, 장기지향 성향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다변량 공분산 검증(Multivariate Analysis of Covariance; MANC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정책 도구에 따른 응답자의 반응 변수(지각된 거리감, 도움인식, 정책지지, 정책태도, 참여의도)에 대한 주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메시지 프레임의 주 효과는 나타났다. 그리고 정책 도구 유형과 메시지 프레임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응답자의 개인특성 중 정책에 대한 관여도나 청년정책에 대한 관여도는 그 반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개인의 장기지향성은 제시된 정책의 도움인식과 참여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에서 정책 도구와 메시지 프레임 각각의 주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표 4-16> 응답자 반응 변수 간의 Pearson 상관계수

	지각된 거리감	도움인식	정책지지	정책태도	참여의도
지각된 거리감	1	.719**	.759**	.701**	.827**
도움인식		1	.639**	.817**	.714**
정책지지			1	.714**	.691**
정책태도				1	.666**
참여의도					1

\*\*  $p < .01$

<표 4-17> Wilks' Lambda 의 다변량 공분산 검증

효과	값	F	가설 자유도	오차 자유도	유의확률
절편	.760	24.880	5	394	.000
정책도구	.989	.899	5	394	.481
메시지 프레임	.909	3.866	10	788	.000
정책도구 X 메시지 프레임	.993	.293	10	788	.983
정책 관여도	.996	.329	5	394	.896
청년정책 관여도	.979	1.656	5	394	.144
장기지향성	.958	3.443	5	394	.005

<표 4-18> 다변량 공분산 검증의 개체 간 효과 검증

	소스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수정 모형	지각된거리감	23.205	8	2.901	1.718	.092
	도움인식	34.061	8	4.258	2.990	.003
	정책지지	43.726	8	5.466	2.874	.004
	정책태도	36.776	8	4.597	3.437	.001
	참여의도	41.281	8	5.160	2.659	.007
절편	지각된거리감	106.084	1	106.084	62.820	.000
	도움인식	126.615	1	126.615	88.920	.000
	정책지지	85.982	1	85.982	45.207	.000
	정책태도	159.577	1	159.577	119.324	.000
	참여의도	84.931	1	84.931	43.767	.000
정책 도구	지각된거리감	.445	1	.445	.264	.608
	도움인식	.010	1	.010	.007	.934
	정책지지	.083	1	.083	.044	.834
	정책태도	.508	1	.508	.380	.538
	참여의도	.710	1	.710	.366	.546
메시지 프레임	지각된거리감	12.365	2	6.182	3.661	.027
	도움인식	10.333	2	5.167	3.628	.027
	정책지지	26.296	2	13.148	6.913	.001
	정책태도	28.382	2	14.191	10.611	.000
	참여의도	8.691	2	4.346	2.239	.108

정책 도구X 메시지 프레임	지각된거리감	.065	2	.032	.019	.981
	도움인식	.958	2	.479	.337	.714
	정책지지	.232	2	.116	.061	.941
	정책태도	.013	2	.007	.005	.995
	참여의도	.215	2	.107	.055	.946
정책 관여도	지각된거리감	1.459	1	1.459	.864	.353
	도움인식	.123	1	.123	.086	.769
	정책지지	.236	1	.236	.124	.725
	정책태도	.450	1	.450	.336	.562
	참여의도	.489	1	.489	.252	.616
청년 정책 관여도	지각된거리감	.731	1	.731	.433	.511
	도움인식	5.231	1	5.231	3.674	.056
	정책지지	5.664	1	5.664	2.978	.085
	정책태도	2.347	1	2.347	1.755	.186
	참여의도	4.294	1	4.294	2.213	.138
미래 지향성	지각된거리감	2.566	1	2.566	1.520	.218
	도움인식	8.228	1	8.228	5.778	<b>.017</b>
	정책지지	3.328	1	3.328	1.750	.187
	정책태도	.813	1	.813	.608	.436
	참여의도	14.317	1	14.317	7.378	<b>.007</b>
오차	지각된거리감	672.100	398	1.689		
	도움인식	566.720	398	1.424		
	정책지지	756.978	398	1.902		
	정책태도	532.264	398	1.337		
	참여의도	772.327	398	1.941		
합계	지각된거리감	6431.875	407			
	도움인식	8596.889	407			
	정책지지	6451.250	407			
	정책태도	8065.688	407			
	참여의도	7637.250	407			
수정 합계	지각된거리감	695.305	406			
	도움인식	600.781	406			
	정책지지	800.704	406			
	정책태도	569.040	406			
	참여의도	813.608	406			

## 2) 정책 도구 및 메시지 프레임의 주 효과

온라인 조사에 포함된 실험자극물에는 정책 유형을 경제적 도구와 정보적 도구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전의 다변량공분산 분석 결과에서 살펴보았듯이, 제시된 정책도구가 경제적 도구 혹은 정보적 도구인지에 따라 지각된 거리감, 도움 인식, 정책지지, 정책에 대한 태도와 참여의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종속변수별 기술통계 값은 <표 4-19>와 같다. 이 결과는 정책의 수단이 현물성의 경제 도구이거나 교육 중심의 정보 도구에 따라 정책대상자인 청년들이 정책에 대해 갖는 태도와 참여의도 등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19> 정책도구 유형에 따른 응답자 반응 차이 검증

종속 변인	정책수단	N	평균	표준 편차	t
지각된 거리감	경제	203	3.72	1.35	-.629 (p = .590)
	정보	204	3.79	1.27	
도움 인식	경제	203	4.42	1.32	-.145 (p = .885)
	정보	204	4.44	1.10	
정책 지지	경제	203	3.71	1.48	-.204 (p = .839)
	정보	204	3.74	1.33	
정책 태도	경제	203	4.26	1.30	-.584 (p = .560)
	정보	204	4.33	1.06	
참여 의도	경제	203	4.13	1.47	-.511 (p = .610)
	정보	204	4.06	1.36	

한편, 실험 처치물 별로 다르게 제시된 메시지 프레임 유형(사회적 선호 프레임, 속성 프레임, 목적 프레임)에 따라 ‘참여의도’를 제외한 반응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점수 차이를 보였다. 먼저, 사회적 선호 혹은 목적 프레임일 때, 제시된 정책의 내용에 대해 응답자 본인과 얼마나 가깝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지각된 거리감’ 점수는 속성 프레임일 때의 점수(평균 4점, 표준 편차 1.24) 보다 낮았으며, 상대적으로 친숙하지 않거나 가깝지 않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F(1,2) = 3.578, p < .05$ ).

<표 4-20> 메시지 프레임에 따른 응답자 반응의 기술통계 및 분산분석 결과

변인	메시지 프레임	N	평균	표준 편차	F (df = 1,2)	평균 차이(LSD)	
						속성	목적
지각된 거리감	사회적 선호	135	3.63	1.31	3.578*	-.3686*	-.0074
	속성	137	4.00	1.24		.3612*	
	목적	135	3.64	1.34			
	합계	407	3.75	1.31			
도움 인식	사회적 선호	135	4.36	1.19	3.074*	-.2745	.0691
	속성	137	4.64	1.27		.3436*	
	목적	135	4.29	1.16			
	합계	407	4.43	1.22			
정책 지지	사회적 선호	135	3.43	1.41	6.368*	-.5996*	-.2852
	속성	137	4.03	1.38		.3144	
	목적	135	3.71	1.37			
	합계	407	3.73	1.40			
정책 태도	사회적 선호	135	4.00	1.16	10.221*	-.6296*	-.2463
	속성	137	4.63	1.13		.3833*	
	목적	135	4.24	1.19			
	합계	407	4.29	1.18			
참여 의도	사회적 선호	135	4.02	1.44	1.832 (p = .161)	-.2588	.0444
	속성	137	4.28	1.33		.3032	
	목적	135	3.98	1.46			
	합계	407	4.09	1.42			

\*  $p < .05$

그리고 제시된 정책이 응답자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도움인식’에 대해 응답자들은 대체로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전체 평균 4.43, 표준 편차 1.27). 특히, 응답자들은 속성 프레임일 때(평균 4.64, 표준 편차 1.27) 목적 프레임(평균 4.29, 표준 편차 1.16)보다 높은 점수의 도움 인식 정도를 나타냈다. 제시된 정책을 지지하는 정도(정책지지)는 전체 평균 3.73(표준 편차 1.40)으로 ‘보통이다(4점)’ 보다 낮아 응답자들이 다소 지지하지 않는 것( $t(406) = -3.936, p < .001$ )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3가지 메시지 프레임 중 속성 프레임일 때 정책지지 점수가 가장 높으며, 중립(4점 ‘보통이다’) 점수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 $t(136) = .248, p = .805$ ), 이는 속성 프레임일 때는 부정적인 태도를 갖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제시된 정책 태도에 있어서도 다른 두 가지 메시지 보다 속성 프레임일 때 가장 높은 점수(평균 4.63점, 표준 편차 1.13)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정책인지 및 참여 여부에 따른 반응 차이

온라인 조사 응답자 중 충남지역의 청년들이 이전에 정책에 대해 알고 있거나 참여한 경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반응(지각된 거리감, 도움 인식, 정책지지, 정책 태도, 참여 의도)의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들이 이전에 정책을 인지하고 있는지<표 4-21 참조> 혹은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표 4-22 참조> 없는지에 따른 반응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이전에 청년정책에 참여한 경험이 있을 때, 제시된 청년정책에 대해 자신과 가깝게 느끼는 지각된 거림감이 다소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경향을 보였다.

<표 4-21> 정책 사전 인지여부에 따른 반응 차이 (충남 N = 166)

종속변수	사전 정책 인지 여부	N	평균	표준편차	t	p
지각된 거리감	인지함	146	3.74	1.25	1.15	0.25
	인지하지 못함	20	3.40	1.09		
도움인식	인지함	146	3.76	1.30	1.45	0.15
	인지하지 못함	20	3.33	0.94		
정책지지	인지함	146	4.42	1.07	1.13	0.26
	인지하지 못함	20	4.13	1.02		
정책태도	인지함	146	4.34	1.10	1.31	0.19
	인지하지 못함	20	4.00	0.98		
참여의도	인지함	146	4.14	1.32	0.14	0.89
	인지하지 못함	20	4.10	1.50		

<표 4-22> 정책 사전 참여여부에 따른 반응 차이 (총남 N = 166)

종속변수	참여 경험 여부	N	평균	표준편차	t	p
지각된 거리감	유	29	4.09	1.31	1.89	0.06
	무	137	3.61	1.20		
도움인식	유	29	4.05	1.30	1.62	0.11
	무	137	3.64	1.25		
정책지지	유	29	4.60	1.11	1.18	0.24
	무	137	4.34	1.06		
정책태도	유	29	4.47	1.25	0.90	0.37
	무	137	4.26	1.06		
참여의도	유	29	4.41	1.28	1.22	0.22
	무	137	4.08	1.35		

#### 마. 반응 변수의 참여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

##### 1) 전체

참여 태도는 정책도구의 유형이나 메시지 프레임에 따른 직접적인 반응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의 효과는 인지, 태도, 행동의 순서로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Lavidge & Steiner, 1961), 정책과 관련된 효과 연구에서도 정책에 대한 태도나 정책지지 정도가 정책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Roberts et al., 1994; Eriksen & Fallan, 1996). 따라서 청년정책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예: 지각된 거리감, 도움인식, 정책지지, 정책 태도)이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참여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 파악을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각된 거리감, 도움인식, 정책 지지가 응답자의 참여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4,402) = 254.483, p < .001$ ). 특히, 지각된 거리감은 참여 의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크기가 .588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책에 대해 응답자들이 자신과 가깝게 인식할수록 참여 의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표 4-23> 참여 의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제공 합	자유도	평균 제공	F	R 제공
회귀 모형	583.266	4	145.816	254.483***	.717
잔차	230.342	402	.573		
합계	813.608	406			

\*\*\*  $p < .001$

<표 4-24> 지각된 거리감, 도움인식, 정책지지, 정책 태도의 상대적 영향력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169	.148		1.138	.256
지각된 거리감	.636	.050	<b>.588</b>	12.742	.000
도움인식	.273	.057	<b>.235</b>	4.759	.000
정책지지	.104	.045	<b>.103</b>	2.323	.021
정책태도	-.014	.061	-.011	-.224	.823

## 2) 메시지 프레임별 회귀분석 결과

메시지 프레임의 주 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메시지 프레임별 소비자 반응변수들이 참여의도 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먼저, 사회적 선호 프레임일 때에는 지각된 거리감 변인만이 ‘참여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속성 프레임일 때에는 지각된 거리감, 정책지지, 도움인식의 순서로 참여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목적 프레임일 때에는 지각된 거리감과 도움인식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긍정적인 참여의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5> 메시지 프레임별 참여 의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메시지 유형		제공합	자유도	평균 제공	F	R 제공
사회적 선호	회귀 모형	214.012	4	53.503	109.670***	.771
	잔차	63.421	130	.488		
	합계	277.433	134			
속성	회귀 모형	165.640	4	41.410	72.121***	.686
	잔차	75.791	132	.574		
	합계	241.431	136			
목적	회귀 모형	211.863	4	52.966	91.114***	.737
	잔차	75.570	130	.581		
	합계	287.433	134			

\*\*\*  $p < .001$

<표 4-26> 메시지 프레임별 소비자 반응변수의 상대적 영향력

메시지 유형	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사회적 선호	(상수)	.072	.238		.303	.762
	지각된거리감	.822	.080	.749	10.330	.000
	도움인식	.145	.086	.120	1.678	.096
	정책지지	-.061	.073	-.059	-0.830	.408
	정책태도	.136	.103	.109	1.325	.187
속성	(상수)	.534	.281		1.901	.059
	지각된거리감	.413	.094	.386	4.395	.000
	도움인식	.301	.100	.287	3.020	.003
	정책지지	.331	.078	.342	4.221	.000
	정책태도	-.138	.103	-.116	-1.329	.186
목적	(상수)	-.178	.258		-.688	.493
	지각된거리감	.548	.086	.503	6.357	.000
	도움인식	.553	.121	.439	4.569	.000
	정책지지	.106	.080	.099	1.330	.186
	정책태도	-.143	.123	-.116	-1.157	.249

행동경제학 관점에서 정책 유형과 메시지프레임 유형에 따른 응답자들의 반응을 살펴본 결과를 정리해보면, 응답자들은 정책 도구가 경제적 도구인지, 정보 도구인지에 따라 반응의 차이가 없었다. 반면, 메시지프레임 3가지 유형 중 정책프

로그래의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속성 프레임일 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제시된 정책이 응답자 자신과 관련성이 있거나 가깝게 느끼는 지각된 거리감이 정책사업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5장 결론

### 1.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충남 청년정책의 신청률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청년정책의 활성화와 청년정책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청년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필수 과제라 할 수 있다. 실효성 있는 충남지역 청년정책 운영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행동경제학 이론을 적용한 것은 본 연구의 차별점이라 할 수 있다. 공공정책에 행동경제학을 적용하는 것은 정책사업 혹은 정책 도구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실증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점과 강제성을 부여하거나 추가적인 유인(incentive) 없이 정책대상자들의 정책참여와 같은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세부 추진과제는 청년정책의 현황 파악과 현재 진행되는 청년정책에 대한 진단, 그리고 행동경제학 이론을 접목한 개선방안의 효과 검증을 포함하고 있다. 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문헌 연구와 심층 인터뷰, 온라인 조사가 진행되었다. 문헌 연구는 청년정책의 법적 근거가 되는 주요 법령, 정책 동향 관련 자료와 충남 청년의 사회적·경제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통계자료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정책의 효과에 대한 관련된 학술 연구와 공공정책 분야에서 진행된 행동경제학 연구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심층 인터뷰는 청년정책 사업의 실무자와 정책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실무자와 청년의 관점에서 청년 문제와 청년정책에 대한 인식, 실행 과정과 성과에 대한 평가, 개선 방향에 대한 아이디어 등을 이해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문조사회사를 통해 진행된 청년 대상의 온라인 조사는 청년정책에 대한 인식과 체감도 파악과 이전 과정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한 실험 연구를 포함하였다. 청년정책 참여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실제 정책에 적용해볼 수 있는 개선방안을 반영한 실험 처치물에 대한 응답자의 반응을 살펴봄으로써 제안된 개선방안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또한, 온라인 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청년이 청년정책에 참여할 의향을 갖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영향력 정도를 분석하였다.

문헌 연구의 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청년정책의 범위가 점차 확장되고 있다. 이는 청년을 규정하는 사회적 나이의 변화와 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청년정책 대상자인 청년을 정의하는 연령 범위는 사회와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오늘날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또한, 그동안 청년은 사회의 경제 활동을 담당하던 시민으로서 인식되었으나 오늘날 청년은 정부와 사회가 보호하고 지원해야 하는 시민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년정책은 일자리 중심에서 일자리를 포함한 교육, 주거, 복지, 사회 참여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정책의 성과는 사회경제적 환경과 정책대상자 개인의 정책 리터러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일자리 정책의 경우, 정책의 성패가 국가나 지역의 산업 및 경제 환경에 따라 결정될 수 있지만, 정책의 실효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내용, 실행 과정 전반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연구들이 제시되고 있다. 청년의 정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예: 청년들의 정책인지도가 낮으며, 청년정책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잘 몰라서’)등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책 실행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심층 인터뷰는 청년정책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와 청년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실무자와 청년의 관점에서 청년 문제와 현재 이행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고 정책의 소통과 참여 및 성과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실무자와 청년이 주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청년 문제는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이며, 일자리의 지역을 중심으로 거주지를 선택할 수 있어서 일자리와 주거 관련 문제는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실무자들은 이러한 청년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자리, 주거, 교육 등에 대한 정책들이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청년들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충남도에서 이행하고 있는 다양한 청년정책 사업에 대해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나, 청년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이 해당 프로그램을 인지하고 참여한 계기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그리고 청년정책의 성과적인 측면에서, 실무자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정책의 성과는 청년정책 사업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신청자 인원(수혜 청년의 인원)과 교육 프로그램 등은 참여자의 만족도를 바탕으로 성과 관리를 한다고 언급하였다. 청년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은 모두 프로그램 내용과 지원

받은 내용 등에 대해 만족함을 표현하였으며, 물질적인 지원이 아닌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도 전문 강사와 그 내용, 진행 과정 등에 상당히 만족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심층 인터뷰 내용을 종합해 보면, 현재 청년들이 직면한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은 현재 마련되어 있고, 실제 그 성과 역시 실무자와 청년의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청년정책 사업의 활성화와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정책에 대한 인지와 이해도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심층 인터뷰에 참여한 청년들은 자신이 청년정책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청년정책을 잘 모르기도 하며, 인지하였더라도 자신과의 관련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말하였다.

즉, 더 많고 다양한 청년이 정책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년의 정책 리터러시를 높일 필요가 있다. 문헌 연구에서 언급된, 정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이해하고 있는지와 관련된 정책 리터러시는 정책대상자의 정책 참여 과정(예: 인지 - 이해 - 참여 - 혜택 등)에서 첫 단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행동경제학적 이론과 전략을 적용하여 온라인 조사를 통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청년의 정책인지와 체감도를 파악하기 위한 온라인 조사에는 문헌 연구와 심층 인터뷰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도구의 유형(경제 도구 vs. 정보 도구)과 정책 내용을 제시하는 3가지의 메시지 프레임(사회적 준거 vs. 속성 vs. 목적)에 따른 정책대상자인 청년의 반응을 파악하는 실험을 포함하였다. 그 실험 결과, 정책 유형에 따라 청년정책 참여와 관련된 반응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정책의 구체적인 속성을 중심으로 제시한 메시지 프레임일 때가 그렇지 않을 때 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궁극적으로 청년정책 참여할 의도에는 제시된 정책이 자신과 얼마나 가깝거나 멀게 느끼는 정도를 의미하는 지각된 거리감이 주요하게 영향을 주었으며, 해당 정책을 자신과 가깝게 느낄수록 참여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분석 결과가 나타났다. 구체적인 속성을 제시한 메시지의 프레임 경우, 사회적 선호 혹은 목적 메시지 프레임보다 제시된 정책을 더 가깝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정책 사업의 청년 신청률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청년정책 사업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된 문헌 연구와 심층 인터뷰, 그리고 온라인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 번째, 청년정책 분야는 일자리와 구직과 관련된 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분야의 사업에서 점차 주거와 복지 등 청년의 생활 전반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방향 만이 아니라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아도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 이는 국내외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청년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청년정책 사업에 활용되는 정책 도구는 경제 도구인 직접적인 물질적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 중심의 정보 도구들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충남도에서 마련하고 이행하고 있는 청년정책 사업은 큰 방향에서는 타당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청년정책이 청년의 실생활에 적용이 되고, 안정적인 운영과 정책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책의 내용만이 아니라 실행과정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고령화나 지역사회 내 청년 인구 규모의 변화 따라 청년으로 규정하는 연령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청년은 다양한 구성원을 포함하고 있다. 예컨대, 충남도는 청년을 19세부터 39세로 정의하고 있지만, 충남 내 일부 지역(군 단위)에서는 45세로 정의하고 있다. 해당 연령 범위의 청년들은 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근로자, 정착농업 종사자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포함될 수 있다. 이에 각 구성원들 각자의 생애주기에 따라 직면하는 문제와 이에 대해 필요한 지원들이 다를 수 있다.

세 번째는 청년들이 정책사업에 참여를 위해서는 정책 리터러시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 효과에 대한 관련된 선행 연구, 기존에 실행된 충남도 내 청년정책의 인식조사 결과, 그리고 본 연구에서 진행된 심층 인터뷰와 온라인 조사에서 공통으로 제시되고 있는 문제점은 청년들의 정책 인지도가 낮다는 것이다. 정책대상자가 정책에 참여하게 되는 과정은 정책인지, 정책 내용의 이해, 상담, 참여, 정책수혜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즉, 전술한 바와 같이, 정책인지는 청년들의 정책 참여에 중요한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네 번째는 청년들이 청년정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유인(incentive)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실무자 관점에서는 경제적 지원이 포함된 청년정책 사업에 대한 청년의 반응이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와 온라인 조사의 결과를 고려해 보면, 경제적 정책 도구 혹은 정보적 정책 도구 여부에 따라 그 만족과 정책에 대한 태도 등에 있어

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책수혜 대상자인 청년들이 청년정책을 얼마나 본인과 관련이 있다고 느끼는지, 정책사업 참여를 통해 얻게 되는 혜택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등이 주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2.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

이상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현재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정책 참여를 위한 강제적, 물리적 유인책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는 도구로써 행동경제학 관점을 접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진행된 문헌 연구, 심층 인터뷰, 온라인 조사의 결과와 그 시사점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청년정책 사업을 청년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해당 구성원들에 따라 맞춤형화하여 정책지원 사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청년의 연령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다양한 구성원이 정책대상자로 포함되고 수혜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다양한 정책 분야의 수많은 과제를 나열식으로 제시하게 되면, 청년은 자신의 연령이나 생애주기에 맞는 지원 정책사업을 찾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지원 가능한 정책사업이 마련되어 있으나 청년은 정책사업이 나오는 관련 없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나열식으로 제시되는 정책을 통합하거나 결합하여 단순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일자리와 청년의 생애주기를 함께 고려하여, 구직과정에서의 필요한 취업 준비 및 직업교육 관련 정책사업, 취직과 근속을 위한 정책사업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소규모 군 단위에서 시행되는 청년정책 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청년의 지역정착을 목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은 지역 규모에 따라 개설 가능한 강좌의 수도 한정적이며, 신청한 인원의 수가 적어 개설이 취소되는 예도 있음을 파악하였다. 정책의 장기적 성과를 위해서는 청년정책 사업은 지속해서 운영되어야 하며, 청년의 참여기회를 박탈하지 않고 독려하여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규모가 작은 군 단위 프로그램을 이웃 지역과 결합하여 순환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앞서 해외 사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EU는 회원국에 속한 청년들이 유럽 내 다양한 국가의 교육이나 직업연수, 스

포츠 활동 등 청년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교환프로그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년이 주체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청년정책 사업의 목적과 지역 청년의 수요,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마련하여 충남형 교환프로그램 운영을 제안한다. 예를 들면, 지역 특화된 주소장(브루어리)이 있는 경우, 인근 지역 청년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대상의 지역을 개방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청년들의 정책 리터러시 수준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정책대상자의 정책 수용은 정책의 이해, 참여와 활용, 그리고 혜택 등의 순차적 단계를 따르게 된다. 이 과정에 따르면 정책의 이해가 정책 수용의 첫 관문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정책이해를 위해서는 현재 마련된 청년정책에 대한 인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충남도의 청년정책을 청년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채널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정책 실행 현장에서는 청년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지역 대중매체를 활용하거나 주요 관계 기관을 통하여 청년정책을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청년들의 접근성이 낮다. 청년들이 구직 및 취업 관련 교육, 주거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청년정책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심층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청년이 해당 시기의 과업(예: 취직, 경제적 독립, 주거 마련 등)을 수행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필요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자원(source)으로써 청년정책을 떠올리지 못하는 것은 청년정책의 장기적 활성화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층의 접근이 용이한 소셜 미디어(예: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와 같은 채널을 활용하여 청년과 청년정책의 접점을 효율적이고 타당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청년의 정책 리터러시 제고 차원에서 정책사업의 내용과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을 구체적이고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 실행 현장에서는 청년들의 현금성 지원사업에 대한 반응이 즉각적이기 때문에 정보 도구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보다 청년의 만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실제 정책사업에 참여한 청년은 현금성 지원 못지않게 정보 도구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이 높았다. 그리고 온라인 조사 결과에서도 정책 도구에 따른 청년 응답자의 반응 차이는 없었고 구체적인 속성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긍정적으로 반응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현금성 혜택의 경우, 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명

시되어 있어서, 청년들은 해당 정책프로그램을 더욱 쉽게 이해하고 지원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특히, 청년들의 정책사업에 대한 참여 의향은 해당 정책에 대해 인식하는 거리감이 가까울수록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거리감은 해당 정책이 자신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자신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와 같은 심리적 거리감뿐만 아니라 청년정책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거나 접할 수 있는 접점 등과 같은 물리적 거리감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년들에게 교육 프로그램 중 훈련이나 학습과정 등 이수에 대한 확인서를 제공하는 것은 지원 혜택을 보다 가시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예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것 같이, 청년들이 주로 접하는 소통 채널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에 청년정책 사업에 참여한 수혜 청년들의 후기를 자신의 소셜미디어 채널 등에 공유(예: 수료 인증샷, 참여 인증샷 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네 번째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은 청년정책 참여 후 과정에 대한 것이다. 정책의 성과는 현재 단기적 관점에서 청년정책 사업별 인원 수와 같은 정량적 지표로 관리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충남의 청년정책이 지역 청년 인구의 유지나 유입, 청년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과 같은 궁극적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성과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즉, 단기적인 청년정책의 신청률과 더불어 취업과 근속, 지역정착과 같은 장기적 관점에서의 성과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청년 삶의 양적 개선만이 아닌 질적 개선이 되었는지와 같은 정성적 진단, 진행 과정에서의 모니터링 등 다각적인 성과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성공사례를 확보하고 이를 정책소통에 활용한다면 정책사업의 선순환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강상목, 박은화 (2019). “인간심리의 경제학”, 법문사.
- 강귀영, 윤영민 (2021). 정책 관련 내러티브가 공중의 SNS 상 정보확산 행동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정책효능성을 중심으로. 한국광고홍보학보, 23(1), 140-186.
- 권남호. (2018). 넛지(Nudge)를 활용한 공공정책: 현황과 시사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김기현 (2017). 청년 정책의 현황 진단과 개선 방향.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기현 (2020). 청년정책 현황 진단 및 정책추진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김도형 (2018). 지방정부의 청년정책 만족도 및 필요도 분석. 도시행정학보, 31(4), 55-81.
- 김시백, 김수은, 이중섭, 장세길, 박가희 (2016). 전라북도 청년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 전략 연구. 전북연구원.
- 김양중, 송영현, 정희민 (2020). 2020 충남도정에 바란다③: 청년 일자리편. 충남연구원.
- 김이수 (2019). 촉매적 정책도구로서 넛지의 정책학적 함의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33(3), 157-178.
- 김종욱, 김형균, 김도관, 박경옥 (2018). 부산청년종합실태조사. 부산발전연구원.
- 김재휘, 김희연, 부수현(2012).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공공캠페인 커뮤니케이션 전략: 해석수준이론에 따른 메시지 구성과 미디어에 대한 사회적 거리를 중심으로
- 김진영, 신용덕 (2011). 행동경제학 모형과 그 정책적 응용에 관한 시론적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20(1), 1-27.
- 김형주, 연보라, 배정희. (2020).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V.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마정미 (2016). 소비자는 합리적인 존재인가: 행동경제학의 광고학 적용을 위한 개

- 념적 연구. 광고연구, 111(겨울), 101-131.
- 박경옥, 김종욱, 김미영. (2019). 부산청년정책 비전. 부산연구원.
- 박상근. (2016). 관광정책의 행동경제학적 접근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박영옥, 박상희 (2020). 심리학을 활용한 공공정책의 개발과 적용 방안.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9(1), 27-55.
- 박춘. (2019). 청년정책 과제 분류 및 주요 현안사업 도출. 충남연구원.
- 배순영. (2016). 행동경제학의 소비자정책 적용 사례 및 시사점: OECD 소비자정책 위원회에서 논의를 바탕으로. 소비자정책동향. 한국소비자원.
- 변금선, 김승연, 박민진, 이혜림. (2021). ‘2025 서울시 청년정책’ 비전과 전략. 서울연구원.
- 보도자료. (2020). “2020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2020.09.30.)
- 부기철 (2020).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정책개발 사례연구: 광주광역시 동구를 중심으로. 경영컨설팅연구, 20(2), 237-254.
- 서옥순, 김종욱. (2020). 부산지역 청년층 지역이동과 취업성과 분석. 부산연구원.
- 서옥순, 황영순, 손현일, 강민주. (2021). 부산지역 청년 취업실태 분석 및 고용확대 방안. 부산연구원.
- 서준교, 김용현, 이성근 (2017). 청년일자리정책의 취업 및 임금 효과분석. 한국정책연구, 17(4), 61-80.
- 성유지, 최재성 (2020). 청년고용정책 참여유형이 청년대졸자의 취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2(2), 145-171.
- 손영곤, 문관식, 정운재, 신일기 (2021). 부정적 기사 내용, 소비자 조절초점 성향, 메시지 소구방향의 조절초점 (불)일치성이 광고매력효과에 미치는 영향. 광고연구, (129), 241-278.
- 안기정, 김법식, 김승연, 이진학. (2018). 행동경제학의 정책활용방안. 서울연구원.
- 양혜원 (2010). 유인적 정책수단의 상대적 효과 분석.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37-67.
- 염동섭 (2016). 모바일 위치기반 광고에 대한 이용동기, 지각된 유용성, 광고 효과간 구조모형 분석. 한국심리학회지:소비자광고, 17(2), 271-293.
- 윤영석, 윤지웅 (2018). 기후변화 정책 리터러시(policy literacy) 영향 요인 분석.

- 사회과학연구, 44(3), 139-160.
- 이민정, 신동호, 김양중, 김종화, 송민정, 전춘복, 김영수 (2020). 청남형 일자리 추진전략 - 양극화 완화를 위한 상생·포용·도전의 일자리 전략. 충남연구원.
- 이상아, 이승윤 (2018). 지역고용정책은 청년실업 해소의 대안일 수 있는가?. 노동정책연구, 18(2), 27-59.
- 이수범, 김남이 (2013). 정책 이해도 및 관여도가 공중의 정책 태도, 정보탐색과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광고홍보학보, 15(3), 220-254.
- 이진용 (2010). 소비자행동 관련 분야의 행동론적 의사결정이론의 연구동향 고찰: 2000-2009년 국내 연구를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21(2), 193-236.
- 임형섭 (2016). 청년고용의 실태 분석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광주전남연구원.
- 전명숙 (2010). 각국의 지역 고용정책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국제노동브리프, 8(4), 1-4.
- 전영한 (2007). 정책도구의 다양성: 도구유형분류의 쟁점과 평가. 정부학연구, 13(4), 259-295.
- 정광호 (2008). 정책 리터러시(policy literacy) 함수 분석: 시민활동변인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46(4), 73-104.
- 정세정, 류진아 (2021).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의 쟁점과 제언: 서울시 사례를 통해. 보건복지 ISSUE & FOCU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세정, 연구책임자. (2020).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체계 개선방안연구. 서울특별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원준 (2017) 정책 결정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 요소가 정책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광고홍보학보, 19(3), 99-135.
- 정호용 (2020). 정책 수용 단계에 따른 청년세대의 인식 형성 분석. 한국정책과학회보, 24(3), 1-26.
- 최순중 (2019). 청년정책의 전망과 방향성에 대한 제언. 청소년학연구, 26(1), 253-273.
- 최정윤, 유두호, 장용성 (2021). 지능정보에 대한 인식이 정책 만족도와 정책인지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정책홍보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35(2), 217-246.

최하예, 황성수 (2018). 우리나라 청년정책의 정책수단 유형분석 연구. 한국정책과 학회보, 22(3), 75-99.

충청남도. (2020). 2020 충청남도 청년통계 보고서.

허만형 (2021). 광역자치단체의 청년실업 영향요인 분석: 청년지원 프로그램 도입의 실효성 분석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31(1), 23-49.

Aggarwal, P., & Law, S. (2005). Role of relationship norms in processing brand informa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2(3), 453-464.

Beak, T. H., & Reid, L. N. (2013). The interplay of mood and regulatory focus in influencing altruistic behavior. *Psychology & Marketing*, 30(8), 635-646.

Bhargava, S. & Loewenstein, G. (2015). Behavioral Economics and Public Policy 102: Beyond Nudging.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 Proceeding 2015*, 105(5), 396-401.

Brown, J. J., & Reingen, P. H.(1987). Social ties and Word-of-Mouth referral Behavior.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4(Dec.), 350~362

Chetty, R. (2015). Behavioral Economics and Public Policy: A Pragmatic Perspective.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 Proceeding 2015*, 105(5), 1-33.

Kahneman, D. (2003). Maps of bounded rationality: Psychology for behavioral economics. *American Economic review*, 93(5), 1449-1475.

Lavidge, R. J., & Steiner, G. A. (1961). A model for predictive measurements of advertising effectiveness. *Journal of Marketing*, 25(6), 59-62.

McCracken, G. D. (1988). *The long interview*. Newbury Park, California: SAGE.

OECD (2013). *Local Strategies for Youth Employment(Learning from practice)*.

Strauss, A. L., & Corbin, J. M.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2nd ed.)*.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연합뉴스. (2021). “ ‘청년 지원정책 대상 49세까지 넓혀야’ 전남도-시군 논의” (2021년 9월 3일).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3072300054?input=1179m>

## <부록 1> 실무자 대상 심층 인터뷰 가이드

### 1. Rapporting & Understanding Interviewee' s background

#### A. Interviewer 및 본 연구에 대한 간략한 소개

: 본 연구 및 연구자에 대한 소개, 참석 감사

- 본 연구는 정책 자체의 타당성을 평가하기보다 프로그램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실행 과정과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고 이후 개선점을 도출하는 데 필요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것

(인터뷰 진행 방식 및 녹음 동의, 보고서 작성시 익명성 보장 안내)

#### B. Interviewee에 대한 탐색

: 업무 경력, 현재, 소속 팀, 담당하고 있는 주요 업무

청년정책/청년지원 사업에서 일한 경력 및 주요 담당

### 2. Contextual Exploration

#### A. 전반적인 청년 정책(일자리/교육) 관련 문제에 대한 인식

- 사회의 관점에서 청년 실업이나 고용, 취업, 취업 준비 등 문제인식

#### B. 정책실행에 대한 인식

- 정책의 필요성과 현재 담당하는 정책들의 적절성/도움 정도에 대한 인식 / 그 이유

- 전반적인 실행 과정을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그 이유?

그렇지 않다면/그 이유?

### 3: The Focus: 정책별 현재 상황 파악(심층 인터뷰 대상자별 과제 구분)

\* 담당자별 과제 세부 내용 및 실행

#### A. 6개 과제 중 각 담당하고 있는 과제의 추진 목적, 내용, 진행 절차, 수혜 대상 등(상세 설명 요청)

- 추진 과정의 효율성은 어떻다고 생각이 되는지  
. 유관기관과의 연계성, 상황변화의 대응 등

#### B. 해당 과제에 대한 대외 커뮤니케이션 방안

- 정책 알림, 신청자 연락, 진행 과정, 등 구체적 단계별로 커뮤니케이션(정책 홍보 및 소통)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 신청 접수 과정에서 수혜 대상자들이 해당 정책을 알게 된 주요 경로는 어디라고 인식이 되는지? 주요 경로는 ?

- 전반적 커뮤니케이션, 각 과정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그 이유?  
그렇지 않다면/그 이유?

- 실행 과정에서 접수된 민원 사항은 있었는지? 그 내용?

C. 각 과제의 성과 달성도(신청률, 참여 완료-교육, 훈련, 취업 등)

- 진행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이 진행되는지?

- 과제의 성과는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는지?

- 각 과제의 신청률과 완료률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수준인지? 그 이유?

\* 지원 현황, 참여율, 참여 경로 등 실행 후 평가 내용

- 신청률이 낮다면, 그 이유?

4: The Focus: 현재 정책에 대한 장·단점 파악

\* 담당 과제별 파악, A-C 차원에서의 각 장/단점 질문하기

A. 계획 수립의 적절성

- 충남도 청년 일자리 현황에의 적절성

- 정책의 목적과 실행 내용 및 수혜 대상과의 매칭

B. 시행 과정의 적절성

- 추진 부서 및 관련 부서와의 협업의 연계성

- 추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변화 대응

- 명확한 수혜 대상에 대한 정의와 수혜 대상자와의 정책 소통 실행

C. 성과 평가의 적절성

- 현재 정책 실행의 평가 지표, 그 적절성

- 성과의 목표 달성도

D. 실무자 관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우선 과제 및 해결 방안 아이디어

5. Closing

전체적인 내용 요약 및 정리

추가 인터뷰 혹은 내용 확인을 위한 관계 유지(협조 요청 및 이메일 확보)

#. 다른 대상 연결 요청 : 기존 이상의 팀장에게 전달 받은 명단 기준

주요 대도시 및 소도시, 대학생은 대학(천안/서산 등)

. 보조사업자(교육)

. 수혜 청년(지역주도형 3명, 일자리 잡카페 2명)

## <부록 2> 청년 대상 심층 인터뷰 가이드

### 1. Rapporting & Understanding Interviewee' s background

#### A. Interviewer 및 본 연구에 대한 간략한 소개

: 본 연구 및 연구자에 대한 소개(필요시, 관련 문서 제시)

(인터뷰 진행 방식 및 녹음 동의, 보고서 작성시 익명성 보장 안내)

#### B. Interviewee에 대한 탐색 - 심층 인터뷰 대상자로서의 가치 확인

- 나이/학년, 전공/교육수준, 관심 취업 분야, 현재 취업 관련 상태
- 거주 지역(현재, 가장 오래 거주한 이유, 향후 거주지 계획)
- 국가 정책에 대한 관심도(사업 참여 전/후)
- 청년 정책에 대한 관심도(사업 참여 전/후)

### 2. Contextual Exploration

#### A. 취업 관련 정보 취득 행태

- 취업: 현재 일자리 선택 이유
- 미취업: (이직/준비) 선택하지 않은 이유
- 구직활동 및 취업 준비 방법 및 내용 : 일자리 탐색 방법

#### B. 취업 관련 어려운 점 및 필요 사항

- 일자리를 구하는데 경험했던 어려움

### 3: The Focus: 정책별 현재 상황 파악

- 사전 청년 관련 정책 인지 여부 및 관심 정책 유무/이유

*\* 6개 각 과제별 확인(해당 과제에 대해 인지 여부 파악,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

#### A. 인지 및 태도

- 정책 인지 여부
- 6개 과제 호감 순위/그 이유 (Best / Worst 택 1)
- 자신에게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 것/ 그렇지 않는 것/그 이유

#### B. 참여(불참) 동기 및 이유

- 참여하게 된 동기나 이유는 무엇
- 참여 전 사업 내용에 대한 평가
- 참여 후 만족도: 장점/단점

- (미참가 정책) *참가하지 않은* 혹은 *참가하지 않을 것 같은* 이유는 무엇

C. 현재 정책 소통 방식에 대한 평가

- 정부 소통 채널 이용 경험 유무/최근 경험

- 현재 과제별 정책 소통 방식에 대한 평가

. 접근성: 소통 채널(예: 홈페이지, SNS 채널, 직업 관련 전문 사이트 등)

. 이해도: 소통 내용(정책 실행 내용에 대한 설명, 진행 절차 설명 등)

. 용이성: 수혜 신청 요청을 한다고 했을 때의 절차의 간편성

D. 본 인터뷰에서 소개된 정책의 내용 및 소통 방식 등에 대한 아이디어

**4. Closing**

전체적인 내용 요약 및 정리

추가 인터뷰 혹은 내용 확인을 위한 관계 유지(가능하다면, 협조 요청 및 이메일 확보)

### <부록 3> 온라인 조사 설문지

#### 조사1 - 충남 지역 청년 대상 설문 조사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 본 조사에 참여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사는 청년정책에 대한 인지 및 정책 체감도와 정책과 관련된 태도와 관련된 조사입니다.

본 조사를 통해 수집된 내용은 무기명으로 기록되며, 연구를 위한 통계분석에만 사용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질문 내용을 숙지하시고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어 연구에 도움을 주시는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Part1. 선정 질문

SQ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1) 남성
- 2) 여성

SQ2. 귀하의 연령은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만 ( )세

만 19~29세만 참여 가능, 그 외 모두 선정 탈락

SQ3. 현재 거주하고 계신 곳은 어디인가요?

- 1) 서울 및 수도권(경기도, 인천) -> 선정 탈락
- 2)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및 특별자치도(제주, 세종) -> 선정 탈락
- 3) 강원도 -> 선정 탈락
- 4) 충청북도 -> 선정 탈락
- 5) 충청남도
- 6) 전라북도 -> 선정 탈락
- 7) 전라남도 -> 선정 탈락
- 8) 경상북도 -> 선정 탈락
- 9) 경상남도 -> 선정 탈락

#### [기타 사항]

- 그룹 6개는 랜덤으로 배치
- 척도 문항은 모두 SteybyStep 적용
- 척도 표 왼쪽 상단에 있는 문장/단어는 모두 노출

**Part2. 본 질문 - 정책에 대한 사전 인지 및 경험(정책체감도)**

**A1-1. 정책에 대한 개인적 관심 정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에 제시되는 문장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에 대해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가장 강한 부정(전혀 그렇지 않다)은 1점, 가장 강한 긍정(매우 그렇다)은 7점입니다.**

	(일반적인) 정책은	전혀 그렇지 않다			중립이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7
1	나와 연관성이 깊다고 생각한다							
2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3	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A1-2. 정책에 대한 개인적 관심 정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에 제시되는 문장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에 대해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가장 강한 부정(전혀 그렇지 않다)은 1점, 가장 강한 긍정(매우 그렇다)은 7점입니다.**

	청년과 관련된 정책은	전혀 그렇지 않다			중립이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7
1	나에게 중요하다							
2	나에게 의미가 있다							
3	개인적으로 관련이 있다							

**A2-1. 청년을 위한 정책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를 대답해주시시오.**

	나는 _____ 정책을 알고 있다	들어본 적 없다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모른다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1	2	3	4
1	일자리분야: 청년 일자리 확대				
2	주거: 청년 주거 비용 경감				
3	교육: 교육 - 일자리 연계 강화				
4	문화: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5	참여: 청년정책추진기반 마련 및 내실화				

**A2-2. 청년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를 대답해주시시오.**

	나는 _____ 정책을 알고 있다	들어본 적 없다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모른다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1	2	3	4
1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2	충남형 지역균형발전 청년고용사업				
3	충남 희망 이음 프로젝트				
4	충남 일자리 종합센터				

5	사회적경제 청년활동가 육성				
6	지역 착근형 청년프로그램				

→ A2-2에서 모든 항목에 1로 응답한 경우 A4로 이동, 하나라도 2~4로 응답한 경우 A3로 이동

**A3. 앞에서 들어보거나 알고 있다고 응답하신 정책을 접한 곳은 어디입니까? 최대 2개까지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도청 및 시/군청, 관련기관 홈페이지
- 2) 청년정책 관련 홈페이지
- 3) 대중매체(신문, 라디오, TV)
- 4) 옥외교통매체(버스, 지하철 등)
- 5) 홍보포스터(관광서, 대학 등)
- 6) 온라인상의 개인 블로그 및 카페, SNS
- 7) 주변 지인(친구, 동료 등)
- 8) 기타( )

**A4-1. 청년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 여부를 대답해주시시오.**

		없다	있다
		1	2
1	일자리분야: 청년 일자리 확대		
2	주거: 청년 주거 비용 경감		
3	교육: 교육 - 일자리 연계 강화		
4	문화: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5	참여: 청년정책추진기반 마련 및 내실화		

**A4-2. 청년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 여부를 대답해주시시오.**

		없다	있다
		1	2
1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2	충남형 지역균형발전 청년고용사업		
3	충남 희망 이음 프로젝트		
4	충남 일자리 종합센터		
5	사회적경제 청년활동가 육성		
6	지역 착근형 청년프로그램		

→ A4-2에서 모든 항목에 1로 응답한 경우 A5로 이동, 하나라도 2로 응답한 경우 A6로 이동

**A5. 귀하가 청년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활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청년을 위한 정책프로그램을 몰라서
- 2) 신청 방법이 어려워서
- 3) 자격 조건에 맞지 않아서
- 4) 주변에 도움이 된 사례를 못 봐서
- 5)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 6) 기타( )

A6. 다음에 제시되는 문장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에 대해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가장 강한 부정(전혀 그렇지 않다)은 1점, 가장 강한 긍정(매우 그렇다)은 7점입니다.

	나는 청년과 관련된 정책이(을)	전혀 그렇지 않다			중립이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7
1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3	전반적으로 지지한다							
4	나에게 도움이 된다							
5	나에게 유용하다							

**Part3. 정책 실행 관련 메시지 반응**

[별도INFO] [최소 채류 시간: 15초]

< 다음은 청년 정책에 대한 안내입니다. >

그룹	구분	내용
1	메시지A: 경제&프레임1	취·창업카페 운영 프로그램을 통해 <u>2020년 370명이 활동비</u> 를 지원받았습니다.  청년 커뮤니티를 통하여 <u>2020년 650명이 소규모 청년 동아리 활동비</u> 를 지원받았습니다.
2	메시지B: 정보&프레임1	찾아가는 일자리 버스를 통하여 <u>2020년 370명이 진로 및 취업관련 상담</u> 을 지원받았습니다.  청년학교를 통하여 <u>2020년 650명이 교육 프로그램</u> 에 참여하였습니다.
3	메시지C: 경제&프레임2	취·창업카페를 통하여 <u>취/창업 동아리 지원비75만원과 1:1전담 컨설팅, 취/창업 특강</u> 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커뮤니티를 통하여 <u>창업, 스테디, 봉사, 독서 등 다양한 동아리의 활동비100만원과 활동 컨설팅</u>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메시지D: 정보&프레임2	찾아가는 일자리 버스에서 <u>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컨설팅, 이미지 메이킹, AI를 활용한 취업진단, 1:1 구직 상담</u> 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학교에서 <u>바리스타, 심리상담사 자격증 관련 교육, 드론, 목공 등 다양한 자기개발 프로그램 교육</u> 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메시지E: 경제&프레임3	취·창업 카페 <u>활동비 지원프로그램 참여</u> 를 통해 <u>창업 및 취업과 관련된 역량을 향상</u> 시킬 수 있습니다.  소규모 동아리 <u>활동비</u> 를 지원해주는 청년커뮤니티 참여로 <u>지역을 알게 되고 자립을 위한 기반</u> 을 다질 수 있습니다.
6	메시지F: 정보&프레임3	찾아가는 일자리 버스 <u>상담</u> 을 통하여 <u>창업 및 취업과 관련된 역량을 향상</u> 시킬 수 있습니다.  청년학교의 <u>교육프로그램 참여</u> 로 <u>지역을 알게 되고 자립을 위한 기반</u> 을 다질 수 있습니다.

[앞서 제시된 청년 정책 계속 B1~B2-3까지 쇼카드 형태로 계속 노출]

**B1. 앞에서 보신 청년정책관련 메시지를 떠올려 보시고, 이를 염두에 두시고 응답해 주세요.**

다음에 제시되는 문장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에 대해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가장 강한 부정(전혀 그렇지 않다)은 1점, 가장 강한 긍정(매우 그렇다)은 7점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중립 이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7
1	제시된 메시지는 구체적이다							
2	제시된 메시지는 직접적이다							
3	제시된 메시지는 일반적이다							

**B2-1. 앞에서 보신 청년정책관련 메시지를 떠올려 보시고, 이를 염두에 두시고 응답해 주세요.**

다음에 제시되는 문장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에 대해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가장 강한 부정(전혀 그렇지 않다)은 1점, 가장 강한 긍정(매우 그렇다)은 7점입니다.

	내가 본 정책이(은)	전혀 그렇지 않다			중립 이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7
1	좋다							
2	중요하다							
3	긍정적이다							
4	만족스럽다							
5	나에게 도움이 된다							
6	나에게 유용하다							

**B2-2. 앞에서 보신 청년정책관련 메시지를 떠올려 보시고, 이를 염두에 두시고 응답해 주세요.**

다음에 제시되는 문장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에 대해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가장 강한 부정(전혀 그렇지 않다)은 1점, 가장 강한 긍정(매우 그렇다)은 7점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중립 이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7
1	나는 참여할 의사가 있다							
2	나는 주위 사람들에게 참여하라고 권유 할 것이다							
3	나에게 중요하게 느껴진다							
4	내가 참여하는 것은 나와 관련성이 있다 고 생각한다							
5	제시된 정책에 대해 친숙하게 느낀다							
6	제시된 정책을 가깝게 느낀다							

**B2-3. 앞에서 보신 청년정책관련 메시지를 떠올려 보시고, 이를 옆두에 두시고 응답해 주세요.**

다음에 제시되는 문장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에 대해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가장 강한 부정(전혀 그렇지 않다)은 1점, 가장 강한 긍정(매우 그렇다)은 7점입니다.

	내가 본 정책이	전혀 그렇지 않다			중립이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7
1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3	전반적으로 지지한다							

**Part4. 개인 성향 및 인구통계학적 질문**

**C1. 개인 성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에 제시되는 문장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에 대해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가장 강한 부정(전혀 그렇지 않다)은 1점, 가장 강한 긍정(매우 그렇다)은 7점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중립이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7
1	나는 장기적인 기간을 두고 계획을 세운다							
2	나는 미래의 성공을 위해 오늘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은 괜찮지 않다							
3	나는 끈기나 인내는 나에게 중요하다							

**Part5. 인구통계학적 질문**

**DQ1. 귀하의 충청남도 내 거주지역은 어디입니까?**

- |        |         |         |
|--------|---------|---------|
| 1) 천안시 | 6) 논산시  | 11) 서천군 |
| 2) 공주시 | 7) 계룡시  | 12) 청양군 |
| 3) 보령시 | 8) 당진시  | 13) 홍성군 |
| 4) 아산시 | 9) 금산군  | 14) 예산군 |
| 5) 서산시 | 10) 부여군 | 15) 태안군 |

**DQ2. 귀하의 현재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1) 고등학교 재학
- 2) 고등학교 졸업
- 3) 2-3년제 대학 재학(휴학)
- 4) 2-3년제 대학 졸업
- 5) 4년제 대학 재학(휴학)

